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항병덕 · 김규륜 · 이교덕 · 조한범 · 고재홍 · 김갑식 · 박정란
신상진 · 신석호 · 이상숙 · 이석기 · 이원웅 · 이지수 · 임을출
장익관 · 정상돈 · 정은미 · 최용환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 광운대학교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 김규륜 · 이교덕 · 조한범 · 고재홍 · 김갑식 · 박정란
신상진 · 신석호 · 이상숙 · 이석기 · 이원웅 · 이지수 · 임을출
장익관 · 정상돈 · 정은미 · 최용환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 광운대학교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1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디자인 (주) 에원기획(02-745-8090)
인 쇄 처 (주) 에원기획(02-745-8090)

ISBN 978-89-8479-644-7 93340
가 격 ₩13,5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1-14-02	북한정보체계 개선방안(상)	통일연구원
11-14-03	북한정보체계 개선방안(중)	통일연구원
11-14-04	북한정보체계 개선방안(하)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황 병 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 규 룬 선임연구위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조 한 법 선임연구위원 고 재 흥 책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 갑 식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 정 란 협력연구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 석 호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이 상 숙 객원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이 원 응 교수 (관동대) 정 상 둔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정 은 미 HK연구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 용 환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광운대학교	신 상 진 교수
	산업연구원	이 석 기 연구위원
		이 지 수 부교수 (명지대) 임 을 출 연구조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 의 관 대우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제6장 국제사회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I. 연구 목적	3
II.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5
1. 미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5
2.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8
3. 한·미 북한정보 협력방안	47
III.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58
1.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58
2.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72
3. 한·중 북한정보 협력방안	87
IV.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00
1. 일본의 국외정보관리체계	100
2.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14
3. 한·일 북한정보 협력방안	131
V.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44
1.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144
2.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58
3. 한·러 북한정보 협력방안	173
VI.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83
1. 국제기구와 북한정보의 문제	18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 김규륜 · 이교덕 · 조한범 · 고재홍 · 김갑식 · 박정란 · 신상진 · 신석호
이상숙 · 이석기 · 이원웅 · 이지수 · 임을출 · 장의관 · 정상돈 · 정은미 · 최용환

2. 국제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88
3. 북한정보교류 협력방안	214
VII. 소 결	223
제장 결론	231
I. 북한정보관리체계의 비교분석	233
1. 분야별 비교분석	233
2. 국제협력 비교분석	246
II.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52
1. 정부 부문	252
2. 민간 부문	260
3.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263
4. 정보공개제도와 비밀보호제도의 조화	266
5. 국제적 대북정보협력 강화	270
참고문헌	27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3

표차례

〈표 6-1〉 미국정보공동체의 북한정보활동 현황 및 평가	46
〈표 6-2〉 한·미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57
〈표 6-3〉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현황과 평가	86
〈표 6-4〉 한·중 북한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99
〈표 6-5〉 일본정보의 장단점	137
〈표 6-6〉 한·일 북한정보협력 개선방안	143
〈표 6-7〉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특징	157
〈표 6-8〉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정보활동 특징	169
〈표 6-9〉 러시아의 북핵정보판단	172
〈표 6-10〉 한·러 학술교류활동 현황	178
〈표 6-11〉 한·러 북한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182
〈표 6-12〉 미국 주요 NGO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189
〈표 6-13〉 유럽 주요 NGO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196
〈표 6-14〉 주요 UN기구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202
〈표 6-15〉 정보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216
〈표 6-16〉 정보교류협력 목표와 개선방안	223
〈표 7-1〉 분야별 북한정보관리체계 비교	244

그림차례

〈그림 6-1〉 미국정보공동체의 구성	12
〈그림 6-2〉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61
〈그림 6-3〉 중국의 북한정보수집체계	76
〈그림 6-4〉 일본대외정보기관	103
〈그림 6-5〉 합동정보회의	104
〈그림 6-6〉 러시아연방의 정보기관체계	149
〈그림 6-7〉 러시아 해외정보부 조직표	152
〈그림 6-8〉 대북지원국가 및 지원 규모	187
〈그림 7-1〉 정보관리비서관의 기능	253
〈그림 7-2〉 북한정보공동체의 다층 Net-working	264

(상)

제장 서론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배경
3. 연구추진 방향
4. 연구추진 방법

제2장 북한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 틀

I.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방향

1. 문제제기
2. 정보관리체계의 이론과 북한정보
3. 정보관리체계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4. 북한정보관리체계 발전의 대안모색
5.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의 추진 방향
6. 소 결

II.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 교훈과 시사점

1. 문제제기
2. 서독의 동독연구와 대동독정책
3.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

4.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5.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의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북한 사회·문화·인권 정보관리 체계 개선방안

I. 연구 목적

II. 북한 사회·문화 정보 분야

1. 북한 사회·문화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2. 사례 분석
3. 개선방안

III. 북한인권정보 분야

1. 북한인권정보의 특성
2. 북한인권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사례분석
4. 북한인권정보 개선방안
5. 국제 주체
6. 정보관리체계

IV. 소 결

최근 발간자료 안내

(중)

제4장 북한 정치·군사·외교·대남 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I. 연구 목적
- II.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1. 북한정치정보의 특성
 - 2. 기존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3.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III.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1. 북한외교정보의 특성
 - 2. 기존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3.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IV.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1.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특성
 - 2. 기존 북한군사정보체계의 문제점
 - 3.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V.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1. 북한대남정책의 특성
 - 2. 기존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3.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VI. 소 결

제5장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I.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1. 문제제기
 - 2.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 II. 소 결
 - 1. 북한경제정보의 특성과 경제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2.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최근 발간자료 안내

제6장

국제사회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제6장 국제사회의 북한정보 관리체계와 협력방안

I. 연구 목적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북한은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극도의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탈북자문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중·러와의 경제협력문제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북한문제를 원만하게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북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고도의 폐쇄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광범위한 대북 정보망을 가동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수집·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결정·추진해 왔으나 대외개방도가 극히 낮은 북한 내부 실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북한정보를 한국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 실상을 분석·평가할 때 오독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 또한 존재한다.

북한문제가 국제문제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북한정보 수집·분석 과정에서 북한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위성과 정찰기를 통한 북한 내부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기술정보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북한과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을 통해 북한 내부 고급정보수집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북한정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정보관리체계에 나름대로 장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도 북한문제 및 북한정보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내부 식량사정과 탈북자문제 및 보건위생문제 등과 관련한 실상에 대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와 세계식량기구(WFP) 등 비정부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 탈북자의 탈출행렬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한문제에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 국제사회와 한국 사이의 기존 북한정보의 협력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와 북한정보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미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세계 패권의 유지와 자국의 안보에 있다. 소련이 해체된 이래 견제세력의 부재 속에서 미국은 독자적 패권체제를 존속시키며 자신의 패권에 대한 향후의 도전 세력에 대응하는 전략 안을 준비해 왔다. 패권체제를 보유한 국가가 자신의 독점적 위상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미국 역시 자신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의 저지를 최우선적 외교·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해 왔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체제에 대한 미래의 도전 세력으로 광대한 영토와 인구 및 경제력을 보유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³⁹⁴⁾

세계 패권의 유지와 더불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구성하는 목표는 자국안보라고 할 수 있다. 9·11테러사건 이후 위협받는 국토 안보에 대한 제고된 관심은 반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선순위 과제로 부상시켰다. 전이하는 시대적 안보환경에 맞추어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계획 또한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³⁹⁵⁾ 21세기 그물 중심 전쟁론에 근거하여 과거의 주둔군 형태의 군사배치에서 신속기동군 형태로 군의 조직 및 운용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는 작업은 이미 미국의 국외주둔군 재배치계획(Ground Penetrating Reader: 이하 GPR) 등을 통해 실행되어 왔다.

394) 중국이 무한한 잠재력의 보유를 넘어서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경쟁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하고 있다. Christopher P. Twomey, "Missing Strategic opportunity in U.S. China Policy Since 9·11: Grasping Tactical Success,"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2007), p. 55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3) 참조.

395) Michael O'Hanlon, *Unfinished Business: U.S. overseas Military Presence in the 21st Century*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http://www.brookings.edu/~media/Files/rc/reports/2008/06_military_ohanlon/06_military_ohanlon.pdf>.

한편, 미국의 대 동북아 외교·안보정책은 세계 패권과 국가안보라는 최우선적 외교 목표에 맞추어 생성된 지역 전략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³⁹⁶⁾ 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정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련의 영향력을 대체할 힘의 부재 현상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확대하고는 있으나 미국을 견제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세력으로 머물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관계의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힘에 편승하여 자국의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EU 국가들보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우호 및 협력관계는 아직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도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적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자 적 동맹체계(hub-and-spoke system)는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대응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도 양자 적 동맹체계를 큰 구조적 수정 없이 활용하고 있다.³⁹⁷⁾ 미·일동맹과 한·일동맹을 양 축으로 하는 미국의 양자 적 동맹체계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양자 적 동맹체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차원적 국가 간 상호연계성의 진전 추세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며 양자적 동맹체계가 이러한 추세로부터 점차 도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맹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성하는 미국과 관련 동맹국 간의 노력이 나뉠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자 적 동맹체계의 본원적 배타성이 동북아 국가 간의 유동적 관계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396) David C. Kang,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 No. 2 (Summer 2006), p. 25.

397) John G. Ikenberry and Jitsuo Tsuchiyama, "Between Balance of Power and Community: The Futur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2, Issue. 1 (2002), pp. 69-94.

미국의 대동북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기조는 현존 세력 구도의 안정적 존속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세력 구도의 전이는 그 결과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명백히 기여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것이다.³⁹⁸⁾ 중국의 경제적 부상, 한반도의 남북 간 적대적 대립관계 이완 등의 변수들도 동북아 지역 세력 구도의 안정성은 비교적 적절히 확보됐으며 이러한 안정성 유지의 핵심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의 변수들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한 변화의 충격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간 한·미동맹의 긴장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동북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면서 이 지역의 정치·외교적 안정화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과는 긴밀한 유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대를 존속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더불어 미국이 동아시아정치에서 유력한 지역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군사·외교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 등 동북아의 위기변수들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을 견제하는 데 유용한 전략적 보루로서 기능한다.

한·미관계는 해방 이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에 상응하여 꾸준한 조정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두 국가 간의 막대한 국력차이에 기인한 비대칭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대미 의존형 한반도 방위동맹체제는 한·미관계의 비대칭적 구도 형성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서, 한국은 이러한 비대칭적 구도하에서 외교적 자주성과 평등성의 확보 보다는 자국안보의 보장 및 경제 발전이라는 실리 추구에 주력해 왔다.

398) DAVID C. KANG "AMERICA'S ROLE IN THE WORLD: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한·미관계의 비대칭적 구도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근본적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었지만, 재조정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며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하자는 목소리는 양국 간 동맹의 이완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유발하며 양국 사회에서 정책적 논란을 초래하여 왔다.³⁹⁹⁾

근년의 한·미관계를 재조명해 볼 때 한·미 양국 간에는 탈냉전 및 9·11 테러사건 이후 세계 안보상황의 변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설정,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 및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 증대, 한·중 간의 경제적 밀착,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갈등 요소의 일정 부분은 전이하는 시대 및 지역환경의 불가피한 소산물이며, 갈등적 요소들은 앞으로도 그 모습을 계속 바꿔가며 한·미관계의 전이를 도모할 것이다.

나. 미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외교·안보정책의 신중한 결정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국외정보의 축적과 분석은 필수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수행하는 국외 정보활동의 주된 목적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결정과 실행을 후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순위에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고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도 강화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정보공동체가 우선적 관심이 있는 대상국이 중국과 북한으로 설정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오늘날의 초점이 미국의 미래 패권 도전 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안보의 위협요인인 북한의 핵문제 관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보공동체는

399) Ted Galen Carpenter and Douglas Bandow,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그 주된 관심을 두 국가의 군사, 정치 및 외교 분야에 집중해 왔지만 경제, 사회, 문화, 인권, 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서도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냉전 시기 동안 미국정보공동체의 활동은 소련에 편중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의 군사 부문은 미국정보공동체의 핵심 관심사였으며 이 분야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확립에 미국정보공동체는 주력하였다. 미국정보공동체가 대소련 정보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정확성과 통찰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⁴⁰⁰⁾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어렵게 확보된 대소련 정보 역량은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 소련과 동구권 국가에 집중되었던 미국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을 꾀한다.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이슬람 지역에 대한 정보 수요의 증대와 이를 위한 정보활동의 강화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보 대상의 다양화와 더불어 비군사 영역의 급격한 정보수요 증대 및 이에 따른 정보 역량의 분산, 정보활동의 합법적·도덕적 의무요건 강화 등 현대 정보환경의 변화들은 미국정보공동체에 여러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 이후 미국정보공동체의 정보실패를 유도하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북한이나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처럼 폐쇄적 성격을 지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정보공동체의 정보 역량은 지속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미국정보공동체가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자아낸다.

동북아 지역은 대중국 정보에 대한 미국정보공동체의 관심 제고가 현저한 특성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미국정보공동체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

400) Richard Kerr, et al., "Issues for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Collection and Analysis on Iraq," *The Center of Intelligence*, Vol. 49, No. 3 (April 15, 2007), <http://www.cia.gov/library/center-for-the-study-of-intelligence/csi-publications/csi-studies/studies/vol49no3/html_files/Collection_Analysis_Iraq_5.htm>.

를 꾸준히 증대시켜 왔고 중국 내 정보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국의 개방화 등에 힘입어 대중 정보 역량의 현저한 개선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쇄적 사회인 북한의 경우 미국정보공동체는 여전히 신뢰 있는 정보를 공급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기술 정보(TECHnical INTelligence: 이하 TECHINT)에 편중적인 정보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안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21세기 정보혁명이 가져온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혁명은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현대국가와 사회에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정보혁명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간극이 제거되면서 국가들 간 혹은 개인들 간에는 상호 긴밀한 연계구조(inter connectivity)가 형성되고 있다.⁴⁰¹⁾ 이러한 연계구조는 접촉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하는 한편 접촉의 시간과 비용을 축소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가령 공동의 안보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호연계된 행위 주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협력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연계구조가 악용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 또한 지대하다. 긴밀한 연계구조하에서 국가나 개인들은 타국이나 타인들로부터의 위협에 손쉽게 노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안보위협 주체와 위협대상을 잇는 위협의 연계구조 또한 긴밀화되고 직접화되는 상황에서 현대국가와 개인들은 안보위협 채널의 대규모 확대와 위협 비용의 현저한 감소로부터 유발되는 증대된 안보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위협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할 수 있는 상호취약성의 환경이 폭넓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사회가 산출하는 정보의 풍요현상은 필연적으로 안보위협 자원 및 수단의 팽창을 가져온 된다. 우선 핵무기 및 생물학 무기의 제조 지식이나 테러의 수행을 위한 정보 등 과거에는 손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401) Frank Webster (eds.),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2nd ed* (Londe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정보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들에게까지 접근이 허용되면서 결국 보편화되고 대중화될 위험성을 높게 된다. 이는 결국 21세기 정보사회가 위협 주체의 수를 확대하고, 위협수단, 방식 및 영역까지 다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안보위협의 전달경로가 상호연계성을 통해 네트워크화되면서 과거에는 고립되었던 개인들에게까지 연장되고, 안보위협의 가용수단이 권력의 새로운 원천인 정보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국가와 개인이 처한 안보위협은 내적 성격과 형태상의 심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정치·외교·군사 등 전통적 안보 영역에 제한되었던 과거의 안보관심이 경제·사회·문화·생태·보건 등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안보위협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대거 부상하여 안보정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셋째, 안보위협의 수단과 방식에서도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안보위협 대응의 질적·양적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21세기 안보위협의 다면적 변화에 직면하여 현대국가와 사회는 기존의 안보시각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국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임무를 받고 있다. 물론 국가가 모든 안보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안보자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 할 것이다. 과도한 안보대응책은 국민의 자유 제한 등 상응하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안보 분야의 적정 역할과 관련한 논란은 진중한 숙고를 요구한다. 아울러 21세기의 시대 환경은 안보 이슈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상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한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 왔다. 현재 미국정보공동체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독자적으로나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17개의 공식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규모를 갖춘 비공식 정보조직 또한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의 정확한 수와 조직목표 및 업무활동 등은 비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다.⁴⁰²⁾ 이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대통령, NSC, 국무부, 국방성 및 기타 관련 부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타 국가, 조직 및 개인들의 적대적 대미 행위, 타국의 정보활동, 국제 테러 및 마약활동 등을 포함한다. <그림 6-1>은 현재의 미국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17개의 공식적 연방조직들을 도표화 한다.

<그림 6-1> 미국정보공동체의 구성



출처: <<http://www.intelligence.gov/about-the-intelligence-community/structure>>.

402) 미국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는 통상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17개의 대표적 정보기관들의 협력적 구성체를 지칭한다. 하지만 미국정보공동체의 범위를 비공식 및 사적 기관까지 넓힐 경우 그 규모는 현저히 확대된다. 2010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1,271개 정부기관과 1,931개 사기관이 미국 안보 및 외교를 위한 정보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루된 인적자원은 85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Wikipedia,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2011,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Intelligence_Community>.

미국정보기구의 기원은 법무부 내에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국을 창설한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수사국은 1935년에 이르러 오늘날 정보기구이자 법집행기구인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로 발전하게 된다. 정보 기능만을 전담하는 기구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소속으로 창설된 OCI(Office of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정보조정국)가 그 시초이며, OCI는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국)로 확대 발전되지만, 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해체되는 운명에 처한다.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구도가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트루만정부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CIA(중앙정보국)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보공동체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등 후속법의 제정을 통해 정보공동체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미국은 CIA와 FBI 외에도 국방성 소속의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국가지구공간정보국), NRO(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국가정찰국) 및 NSA(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 등 다수 정보조직을 운영한다. 이처럼 다수의 경쟁적 정보조직을 갖는 경우 업무의 불가피한 중복 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정보공동체의 정보실패 상황을 최소화하는 제어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2001년의 9·11테러사건에서 보듯이 정보 조직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할 때 복수 조직이 가지는 시너지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정보공동체의 정확한 현황 평가와 더불어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다양한 개혁조치를 모색하게 된다. 2002년의 미국 국가안보전략(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국방성 군사변환목표표(Department of

Defense Transformation Goals), 9·11테러사건 위원회 보고서(9·11 Commission Report),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대량살상무기 관련 미국 정보 역량 평가 위원회(Commission o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등은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다.

9·11테러사건은 미국정보공동체의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도출하면서 정보공동체의 대규모 개혁을 촉진한다. 2004년의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이하 IRTPA)에 근거하여 부시행정부는 정보공동체 전반의 예산권을 확보한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 직책을 신설한다. DNI가 지휘하는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는 정보공동체의 통합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 자원 및 역량을 조율·배분·관리하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⁴⁰³⁾ ODNI는 정보공동체와 민간 영역과의 정보협조체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정보공동체가 보유하는 제한된 인적 및 기술적 정보자원으로는 급격히 팽창하는 21세기 국가정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민간 영역과의 긴밀한 동반관계가 된다.⁴⁰⁴⁾ DNI는 기존의 DCI(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중앙정보국장)체제를 대체하면서 대통령과 NSC 및 국토안보부 등에 대한 정보자문을 일차적으로 책임진다. ODNI는 미국정보기구의 경쟁력 제고와 정보력 확대라는 목표 하에서 미국정보공동체를 주도적으로 통솔한다. 물론 ODNI가 자체 조직이 아닌 산하 16개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야 하는 점이나 직제상

403) ODNI가 관할하는 예산은 2010 회계연도의 경우 531억 달러로 세부지출 항목은 비밀에 부쳐 있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ews Release*, No. 21~10 (October 28, 2010), <http://www.dni.gov/press_releases/20101028_2010_NIP_release.pdf>.

404) ODNI가 주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정보공동체로부터 외주를 받는 사적 기관들의 인력은 정보공동체 총인력의 29%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ana Priest and Willan M. Arkin, *Top Secret America: The Rise of the New American Security State*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2011), p. 320.

으로는 CIA의 상위 조직이지만 방대한 CIA 조직을 직접 담당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점, 나아가 국방성 소속 정보기구들에 대한 예산배분권은 확보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및 감독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인 점 등은 이 기구가 지닌 본원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ODNI 산하의 16개 기구는 크게 세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개 그룹은 첫째, 업무수행과 평가, 예산책정 및 집행, 정보능률관리 등을 포함한 다각적 임무를 통해 DNI를 보조하고 자문하는 6개의 프로그램 관리국(Program Managers)과 둘째, 국방성 이외의 행정부서에 소속되어서 해당 부서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보공동체와 동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5개 부서정보처(Departmental),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해·공군과 해병 그리고 해안경비대 등 군과 경비대 내에 소속된 5개의 담당 정보기구(Services)로 구성된다.

1947년에 창설된 CIA는 미국의 정보공동체 중 가장 포괄적 대외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기관의 운영을 위해 연 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국외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배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지만 정책의 조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A내 NCS(National Clandestine Service, 국가비밀공작실)는 정보요원을 가장 광범위하게 확보하며 미국정보공동체의 인간정보활동을 주도한다.

법무부 소속 하의 FBI는 창설 당시부터 담당 업무를 국내 문제에 한정 시킨다는 법규에도 국내외 정보활동을 폭넓게 수행해 왔다. FBI는 오랜 기간 CIA와 정보활동 경쟁을 해 온 기구로서, 이 두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배타적 비협력관계는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정보공동체의 총체적 개혁 필요성에 대한 실마리를 작용한다. 하지만 테러사건 이후 국내 안보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FBI는 역할 확대를 요구받게 된다. 현재는 50개 이상의 국외 지부를 보유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외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BI 내 NSB(National Security Branch, 국가안보실)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업무를 총괄

하는 핵심 부서로써, 반테러, 방첩,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안보이슈들을 세부적으로 담당하는 하부 부서들을 운영함으로써 자체적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한편, DIA, NRO 및 NSA는 국방성 산하의 4대 정보기구로서, 국외 군사정보와 여타 다양한 국방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한다. 1961년에 창설된 DIA는 현재 15억 달러를 넘는 운영비를 지출하며 국방 관련 정보들을 종합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세계 기관과는 달리 국방성 내의 정보수요에 긴밀히 부응하는 특성이 강한 정보기구이며, 국방성 외부의 정보조직들과 협력적관계를 갖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CIA와의 오랜 경쟁, 갈등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4년 이후 DNI체제가 정립된 이후에도 DNI의 영향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DIA는 TECHINT의 영역에 주력하지만 HUMINT 영역의 활동도 꾸준히 넓혀 오고 있다.

NSA와 NRO는 각기 75억 달러 이상의 가장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기구들로 소속은 국방성이지만 2004년 이래로 DNI의 담당이 강화된 정보기구들이다. NSA는 자체적 정보활동을 주관하기보다는 CIA, FBI, DIA 등 다른 정보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정보의 전문기구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감청 능력과 암호 설정 및 해독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NRO는 신호 및 화상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정보기구로, 무기 통제 및 감시, 외국 군 공격 감지, 환경조약의 감찰 등 다양한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CIA, FBI 및 각 군이 운영하는 스파이 위성을 비롯하여 미국의 정보 위성과 정찰 항공기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반면 NGA는 전 지구적 지형 및 공간에 대한 영상정보를 담당하는 기구로 연 20억 달러의 운영비를 소비한다. NGA는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안보상황이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확산 여부 등 다양한 대외안보 위협 요인들을 평가한다.

행정부서에 소속된 정보기구들은 상기 언급된 기구들에 비해 작은 규모를 유지한다. 에너지부의 INC(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정보방첩실)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핵물질 및 에너지 관련 정보들을 취급한다. 국토안전부의 INA(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정보분석실)는 미국 내 테러공격 등 국토안보와 관련된 제 정보를 수집한다. 국무부의 INR(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정보조사국)은 주로 외교 분야의 정보분석을 담당하지만, 외교의 토대가 되는 정보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포괄적이어서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정보분석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재무부 소속 OIA(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정보분석실)는 테러집단, 범죄단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량국가들에 대한 재정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법무부 마약청 소속 ONSI(Office of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국가안보정보실)는 마약의 밀거래를 포함하여 마약 연계 범죄에 연루된 범죄 조직 및 불량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담당한다.

한편,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기구들은 해당 군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직제상으로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해양경비대는 전시에는 해군으로 편입되는 조직으로, 원활한 해안경비를 위한 정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이들 군 소속정보기구 및 해양경비대 정보실은 NSA 및 NRO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2.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가. 미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미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은 전이되는 세계 안보환경 속에서 꾸준히 재구성됐다. 북한은 60년이 넘도록 미국의 주요 적성국 중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6·25전쟁 때는 미국과의 직접적 교전국이기도 하다. 냉전 시기 동안 북한은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로서 인식됐으며, 그 군사적 호전성으로 인해 남한의 안보, 더욱 넓게는 동아시아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가로 자리매김 해왔다. 소련과 중국이 후원하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었고, 따라서 미국은 군사 분야에 대한 북한정보의 확보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의 주관심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독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편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자원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주어진다. 1980년대 후반 5MW영변핵발전소의 가동을 확인한 것이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아닌 프랑스의 상업위성이라는 점은 냉전 시기 미국의 제한적 대북 정보 역량을 입증한다.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범세계적 안보환경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성격 및 북한의 위협 수준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를 이끌어 왔다. 냉전의 전초지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소멸되고 소련으로부터 더 이상 후원받지 못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전략도 수정되었다. 미국은 제한적 위협 능력을 보유한 고립된 북한에 대해 압박위주의 강경대응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전략적 유연성과 같이 향후 동북아 역내에서 주한미군이 더욱 자유롭고 포괄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군사 전략의 조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로 존재한다. 미국의 이

러한 대북 인식은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한 한국의 지난 두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과거 한·미 간 공동의 적이었던 북한에 대해 양국이 인식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의 반영일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을 현실적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민족통일의 달성이라는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포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미국은 소련의 지원 없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 평가하면서도 테러집단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을 제압해야 할 주요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게 된다.

9·11테러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토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계된 북한의 위협 역량 및 수준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동서냉전의 이념적 적대구도를 벗어나는 ‘불량국가’의 새로운 개념 틀을 동원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유리시키고 이때 소외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불가피하게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충돌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방인 한국의 대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의 자각도 함께 생성시키며 양국의 대북 인식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면서 대북포용정책의 후퇴 속에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논란의 단초는 여전히 수면 밑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인식은 결국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 인식과 상호작용 속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국의 대북 인식 재조정 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대체로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내적 문제들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결 등 급박한 외교 과제들에 대한 관심은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을 후순위로 밀어내며 미국이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구할 여지를 제한한다.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 문제와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문제에 대한 관심도 미국의 적극적 대북정책을 제한하는 이유를 구성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동북아 지역의 미국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현재의 미행정부가 북한문제에 주도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정책적 여유까지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북한문제는 대중국 외교 및 전략을 위해 수단화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파상적 언급에도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이탈하는 미행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지극히 한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북아의 패권적 지위를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주도권을 취하는데 주저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유지하는 양자 적 동맹관계는 과거 냉전 시대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협화음에도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한반도 분단구조가 설령 자국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국의 국익에 크게 상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가 전이하면 미국은 이것이 자신이 주도하는 양자 적 동맹관계의 틀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한반도 분단구조의 전이는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사의 존폐가,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한·미동맹이 이완 혹은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될 때 이로부터 초래되는 미·일동맹에 대한 부정적 여파는 심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일층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결국 일본의 대미종속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적 자주성을 요청하는 일본 내 여론의 확산은 미·일동맹의 기저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수반할 수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상황의 전이는 결국 미국이 희망하는 바와는 괴리가 있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를 가진다. 미국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주류적

견해는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모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원하는 규모만큼의 주둔은 어려울 것이며, 지극히 제한된 수의 병력만이 한반도에서 유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⁴⁰⁵⁾ 이는 동북아 지역을 상대로 한 전략적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수준의 군사력 확보가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존속 자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⁰⁶⁾ 주한미군의 안정적 존속과 역할 증대를 조건화시킬 수 없는 한 미국이 한반도 분단상황을 급격히 전이시키는 정책적 의지를 표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등 한반도의 구조 변화가 미국에 어떠한 실익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아직 명확한 답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답안을 확인하기 전에 한반도의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의 성격을 보유했으며, 정책의 변화를 유인할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여지 또한 높지 않다.⁴⁰⁷⁾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오랜 기간의 냉전 시기의 사고적 틀이 연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대북 인식 변화에 주저하는 것은 자신의 정책적 필요성과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가진다.

405) Alan D. Romber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Quixotic Quest or Source of Stabi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3 (Fall 2006), p. 325 참조.

406) John Barry Kitch,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2006), pp. 178-179 참조.

407) 부시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은 '불량국가(regime change)'라는 가치하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도출 및 한반도 분단상황의 전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지만, 이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외교적 수사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경제압박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이들을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적극적 1.5트랙으로 자리매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정책이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이 북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의 핵보유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9·11테러사건 이후 이른바 불량국가라는 명칭하에서 북한을 이라크 및 이란과 더불어 핵무기 요주의 국가의 범주 속에 편입시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핵확산을 저지하는 범세계적 노력의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는 그 자체가 중대한 이슈임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문명 간의 갈등(clashes of civilizations)’으로 비화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계 대 중동의 이슬람 세계와의 갈등적 상황을 희석하는 차원에서 비 이슬람 국가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강조가 미국의 전략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북핵위기는 과거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던 한국정부를 견제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는 일본을 관리·통제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미국에 부담만을 부과한 것은 결코 아니며 미국의 동북아 지역 관리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에 대한 편중된 관심으로 구현되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집단에 대한 핵무기 유출이 미국안보의 우려 사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이유도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초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초기에 대북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내걸며 북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군비문제를 동시에 묶어서 북한과 협상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은 곧 수정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북핵문제라는 단일 이슈의 논의도 진척시키기 어려운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생각할 때 포괄적 접근방식이 현실성을

지나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포괄적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온 한반도구조 변화의 결과를 미국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의문점을 형성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중국과 경쟁적 구도를 갖는 미국의 21세기 범세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분단구조의 급격한 전이를 가져오는 미국의 정책적 주도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미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직간접적 영향력을 파생시킬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

ODNI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역할을 조정 관리하는 상위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약 1,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규모는 타 정보기구들 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이다. 현재 클래퍼(James R. Clapper)가 수장인 ODNI는 최근의 기구 조정을 통해 4국체제를 토대로 하면서 그 위에 분쟁 및 논란 지역의 문제를 담당하는 특수임무 담당관(mission manag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⁰⁸⁾ 특수임무 담당관으로는 이란 담당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담당관, 쿠바 및 베네수엘라 담당관과 더불어 북한담당관이 존재한다. 북한담당관의 존재는 북한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ODNI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담당관은 ODNI 내의 정보분석 부서인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mmittee: 이하 NIC)와의 연계하에서 북한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판단 및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담당관은 ODNI의 기능지원 조직인 NCPC(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국가

408)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organization Chart," 2011, <http://www.dni.gov/aboutODNI/content/ODNI_org_Chart_2010.pdf> 참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센터) 및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국가 대테러센터) 등과도 긴밀한 협력 구도를 가진다. 이들 센터들은 각기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정보공동체 내의 모든 정보를 수렴하여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한다. 예를 들어, NCPC의 경우 CIA, FBI, 국방성, 에너지부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담부서들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서 분석을 수행하며 이들 부서의 유관정보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NCPC는 이란과 북한을 주관심 정보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ODNI는 16개 정보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한다. DIA 등 일부 국방성 소속 정보기관들의 비협조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국방성 산하의 NRO, NGA, NSA 등에 대한 관찰권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다양한 대북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 ODNI 내 주요 직책에 군장성 출신들이 다수 진출한 것은 국방성 소속 정보기관들에 대한 장악력 확대조치의 차원이라는 평가도 있다.⁴⁰⁹⁾ ODNI는 CIA와 DIA의 HUMINT와 NRO, NGA 및 NSA의 TECHINT를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비록 인력은 소수이지만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정보전문가들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지위를 구가한다. 이들의 정책적 영향력은 대북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미국정보공동체는 대북정보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TECHINT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물론 미국정보공동체가 TECHINT에 편중된 의존을 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전통적으로 HUMINT 보다는 TECHINT를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⁴¹⁰⁾ TECHINT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CIA와 DIA의

409)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10.

410) Scott E. Hayford, *Human Intelligence: America's Achilles* (Maxwell: Air University, 2005), p. 2.

HUMINT 활동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TECHINT 만능시대에서 경험한 9·11테러사건은 HUMINT의 가치를 새로이 확인시키는데 일조하게 되며, 따라서 ODNI는 HUMINT 역량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IA 내에 NCS(국가비밀공작실)를 설립하고 정보공동체의 HUMINT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0여 년 이상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했으며, 핵무기 이외에도 대규모 생화학 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을 보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⁴¹¹⁾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축적을 시도해 왔지만 이러한 긴 역사에도 미국 정보공동체의 대북정부가 정책결정자들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⁴¹²⁾ 정보는 적절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정확성을 수반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유용성을 상실한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요구되는 대북정보의 시간적 타이밍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북한을 상대로 한 정보활동의 어려움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우선 지극히 폐쇄적인 북한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형성한다. 국경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화, 통신, 인터넷 등이 정부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는 사회를 외부정보기관이 직접 파고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에 대한 철저한 정부통제, 사적 전화 및 통신의 정부 감청, 여행 및 이주의 제한 등 정부의 사회 장악력이 거의 절대적인 북한체제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북한의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에서 일부 정보는 확보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부 선전매체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의 신뢰성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411) Nuclear Threat Initiative, "North Korea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Program overview: History and Status," Nuclear Threat Initiative online, 2011, <http://www.nti.org/db/profiles/dprk/NKN_OGO.html>.

412) Arnold W. Nash and Navel Postgraduate School (U.S.), "Intelligence Reform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2005), <<http://www.dtic.mil/cgi-bin/GetTRDoc?AD=ada439618.pdf&Location=U2&doc=GetTRDoc.pdf>>.

물론 북한체제의 폐쇄성에도 오랜 기간 정보활동을 도모한 결과로 북한정보의 축적은 꾸준히 증진됐다. 북한에서 산출되는 미디어정보 등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이하 OSINT)들의 경우 정부 선전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하기는 하지만 북한체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탈북자의 수적 증대에 따라 북한체제의 단면들이 서서히 외부 사회에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타 국가들 보다 북한의 공개 출처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대 국가의 정보기구들이 생산하는 정보량의 약 75%에서 90%가 공개출처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처럼 제한적인 공개정보를 허용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보활동이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공개출처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할 때 정보의 진위 검증에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적 루트의 유사 및 조작 정보들이 공개출처정보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은 커진다. 근년에 일부 대북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이 주도하는 사실 여부가 미확인된 정보의 남발은 정보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적 현실 속에서 북한 관련 공개출처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진위 확인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북한정보관리체계의 약점을 활용하여 정보의 편향성이 내재한 정보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산출하는 정보위작의 경우들도 일부 목격되고 있다.⁴¹³⁾

ODNI는 공개출처정보가 지니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공개출처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 관련 공개출처정보의 수집·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ODNI에 소속된 OSC인 것으로 알려졌다. OSC는 NASIC(National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및 FBIS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413)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10.

Service, 국외 방송정보처) 등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북한의 신문, 잡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수집된 대북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보공동체들은 대부분 폐쇄적인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보공동체가 관리하는 대북정보가 대부분 군사, 정치, 외교 등 민감한 영역에 속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사실상 적성국으로 규정하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인식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ODNI는 북한과 관련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대북정보공동체가 주창되고는 있지만,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정보량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정보량이 현저히 적다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ODNI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자국의 북한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일정 수준의 대북정보를 전달한다. 이들의 정보전달은 공개 브리핑(Official briefing) 방식이나, 비공개 조건(Off-the-record)의 정보제공, 그리고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누설(Leaks)의 형태로 이루어진다.⁴¹⁴⁾ 하지만 이들 연구자가 정보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공개나 확고한 물증 제시가 필요하다. 정보기구의 특성상 정보원의 보호 또는 물증 제시의 구조적 한계 등을 이유로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하부정치 영역의 정보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미 폭넓게 확보되어 있고 정치적 민감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구들이 공개할 때 지나는 부담도 적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구가 민간 영역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군사, 정치, 외교 등 상위정치 영역의 정보 분야에서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외부로 공개되는 정보량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총 정보량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⁴¹⁵⁾

414)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9.

415)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9.

(2) CIA

1947년의 국가안보법(NSA)에 따라 창설된 CIA는 대북 관련 정보에 관한 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내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CIA의 대북정보 활동은 1947년 미 육군에 의해 우연히 감청된 북한신호정보를 분석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IA 내의 정보활동 핵심부서로는 DI(Directorate of Intelligence, 정보실)와 NCS(National Clandestine Service, 국가비밀공작실) 및 DST(Director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실) 등이 존재한다. DI내 북한정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는 아시아태평양 분석과(Asian Pacific Analysis)와 무기정보, 비핵 및 무기제한 센터(Weapons Intelligence,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Center)를 들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분석과는 한반도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는 팀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무기정보, 비핵 및 무기제한 센터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및 군사정보를 취급한다. 한편, NCS는 북한과 관련된 HUMINT를 총체적으로 관리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 NCS의 북한 HUMINT수집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NCS는 한국이나 중국 내 탈북자,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 이탈한 북한의 정치적 망명자, 북한 내 정보제공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HUMINT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HUMINT의 영역은 가장 고전적인 정보 영역이지만 북한은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정보활동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HUMINT수집은 외교관, 군무원 등을 통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보활동에도 의존하지만, 비밀요원 등을 동원한 첩보활동도 활용한다. HUMINT활동은 CIA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주도되지만, 국무부, 국방성 및 FBI 등도 각자의 HUMINT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HUMINT는 9·11테러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분야로, CIA는 HUMINT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에 의해 ODNI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NCS를 창설하여 운영하

고 있다.⁴¹⁶⁾ NCS는 CIA뿐만 아니라 정보공동체 내 여타 기관들의 비밀공작을 전반적으로 수행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NCS가 북한과 유사한 환경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면서 처했던 어려움은 이미 일부 언론보도나 저술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⁴¹⁷⁾ 미국의 정보기구가 북한국적의 첩보원과 협조자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1990년대 이래 탈북자의 증대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상황이 일시적으로 북한정보확보를 위한 열린 루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첩보원을 북한에 잠입시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⁴¹⁸⁾ 설령 잠재적 북한체제 이탈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엄격히 분화된 북한의 정치사회구조의 특성상 이들이 지닌 정보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김정일 중심의 정치 우선 국가인 북한체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김정일 주변의 고위직 간부를 정보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양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조차도 주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현직 간부를 포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미국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 만나는 미국 측 방문객에 대한 사전교육과 방문 후 획득된 정보확인인 수준 이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다.⁴¹⁹⁾

CIA 한국지부에서 근무했고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도날드 그레그(Donald P. Gregg)는 CIA의 대북 HUMINT활동은 지극히 비생산적이었으며, 북한은 미국 정보기관의 HUMINT활동 대상국 중 가장

416)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의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U.S. Congress, "House Report 108-796-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December 2004), <http://www.gpoaccess.gov/serialset/creports/intel_reform.html> 참조.

417)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CIA는 이들 국가에 대한 HUMINT 활동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CIA 내부에서 '악의 축 국가 관광여행'이라고 조롱될 정도로 평범한 정보 이상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Ishmael Jones, *The Human Factor: Inside the CIA's Dysfunctional Intelligence Culture* (New York: Encounter, Books, July 15, 2008) 참조.

418) Keith Thomson, "U.S. Intelligence -- or the Lack Thereof -- on North Korea," *Huff Post World* (May 29, 2009).

419)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8.

현저한 실패 사례였음을 고백한다.⁴²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뛰어난 방첩 활동을 전개한 데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CIA의 대북 HUMINT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CIA는 최근 들어 대북 HUMINT 역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CIA는 북한 내 확실한 안정적 정보공급원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장기적 차원의 북한 내 정보공급원 확보 및 침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는 오랜 경험의 결과로 정보공급원의 즉흥적 가치보다는 장기적 유용성을 보다 강조하며, 정보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급원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때까지 철저한 준비기간을 갖는 성향을 보여 왔다. 북한의 정보공급원 확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정보기관보다 장시간에 걸친 신중한 정보공급원 선택 및 신뢰성 확보 작업을 진행하며 신뢰성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정보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급원의 신뢰성 확인 및 정보활용에 장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허위정보로부터의 정보실패를 방지하고 나아가서 정보공급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정보공급원을 활용한다는 전략과 연관성을 가진다.⁴²¹⁾

대북 HUMINT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CIA는 한국을 비롯한 제삼국의 정보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적대적 남북관계가 지속하던 냉전 시기에 미국은 북한에 친인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방문 및 공식 관료의 방문 등을 통해 일부 HUMINT를 확보함으로써 한국보다 도리어 HUMINT 부문에서 앞선 정보력을 보유한 바 있다. 제일 조총련계 교포들의 북한왕래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CIA는 일본정부 및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HUMINT 확보를 간접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CIA는 조총련계 교포들을 활용하여 직접 HUMINT 확보에 나서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이는 나중에

420) Donald P. Gregg, "A Long Road to Pyongyang," *The Korean Society Quarterly*, Vol. 3, No. 1 (2002), <http://www.koreasociety.org/TKSQ/FeatureArticles/v-3/03_1SPRING2002_DPG.html>.

421)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8.

CIA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받는다.⁴²²⁾

미국이 우위를 점하던 HUMINT 영역은 1990년대 말 이래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이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 우위로 돌아서게 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HUMINT 영역에서의 한국의 우위를 형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국정보공동체는 HUMINT 영역을 한국에 대부분 맡긴 채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TECHINT의 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정보공동체가 강조해 온 TECHINT가 상대국 정책결정자의 심리 상태나 의도 등을 결코 명시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군사시설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광범위한 영상정보 및 신호정보 등을 확보하지만, 이는 북한의 위장 및 기만 전략들에 극히 취약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원거리 영상정보의 해상도 개선이나 적외선 촬영기술 등의 진전에 따라 TECHINT의 유용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이 HUMINT의 공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동체에서 HUMINT 영역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기 시작한 데는 과거 CIA의 불법적 HUMINT활동이 가져올 폐단과도 관련을 가진다. CIA는 과거 대외 HUMINT활동을 수행할 때 정보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외국에 대한 과도한 내정간섭 및 다양한 불법 작전들에 연루된 바 있다. 1950년대 이래 CIA가 불법적으로 주도한 수많은 국외 작전들은 과테말라, 콩고, 도미니크 공화국, 이란, 이라크, 베트남, 쿠바, 칠레 등지에서 지도자 제거와 피그스 베이(Bay of Pigs)사건, 1974년의 앙골라사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이란-콘트라(Iran-Contra)사건 등 긴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CIA의 이미지는 정보기구가 아닌 비윤리적 불법 행동대로 낙인찍히게 되고, 뒤이어 CIA가 주도하는 HUMINT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전반적 상실도 초래되면서 CIA의 HUMINT활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CIA에

422) Jeremy Kirk, "Intel Experts: N. Korea's Hard Target," *Global Security online Service* (March 21, 2004), <<http://www.globalsecurity.org/org/news/2004/040321-dprk-target.htm>>.

대한 의회의 강화된 통제 및 감사와 CIA의 역할 축소는 일정 부분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CIA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제적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불법적 HUMINT작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CIA의 HUMINT 프로그램들이 위축 되었다는 사실이다. 1995년 도이취 CIA 국장에 의해 부과된 불법 정보활동의 금지라는 이른바 도이취 규칙(Deutch Rules)은 CIA의 HUMINT 역량을 결정적으로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자아낸다.⁴²³⁾ HUMINT활동들이 흔히 합법과 불법의 회색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은 HUMINT의 유용성에도 HUMINT활동을 마냥 확대 할 정책결정자의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9·11테러사건 이후 정보활동의 합법성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의 유용성에 방점이 놓이면서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HUMINT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구하게 된다. 부시행정부 시기에는 HUMINT를 담당하는 스파이 수를 50% 증가시키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인력은 100%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⁴²⁴⁾ 이 지시 이후 실제로 북한 관련 정보부서가 상당히 확충되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보공동체는 대북 정보 부문은 HUMINT보다는 TECHINT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HUMINT 역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CIA는 HUMINT 영역에서 한국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국정원이 특별관리하는 탈북인사들에 대한 정보조사 접근 등은 하나의 한·미협력 사례를 구성한다. 북한정보에 대한 중국의 협조도 다방면으로 추구되었지만, 실제적 도움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주어진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미국 측에 제공하지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423) Scott E. Hayford, *Human Intelligence: America's Achilles*, p. 26.

424) Jerome Bernard, "Bush Tells CIA to Get More Spies," *AFP Online News Service* (November 27, 2004), <http://www.yahoo.com/news?tmpl=story&u=afp/20041127/ts_alt_afp/us_attacks_intelligence_04112717095>.

대북 HUMINT 활동을 위한 환경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개선됐다. 1990년대 중반 북한정부는 총체적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통제력 일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조치가 진행되면서 북한 내 정보원 침투의 환경은 꾸준히 호전된다. 한편, 탈북자의 수적 증대는 그간 숨겨져 있던 북한사회의 면모를 소개하는 중대한 계기를 형성한다. 물론 탈북자의 대다수는 중·북 국경 지역의 일반 농민 및 노동자들로서 이들이 지닌 북한정보는 북한사회의 일상적 삶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파편화된 형태를 취한다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파편화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북한정치,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거시적 정보도 확보될 여지는 있다. 탈북자 중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와 관련한 핵심 정보들을 보유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의 정보 역시 파편적인 특성이 동일하게 내재하여 북한체제의 완전한 이해를 위한 정보로서는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주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기획 탈북 등이 활성화되면서 현직의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하는 길은 확대되고 있으나 CIA가 이러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시도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한편, HUMINT 영역과 더불어 CIA가 높은 관심이 있는 영역이 북한에 대한 공개출처정보 영역이다. CIA는 그동안 비밀첩보에 무게 중심을 두어왔고 OSINT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해왔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할 때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CIA는 견지해 왔다. 하지만 그간 북한 관련 공개정보의 양이 꾸준히 증가해 오면서 OSINT의 역할 중요성도 제고되고 있다. OSINT는 HUMINT나 TECHINT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정보수요의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 기여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미국의 정보공동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⁴²⁵⁾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된 신문 방송의 미디어들이라고 할

425) Stephen C. Mercado, "Sailing the Sea of OSINT in the Information Age," *Studies in Intelligence*, Vol. 48, No. 3 (2004), <<http://www.cia.gov/csi/studies/vol48no3/article05.html>>.

지라도 그 내적인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정부의 기관지, 간행물, 탈북자들의 공개증언, 외국인의 북한탐사기 또한 각자 문제점은 일부 보유하지만 훌륭한 OSINT 자원을 구성한다. 9·11테러사건 이후 OSI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CIA는 OSINT 전담 내부 기구를 설립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북한 관련 OSINT의 체계적 축적을 도모하고 있다.

CIA는 OSINT의 중요성과 더불어 최근에는 질 높은 정보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IA는 정보의 수집 분야에만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분석 분야에는 미흡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수용하며 분석 역량의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CIA의 정보실패는 정보의 미진한 수집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정보의 미흡한 분석이 문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IA는 분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 분석가 충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정보 분석분야의 인적 확충 또한 도모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래 CIA의 인력충원은 정보수집부서와 분석부서로 이원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때 분석부서는 석박사 학위 조건 등 전문성의 영역에서 수집부서보다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 위계서열도 수집부서보다는 분석부서가 전반적으로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다.⁴²⁶⁾ 그럼에도 충분한 분석적 전문성 제고의 이슈는 CIA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며 특히 북한분석과 같이 미국 내 전문인력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분석 전문성의 확보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의 승진 전망이나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부서 내 역량있는 분석인력들이 중국이나 유럽 등 타지역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북한방문 경험조차 가질 수 없는 분석 인력들에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한편, CIA의 경직된 대북 인식이 대북정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대북 인식은 종종 오랜 가정에

426)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8.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보 선택 및 정보 해석에 대한 주관적 선호와 병행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상이미지(mirror imaging) 오류와 겹 층 쌓기(layering) 오류가 중복되는 형태로써 북한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이라크의 경우에서도 CIA는 유사한 행위 패턴을 보이고 있다.⁴²⁷⁾ 경상이미지 오류는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을 자신과 같은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인식론적이고 사회가치적인 다양성을 부정할 때 발생하며, 겹 층 쌓기 오류는 일단 정착된 인식과 판단에 추가적 정보가 제시되면 전자에 집착함으로써 후자의 가치를 배제하려는 데에서 발생한다. 북한이 보유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방문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정보관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보수집·분석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른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emit approach)이 일정 부분 시도되지 않고서는 경상이미지나 겹 층 쌓기의 오류 등은 해소되기 어려우며 이는 CIA뿐만 아니라 대북정보분석을 시도하는 모든 정보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한된 수의 정보원에 장기간 의존하는 경우 과잉 신뢰의 문제를 초래하는 고객 과신 주의(clientism) 오류의 가능성도 확대될 여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CIA의 대북 HUMINT의 인적 풀이 편협하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CIA가 확보한 주요 대북정보들은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일일 브리핑(President's Daily Brief, PDB),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일 정보지(Senior Executive Intelligence Brief) 또는 경고경계목록(Warning Watch Lis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북한정보는 무기 거래보고서(Arms Trade Report), 테러 리뷰(Terrorism Review), 무기확산보고서(Proliferation Digest) 등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도 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된다.

427)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을 유발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CIA의 정보 오류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를 구성한다. 당시 정보 오류를 초래한 CIA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raq's Mas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October 2002), <https://www.cia.gov/library/reports/general-reports-1/iraq_wmd/iraq_oct_2002.pdf> 참조.

(3) 국방성 정보기구

국방성은 공식적으로 8개의 정보기구를 보유한다. DIA, NRO, NGA와 NSA 등 4개의 대규모 전문정보기구 이외에도 4군 산하의 정보기구들을 추가로 보유한다. 육군의 INSCOM(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정보안보대), 해군의 ONI(Office of Naval Intelligence, 해군정보실), 공군의 AF-ISR(Air Force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공군정보감시정찰대) 및 해병대의 MCLA(Marin Corps Intelligence Activity, 해병정보대)는 군 소속의 정보담당기구들이다. 대북정보와 관련하여 NRO, NGA 및 NSA는 영상과 신호정보 등 TECHINT의 수집·분석에 주력해 왔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 그리고 북한군 동향과 관련된 TECHINT는 대부분 이들 기관에 의해 확보된다. NRO, NGA 및 NSA가 확보한 정보는 DNI, CIA, D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에 의해 활용된다. DIA의 경우 군사 관련 TECHINT와 HUMINT를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이다. DIA는 IMINT를 자체적으로도 확보하며, CIA와 더불어 HUMINT 확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DIA는 NRO, NGA 및 NSA와 함께 국방성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⁴²⁸⁾

국방성 정보기구들이 미국 정보예산의 약 80%를 소비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정보공동체 내의 국방성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국방성 정보기구들이 많은 정보예산을 점하는 것은 이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TECHINT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국방성 정보기구에 편중된 예산지출은 CIA를 포함하여 비 국방성 산하 정보기구들과 국방성 정보기구들 사이에 알력의 실마리로 종종 작용하게 된다. DNI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ODNI와 국방성 사이

428) 국방성 내의 4대 정보기구는 모두 CIA의 정보기능 실패 혹은 CIA와 타 부서 간의 알력으로부터 생성된다. 1950년대 초 CIA의 미진한 암호해독능력이 NSA의 창설로 이끌어졌다면, 1960년에는 CIA와 공군 간의 위성이미지 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NRO가 탄생한다. 뒤이어 1962년에는 CIA와 국무부 및 NSA 간의 불화가 DIA의 탄생을 이끌게 된다. CIA와 타 기관과의 거북한 관계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쟁적 구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전통적 알력관계가 반영된 때문이기도 하다. Scott E. Hayford, *Human Intelligence: America's Achilles*, pp. 19-20 참조.

에도 미묘한 갈등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어지기도 한다.⁴²⁹⁾ ODNI와 국방성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ODNI의 지휘체계를 군장성 출신 인사 위주로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사정책은 CIA의 소외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대북정보활동에 긴밀히 연계된 국방성 소속 정보기관으로는 DIA와 NSA가 있다. 물론 NRO와 NGA도 북한 관련 IMINT(IMagery INTelligence: 이하 IMINT)와 MASINT(Measurement And Signature INTelligence: 이하 MASINT) 등에 주력하면서 이들 정보를 타 정보기관에 제공한다. NSA는 북한으로부터의 SIGINT에 집중하면서 북한 지역의 감청 및 북한 암호 해독 임무를 수행한다. TECHINT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은 타 국가를 압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에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TECHINT는 상당한 제약을 지닌다. IMINT, SIGINT 및 MASINT 등의 TECHINT는 북한지하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하는데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하는데 이들 TECHINT는 한계를 드러낸다. 영변이나 태천 등과 같이 일부 확인된 지역 이외에서 새로운 핵시설을 탐지하는 작업은 현재의 기술정보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말 북한이 미국의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낸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또한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사전 감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북 TECHINT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북한의 군 지휘사령부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100m 이하의 깊은 지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동시설물 등으로 미국의 대북 TECHINT 수집에 맞대응하기 때문이다. NSA가 수행하는 SIGINT의 경우에도 북한정보 확보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민군 통신을 모두 철저히

429) Arnold W. Nash and Naval Postgraduate School (U.S.), *Intelligence Reform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p. 35.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신호정보의 외부방출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허위 신호 유출 등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TECHINT 활동을 방해한다. 물론 적외선 영상촬영이나 영상사진의 해상도 개선 등 최근의 기술진전은 북한의 위장술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2009년 12월 미사일과 로켓포 등 평양에서 북한무기를 적재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가 태국정부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은 무기적재를 위성사진으로 탐지한 미국 정보국이 주도한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⁴³⁰⁾

그럼에도 대북정보활동에서 DIA 등 미국정보공동체가 경험하는 TECHINT의 한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DIA가 제공하는 2005년의 국가정보예측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는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예측을 수행한 바 있다. 유사한 사례로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사담 후세인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감지하기 위해 항공 사진과 위성 사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지만 결국 이라크의 핵시설 존재 여부에 대한 오도된 판단을 산출한다. 이라크 핵개발 사례는 TECHINT의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재확인시킨다.⁴³¹⁾ 파편화된 기술 정보를 짜집기하여 일련의 통합적 정보를 산출할 때 오류정보의 생산 확률은 현저할 수 있다. TECHINT에 대한 집착은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정보의 소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라크는 20년 가까운 전쟁기간과 10여 년의 국제제재 및 이에 따른 고립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간과하였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 즉, 이라크 사회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을 토대로 한 경직된 인식체계 위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기술적 정보에만 의존할 때 오도된 판단의 여지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책지도자의

430) 태국정부의 비행기 억류조치 관련 소식 전도는 AFT, "Thailand detains plane with weapons cache from N.Korea,"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RdJZJbMl2mf0ZL_xD_tZkXG0G1w> 참조.

431) Richard Kerr, *et al.*, "Issues for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Collection and Analysis on Iraq," 참조.

개성과 가치, 정책 엘리트들의 사고 패턴, 사회적 인식구조 등 이른바 연성정보(soft intelligence)는 TECHINT의 영역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IA는 TECHINT에 편중된 정보활동의 한계성을 파악하고 수년 전부터는 북한 측 협력자를 직접 물색하는 등 대북 HUMIN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성 정보기구들의 위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정보판단의 영역을 정책결정자의 가치 영역이나 정책 영역에서 명확히 구분하는데 소극적이게 만든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DIA의 대북정보는 특히 보수적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정책결정자의 가치나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명확한 레드라인(red line)을 긋지 못한다는 한계를 간혹 보이고 있다. 정보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지니는 경우 정책 지지를 위한 편향된 정보활동으로 흐를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미국정보공동체에서 대북 정보활동은 정보의 객관성 및 중립성의 보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특히 국방성과 같은 보수적 성향을 보유한 기관에 소속된 정보 기구들은 정보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지닐 수 있다. 정보가 특정정책을 후원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의도적 정보 누락과 정보왜곡, 나아가서 정보 위작의 위험성이 남아 있게 된다. 정보의 정치화 현상과 더불어 관료주의적 보수성 및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위험성은 정보실패의 중대 요인을 구성한다. 아적의 이분법적인 구분과 자신에게 편의적인 선민사상의 수용은 또 다른 정보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³²⁾ 이들은 북한정보와 관련하여 국방성의 정보기관들이 쉽게 매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국방성 소속 정보기관들은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고한다.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 등 고위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보고서(Executive Highlights)와 더욱 포괄적 독자를 갖는 군사정보 일일보고서(Military Intelligence Digest) 외에도 주

432) Scott E. Hayford, *Human Intelligence: America's Achilles*, p. 3.

간 경고 전망(The Weekly Warning Forecast Report), 계간 경고전망(The Quarterly Warning Forecast Report), 연간 경고전망(The Annual Warning Forecast) 등을 통해 북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DIA는 국가정보예측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와 국방정보보고서(Defense Intelligence Report) 등을 통해 축적된 대북정보를 정리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한다.

(4) 기타 행정부서 정보기구

법무부 소속 FBI는 CIA와 오랜 기간 경쟁하면서 대외정보활동을 수행했다. FBI는 한국에도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북정보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BI는 9·11테러 이후 본토 안보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된 기구이다. FBI 내의 NSB(국가안보실)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정보, 북한의 테러단체 지원 정보, 북한의 위폐 및 마약 제조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 지원 업무에도 관여하면서 이들과의 대북정보교류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무부의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이하 INR)은 규모는 작지만, 분석 역량이 탁월한 정보 부서로 알려졌다. CIA 및 DIA와 더불어 정보공동체로부터 포괄적 정보지원을 받는 부서 중 하나로 우수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무부의 대북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INR의 장점 중의 하나는 외교공관 등을 통해서 입수되는 각국의 외교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의향을 지척에서 확인하며 정보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가 간 외교이슈가 정치,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증첩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통합적 분석에 INR이 주력한다는 점은 타 정보부서들과의 차별성을 형성한다. INR은 국제기구 및

미국 내 NGO와의 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INR은 정보조사국 저널(INR Journal)과 평화유지전망(Peacekeeping Perspectives) 등을 발간하며 이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들을 대외적으로도 소개한다. 한편, 공식적인 정보공동체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국무성 내 실무부서인 EAP(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동아시아 태평양국)와 ISN(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국제안보 및 비 확산국)은 북핵 관련 정보를, DRL(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과 PRM(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인구, 난민과 이민국)은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에너지부의 INC(정보방첩실)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 및 핵무기를 통한 테러 위협에 관심을 두고 유관정보를 수집한다.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으로 전이하는 북한에 대한 INC의 관심은 지대하여 CIA 및 NRO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북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재무부의 정보분석실(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이하 OIA)는 북한의 불법자금유통과 관련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 부시행정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arco Delta Asia)가 보유한 북한자금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때 이를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 정보 부서로 알려졌다. OIA는 북한의 위폐, 마약, 위스키 밀주 등을 통한 국외 불법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보활동에도 간여한 바 있다. 그 밖에 국토안전부의 INA(정보분석실)와 법무부 마약청 소속 ONSI(국가안보정보실)는 북한의 테러단체 지원 여부와 마약 밀거래 여부 등 북한 관련 정보에 각기 관심을 있으나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민간정보 네트워크

북한정보의 수요·공급은 정부 주도의 정보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북사업을 펼치는 미국 내 민간단체들에 이루어내기도 한다. 이들 민간단체는 대부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사업, 종교사업 및 북한인권사업에

연루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로는 의약품 지원에 주력하는 유진벨 재단(Eugene Bell Foundation)과 식량, 의약품, 농업용품의 대북지원을 수행해 온 대북 기독교우정단(Christian Friends of Korea), 토양개선 등 농업생산증대 기술을 지원해 온 미국 우정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농업기술 및 농산물 가공설비 등을 지원해 온 세계자원봉사회(Global Resource Service) 외에도 월드비전(World Vision), 머시콥스(Mercy Corps),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북식량 지원, 의약품 지원, 농사기술 및 기구지원 등 다양한 대북지원을 1990년대 중반 이래 진행하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자신들의 종교적 색채에 대한 북한당국의 초기 거부감에도 장기간에 걸친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북한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교 및 자선 단체로부터 확보한 자체적 기금을 갖고 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북-미관계의 전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당국과의 안정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내 사업현장 방문 및 주민과의 접촉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북한사회 내부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깊이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단체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 주민의 빈곤상태, 영유아들의 영양실태, 복지제도의 운용실태 등 주로 경제 및 사회 분야 정보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민심이나 한국 및 미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 등 다양한 부수적 정보들도 함께 접할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관료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친분관계를 통해 때로는 북한권력 내부의 움직임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정보도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인프라 시설, 운송체계, 전력 상황 등은 정부주도 정보공동체의 TECHINT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되지만, HUMINT에 의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이들이 가장 뛰어난 정보력의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북한당국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유출을 절제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대외적으로 과도히 홍보하는 것도 회피한다. 이들은 또한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의 NGO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수행하며 대북정보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대북정보교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UNDP, UNICEF, FAO, WFP, WHO, UNPFA 등 UN 산하단체들이 상주한다. UNDP는 경제발전, 농업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환경개선 등 다양한 대북지원 활동을 주도하며, UNICEF는 양수 시설 지원 및 위생 관리를 UNPFA는 북한당국과 함께 인구주택 조사를 해오고 있다. UNPFA가 수행한 인구조사나 WFP, WFO, FAO 등의 식량 실사 등은 북한사회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인구 구성 및 식량 상황 등과 관련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정보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과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계를 통해 이들로부터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하위정치 영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한다. 가령 미국의 대북식량원조사업을 담당했던 WFP는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대북정보교류협력하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UNDP의 대북지원 또한 미국정부의 모니터링 하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UNDP와 미국정부 간의 자연스러운 대북정보교류가 뒤따랐음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편,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보수집은 미국 내 인권 NGO 단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휴먼라잇워치(Human Right Watch),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 외에도 한인교포들이 주도하는 미주 한인교회연대 (Korean-American Churches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 KCC)와 북한내륙선교회(North Korea Inland Mission) 등이

인권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인권단체의 다수는 미국정부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연방예산으로 운영되는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미국민주주의 재단)가 주로 담당한다. 미국 국무성 또한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NED는 미국 내 대북인권 NGO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인권 NGO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NED의 지원을 받는 국내 단체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 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DailyNK,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및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비교적 활발한 정보교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대북 인권정보 분야는 민·관 협조체계 또한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미국 내 대북 인권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인권정보를 중심으로 북한 실태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대북선전방송에 활용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한국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구확대를 꾀하고 있다. 북한 내 정보원, 조선족 사업가, 중국 내 탈북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보되는 대북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간헐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조직의 목적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대북 선전매체로서의 특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 소 결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민간 영역의 정보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민간 영역과 정부 관련 부처와 정보공동체가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자연스럽게 확대해 왔다. 특히 인권 및

탈북자 관련 분야에서는 정부-민간 정보협력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군사, 정치, 외교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 정보공동체가 거의 독점적 정보생산의 지위를 보존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과의 교류 또한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6-1>은 미국정보공동체의 북한정보 역량을 수집, 분석, 활용 분야로 구분하여 도표화한다. 정보수집 차원에서 미국정보공동체는 대북 TECHINT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HUMINT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CIA와 DIA 등을 중심으로 HUMINT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부소속의 정보공동체는 군사, 정치, 외교 등 상위정치 영역의 정보수집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하위정치 영역의 정보수집은 미국 내 NGO들 및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보분석 영역에서는 복수의 정보기구들 간의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분석력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북한정보 관련 전문분석가의 수적 제한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분석 역량 확보에 부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 활용 차원에서는 정부 정보공동체는 주요 취급 대상인 군사와 외교정보 등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대외정보공개에 소극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인권,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정보-정책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민·관 정보공유협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표 6-1> 미국정보공동체의 북한정보활동 현황 및 평가

구분	현황	평가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INT의 정보가치 강조 -TECHINT는 주로 국방성 산하 정보 기구들이 주도 -HUMINT 활동은 제한적 -CIA와 DIA는 최근 HUMINT 활동을 증대 -OSINT수집 노력 강화 -정부소속 정보공동체는 정치, 외교 등 상위정치 영역의 정보수집활동에 주력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하위정치영역의 정보수집은 국제기구 및 NGO가 더욱 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INT의 과신 경향 -HUMINT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진 -HUMINT 역량 증대를 위해 한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 도모 -상위정치 영역의 정보수집활동은 보안 이유를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 -정보수집을 위한 민·관협력은 하위 정치 영역에서 활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INT 위주의 분석에 주력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분석 수행 -전반적으로 높은 분석 역량 보유 -복수의 정보기구들 간의 경쟁을 통한 분석 역량 제고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정보-정책 커뮤니티를 활발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분야의 경우 북한전문가의 질적·양적 부족현상 노정 -정보분석의 정치화 및 경직된 대북 인식론의 문제점이 일부 존재 -하위정치 영역의 경우 분석의 상호 검증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대민정보협력은 소극적 수준을 유지 -특히 정보기구가 확보하는 군사정보 등의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 -OSINT의 민·관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대북 정보-정책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전문가들 사이에 적극적 상호 정보교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ld Factbook 등을 통해 제시되는 북한정보는 양적·질적으로 제한적 -상위정치 영역의 정보는 정보원 보호 등을 이유로 극히 일부만 정보공동체 밖으로 유출 -민·관정보협력은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

3. 한·미 북한정보 협력방안

가. 한·미 북한정보 협력현황과 문제점

탈냉전 이후 전이하는 범세계적 안보환경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성격 및 북한의 위협 수준에 대한 재고를 초래하여 왔다. 냉전의 전초지로 인식되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에 변화가 초래되고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한군사위협의 의미 또한 축소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그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정치·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제적 위상 증대를 토대로 한국사회는 북한을 기존의 대결 상대가 아닌 통합의 상대로 이해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상이한 대북 인식론의 전이는 과거 공동의 적이었던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조에 부분적 파열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현실적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민족통일의 달성이라는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포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개발 등 위협요소를 지닌 적성국가로서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은 양국관계에 간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여 왔다. 긴장과 갈등의 생성은 전이하는 시대 및 지역환경의 불가피한 소산물이며 이들 긴장과 갈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율하는가는 양국에 남겨진 현재 및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부침은 한·미 간 대북정보교류협력에도 영향을 파급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높은 대북 TECHINT의 경우 양국정부 간 관계의 부침에 따라 양국 간 정보 협력수준도 영향을 받아왔다. 노무현정부-부시행정부 기간에 표출되었듯이 양국정부 간의 거북한 관계는 양국 간 대북정보교류 협력관계를 위축시킨 바 있다. 지난 시기의 한·미 간 대북정보교류 협력관계를 돌이켜보면 절대 원만하지 않았던 시기들도 존재하고 있다.⁴³³⁾ 황장엽과 같은 북한체제 주요 인사의 한국 귀순이 이루

433) Donald Kirk, "Rift Seen in S. Korean and U.S.'s Intelligence Sharing," *Christian Science Monitor online* (March 11, 2004), <http://www.gol.com/users/coynerhm/rift_seen_in_sskorean_and_us_intel.htm>.

어졌을 때 미국 정보당국의 신속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일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미 간 대북정보교류협력은 이러한 간헐적 불협화음에도 질적 및 양적으로 꾸준한 개선의 과정을 밟아왔다. 현재 한·미 양국의 정보교류 협력현황은 비교적 원만한 양국 간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보교류가 최근에 활성화된 데는 기존의 비대칭적이던 한·미의 정보력 격차가 현저히 개선된 사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미 간 북한정보공조는 공조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대북정보의 일방적 제공의 형태를 취해 왔다. 대북정보와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ECHINT 영역은 고사하고 HUMINT 영역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남북관계교류가 극도로 단절되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측의 북한방문자 수가 한국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전환을 맞이한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경제의 악화에 따른 탈북자의 남한유입 증대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남북접촉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대북 HUMINT 영역에서 정보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기 시작한다. TECHINT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미 의존적 관계가 지속하고 있지만 HUMINT 영역의 경우 한·미 간 정보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야기된다. HUMINT 영역에서의 한국의 역량증대는 한·미 간 정보협력의 비대칭성을 개선하면서 양국이 실질적으로 정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의 대북정보 역량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왔음에도 양국 간의 대북정보 역량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TECHINT 분야의 기술력 확보와 이를 위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단기일 내에 해소될 수는 없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미국의 정보지원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이 TECHINT를

한국에 전달하는 주요 채널은 청와대,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등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각기 미국 측 파트너로부터 북한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TECHINT를 제공받는다. 북한군동향 등과 관련한 세부 군사정보는 한·미연합사의 주례 회의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ECHINT 분야의 한·미정보 협력의 문제점은 미국이 일방적인 정보 공급자인 상황이어서 정보공급의 수준을 미국의 호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TECHINT를 어느 수준까지 한국에 제공하는지는 한국 측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선별된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울러 TECHINT가 미국으로부터 분석 가공된 결과물의 형태로 한국에 전달되는 경우 미국 측 분석자의 가치판단이 게재된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가 또한 논란거리이다. 물론 미국 측이 TECHINT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분석력이 취약한 기술 분야는 한국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한편, HUMINT 분야는 양국 간에 더욱 유기적인 협력의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대북 HUMINT 분야는 미국정보공동체의 TECHINT에 대한 압도적 선호, HUMINT수집활동 시의 외교적 논란 가능성, 인종적 및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인해 미국정보공동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역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TECHINT 위주 정보력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HUMINT의 중요성이 미국 내에서 강조되고,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는 철저히 폐쇄적이어서 HUMINT활동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북한사회도 체제이완 및 개방의 변화를 겪으면서 HUMINT활동의 공간을 넓히고 있다. 이에 CIA 등 미국정보공동체는 대북 HUMINT 영역의 정보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UMINT 영역은 한·미 간 정보공조가 TECHINT보다도 폭넓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 모두 일정 수준의 HUMINT 수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느 한 편으로 과도히 치우치지 않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정치, 외교 및 군사 영역을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협력적 HUMINT 활동이 공개되더라도 외교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이점으로 지적된다. HUMINT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이 이미 상당 수준 확보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황장엽 사례와는 달리 국정원이 특별 관리하는 탈북인사들에 대한 미국정보공동체의 접근 허용 및 정보 공유 등은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간 정부 차원의 정보협력이 논의될 때 기술적 어려움 중의 하나는 미국은 다수 정보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하 DNI) 및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가 이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한국의 청와대나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세계 전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에는 북한정보의 비중이 총 정보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며 그 가치 또한 축소평가되고 간과될 여지가 있다. 한국이 미국의 다수 정보기관들과 직접적 연계구도를 갖는 경우 정보교류의 폭과 깊이는 현저히 확대될 수 있다. 미국정보공동체 내 다수의 기관이 상호경쟁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직접적 협력관계 형성은 미국이 확보한 다양한 시각의 대북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미국은 백악관 내의 최종 정보판단도 다양한 부서 간의 경쟁적 논의구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⁴³⁴⁾ 더욱 원활한 대북정보 협력을 위해 미국의

434) 백악관 내 최종 정보판단 및 정책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5개부서는 CIA, Joint Chief of Staffs, 국방성, 상무부 및 국무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 견해를 갖는 경우 백악관의 결정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만, 견해가 분열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백악관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CIA, Joint Chief of Staffs 및 국방성은 북한 관련 정보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를 표출하는 경향이 큰데 반해 국무부가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들 사이에서 상무부가 중도적 견해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2011.8.

여러 정보기관과 어떻게 다각적 연계구도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 측 검토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미 간 정부 차원의 정보협력은 TECHINT 부문보다는 HUMINT 부문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양국 간 정보협력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TECHINT 부문에서는 정보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TECHINT 부문에서 자체적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추가 위성 발사, 조기경보기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미국과 상호보완적 대북정보교류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HUMINT 부문의 한·미 간 대북정보협력은 수집·분석 및 활용 영역에서 다양한 증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영역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모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MASINT 등 TECHINT의 일부 부문에서 한국의 분석 역량이 취약한 것 또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한·미 간 민간 차원의 대북정보협력은 경제, 사회, 인권 등 포괄적 영역에서 다양한 기구 및 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차원의 대북정보협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권 분야는 한·미양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국제적 사안이라는 성격 때문에 정보공조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한국의 일부 인권관련 민간단체가 미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있는 미국 내 인권단체와 자연스러운 연계구도를 형성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미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민간단체들이 규합하고 상호협력하는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

반면 한·미 양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경제지원 단체들 간의 정보협력은 인권단체보다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인도주의적 경제지원 단체가 정부 지원금보다는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나 이들이 다른 종교적 정파성을 보유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당국과의 신뢰 문제

때문에 집단적 정보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은 상호 긴밀한 정보 협력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말미암아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적 변수는 이들 단체의 대북정보협력의 필요성을 저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대북지원 사업이 확대될 때 대북정보협력의 동기 또한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의 학계 및 연구소들 간의 북한정보교류는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양국 간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적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 중 상당수가 전시성 형태의 행사 위주로 진행되어서 그 내실은 제약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매번 제한된 수의 동일한 성향의 양국 학자들만의 모임으로 진행되는 교류 현실 속에서 과연 열린 형태의 북한정보교류가 가능할 것인지의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학계 및 연구소가 보유하는 정보는 대부분 타 정보원들로부터 전달받은 2차 정보여서 정보의 자체적 희소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들은 주로 정보분석 및 활용 차원에서 기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확고한 전문성을 지닌 북한정보분석가가 양국 모두 수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시급한 극복 과제로 지적된다. 부족한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 간의 공동분석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그러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나. 한·미 북한정보협력 및 개선방안

북한정보를 둘러싼 그간의 한·미 간 협력의 특징은 양국 간의 비대칭성이며, 특히 TECHINT 영역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할 수 있다. TECHINT는 첨단기술력 확보와 현저한 재정적 비용의 감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한국은 조기경보기의 도입 등을 통해 TECHINT 역량의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도움 없는 독자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다. TECHINT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분석 역량 자체가 현재로서는 결여되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TECHINT와 관련한 한·미 간의 공조는 먼저 한국에 제공되는 TECHINT의 양과 질의 제고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더불어 양국 정보교류담당자들 간의 효율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보교류담당자들 간의 파트너십 이완 혹은 이로부터 파생되는 상호불신은 양국 간 정보공조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주된 현실적 요인을 구성한다. 한편, 각기의 독자적 전문 분야를 지니는 NGA, NRO, NSA 등 미국의 TECHINT 담당 정보기관들과 우리 정보기관의 직접적 협력관계는 현재 매우 취약하다. 이들 TECHINT 기관들과의 직접적 연계협력구도를 확장하는 우리 측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TECHINT의 수집·분석 기법 등에 대한 다각적 교육지원 등도 미국 측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TECHINT의 역량 강화는 꾸준히 도모되어야 하지만 비용대비 효율성을 고려할 때 TECHINT에 대한 조건없는 투자는 비현실적이고 또한 불가능하다. 장기적 개선방향은 한·미 간 대북 TECHINT의 분담체계를 향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맞춰져야 한다. 대북 TECHINT의 국가적 자립 역량 확보에만 과도히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적 유용성이 크고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TECHINT 영역에 우선적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모색하는 전략적 계획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TECHINT의 역량 강화가 단시일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의 미래 한·미정보협력 로드맵이 구상되고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 HUMINT의 공조체제는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수집 영역에서 양국의 정보기

구들이 HUMINT의 공조체제를 갖는 것은 정보원의 보호나 사후의 정치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양국의 정보기구가 HUMINT수집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영역은 폭넓게 남겨져 있다. 특별 탈북자의 공동정보관리, 북한 내 고위급 정보공급원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중국 내 북한정보수집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 등 협력관계는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한편, 하위정치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민간단체들의 HUMINT 활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여기에서 정제된 HUMINT를 양국정부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정부가 상대방 민간단체들에 교차지원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양국 간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물론 민간단체의 HUMINT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은 정치적 혹은 정권 자체의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에서 생성되는 HUMINT가 내용적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양국정부의 공동평가 작업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보분석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양국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분석 역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됐지만 분석 역량 제고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다. 분석전문가의 확보는 통상 장시간의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계 전 지역에 걸친 포괄적 정보를 담당해야 하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업무 특성상 충분한 자질을 보유한 북한정보전문가의 수적 확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는 수적으로 북한정보전문가의 규모가 미국보다는 크다고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한 인력이 적정 규모 존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정보분석 분야에서 양국정부 간 협력관계는 제한적이다. 민간영역도 일부 협력관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진한 수준이

다. 양국 간 협력은 분석 분야 내에서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유한 분석 물의 교환이 협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계를 제외하고는 분석 물의 교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북정보분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분석 프로젝트 추진이나 전문가교류 프로그램 등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양국 정보분석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양국 간 상호교류된 정보는 통상 보안상의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배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양국 간 정보공개의 기준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 등도 공동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형성한다. 교류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공개의 기준 조율이나 정보공개 시스템의 보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구들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구심을 초래한다. 정보의 기밀성 보호를 위해 정보를 누출자에 대한 장기간의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정보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도 양국 간의 정보보안 문제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은 주제가 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반면 하위정치 영역의 대북정보가 양국 간 민간 차원에서 교차 활용되는 현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학계, 정계 및 NGO 인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도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간 대북정보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류가 내용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양국 참여자의 범위 확대 등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 차원의 정보교류에 참여하는 대북전문가들의 인적 풀이 점진적으로 넓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국 내 소수 학자, 관료 및 NGO 인사들에 의해 대부분의 대북정보교류행사가 주도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소수의 동일한 인사들의 모임이 반복되다보니 집단사고(group think)의 경향도 나타나서 열린 형태의 북한정보교류에 역기능적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시각들을 지닌 폭넓은 인적 풀의 참여를 담보하는 대북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자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양국정부 또한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간 원활한 정보교류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그 주변환경변수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공고한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정부 간의 불협화음과 불신은 불가피하게 양국의 정보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국가적 이해를 가진 한·미 양국의 관계가 동맹이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조화로울 수만은 없다.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치·외교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불협화음이 야기할 때 양국 간의 정보공조체제가 이러한 환경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관행을 정착시키고 협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정부 차원 정보교류의 핵심적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는 양국 정보교류 담당자들의 파트너십은 이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보교류담당자들 간의 이완된 관계나 상호불신 등이 야기될 때 정보공조체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국 정보교류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제고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정보협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 북한정보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쇄적인 북한이 열리게 된다면 양국의 대북정보 역량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북한정보는 북한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역설적이지만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북한정보는 북한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체제에서 밖으로 이끌어낼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⁴³⁵⁾

이는 닫힌 북한체제를 열리게 유도하는 대북정책이 한·미 양국의 북한

435) Arnold W. Nash and Naval Postgraduate School (U.S.), *Intelligence Reform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p. 80.

정보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적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북한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해법은 어쩌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안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2> 한미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정보활동 구분	현황	개선방안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INT의 경우 한국의 높은 대미 의존도 -HUMINT는 미국이 탈북자 정보 등 한국에 일부 의존 -정보기술 및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양국 간 수집 분야의 협력은 제한적 -양국정부 간 협력은 북한 관련 군사, 정치, 외교 영역에 집중 -NGO, 학계 등 민간 영역의 협력은 경제 사회 인권 등 하위정치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TECHINT 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 모색 -양국 간 HUMINT수집을 위한 유기적 공조체제 추진 -하위정치 영역의 대북정보수집 역량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교차 민·관 협력 활성화방안 강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정부 간 정보분석 수준의 협력 관계는 제한적 -양국 모두 전문성을 보유한 북한 정보분석 인력이 부족 -특히 TECHINT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한국의 분석 전문성 취약 -학계 및 NGO 수준에서는 양국간 일부 협력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대북정보분석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방안 강구 -양국 간 공동분석 프로젝트 추진 및 활성화 -양국의 대북 정보·정책 커뮤니티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간 정보공개 기준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공동 정보활용의 어려움 존재 -정보의 보안성 유지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배분상의 어려움 존재 -하위정치 영역의 대북정보 교차 활용은 양국 간 민간 차원에서 증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주요 기구 간 대북정보 조율 노력 강화 및 시스템 보완 -한·미 양국의 대북전문가들 사이의 적극적 교류를 도모하는 대북정보 정책 커뮤니티의 활성화

Ⅲ.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가. 중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국외정보

마오쩌둥(毛澤東)이 통치했을 때까지 중국이 서방의 강력한 제재정책에 직면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폐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부세계와 중국 사이의 접촉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와 중국과의 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외부세계의 변화가 중국에 주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소련에만 2차례 방문했을 뿐 국외 순방을 하지 않았고 대내문제에 집중했다. 외국과의 관계는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천이(陳毅) 등에게 전면에 나서서 처리하도록 했다. 외부세계의 변화와 국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두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대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한 뒤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전개해 왔다. 1차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외교 신뢰를 강화하고 점차 안보관계도 개선해 왔다. 그리고 중국은 1960년대 이래 국경충돌로까지 악화하였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북방 지역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을 완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에너지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4개의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목표의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증시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국가 간 경제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경제발전이 국가와 사회안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국과의 관계를 증시하고 있으며, 국제경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성장을 위해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지역 등으로까지 외교활동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형태의 ‘중국위협론’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이후 중국은 ‘조화세계론(和諧世界論)’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 구축을 주창하고 있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중국 견제 정책을 완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변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우려와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중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 간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과 환경오염, 테러, 기후 변화, 보건위생문제, 해적, 초국가적 범죄, 자연재해 등 다양한 비전통 안보위협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⁴³⁶⁾

이처럼 중국이 지니고 있는 국가안보 위협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의 국외정보 관련부서들이 역점을 두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지역과 영역들은 미국과 대만을 비롯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주변 지역들이며 원유를 비롯한 전략자원 등 경제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일본에 각각 5개와 6개의 가장 많은 총영사관을 개설하여 주재국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진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36) 楊潔篪, “當前國際格局的演變和我國外交工作,” 『國際問題研究』, (2011.1) pp. 1-4; 中華人民共和國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 『新華社』 (2011.3.31).

세계체제에 중국이 더욱 편입되면서 외부세계의 변화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국외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국외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 국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맡은 중국사회과학원과 국가안전부 등 기관이 설립된 것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1970년대 말 이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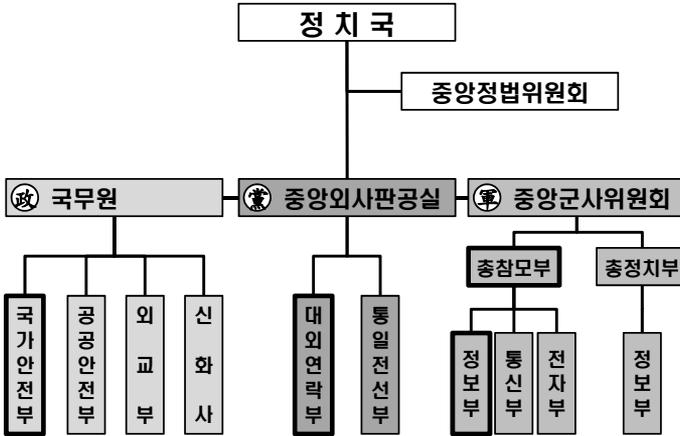
나.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서 국외정보관리업무는 공산당 정법계통(政法系統) 관할하에 속해 있다. 정법계통의 지도 및 감독하에 수집되는 국외정보를 바탕으로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상무위원회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정책이 최종 결정된다.⁴³⁷⁾ 물론 정치국(상무위원)회의에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 이전에 서기처 내 당 중앙 외사판공실에서 관련 당·정·군 관련 부서와 관계전문가의 정보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사판공실 내에는 국무원 국가안전부, 상무부, 외교부 등 주요 국외정보 관련 부서의 일부 핵심 실무자들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당 중앙의 업무지침을 통보하고 각자 부서에서 보고되는 정보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를 담당하는 당 중앙 대외연락부도 직접 외사판공실에 국외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부의 국외정보 수집·분석 핵심 담당 부서는 총참모부 2부(정보부)이며, 통신부와 전자부가 국외기술정보수집을 관할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그림 6-2> 참고).

437)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Second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pp. 8-20.

(1) 국외정보 수집·분석

<그림 6-2>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가) 당 정보계통

중국공산당의 국외정보 수집·분석을 총괄하는 임무는 정법계통이 맡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 정법계통 책임자는 저우용캉(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당내 국가안전과公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실제 국외정보 실무는 당 중앙 대외연락부(중련부)가 맡고 있는데,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과 소련붕괴 이후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국외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임 대외연락부 수장은 현재 중난하이에서 외교·안보업무를 총괄하는 다이빙귀(戴秉國) 외사판공실 주임이 맡았으며,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왕자루이(王家瑞)가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 중앙외사영도소조(국가안전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온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은 중국공산당 핵심 간부다. 대외연락부의 지도부는 부장 이외에 5명의 부부장과 2명의 부장조리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연락부는 판공청, 연구실, 의전국, 간부국, 기관당위원회, 정보편찬실 등 기능담당 부서와 8개의 지역담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공청은 부서 내부 정무와 기관행정사무를 종합 조정·관리함으로써 지도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실은 국제정세와 세계 정당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며 부서 내 조사연구 업무를 조정하고 대외학술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정보편찬실은 대외연락 및 조사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문제와 세계 각국의 정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초 자료를 편집하고 웹 사이트 정비·구축 작업을 담당한다. 이외에 아주1국, 아주2국, 서아시아·북아프리카국, 아프리카국, 남미국, 동유럽·중앙아시아국, 미주국 및 서유럽국 등 8개의 지역국을 두고 있다. 이중 아주2국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와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의 정당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국외정보 연구 분석, 교육 및 정책자문 기관으로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가 있다. 직접 국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중국공산당과 정부기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교육 및 정책자문을 통해 국외정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공리(宮力)인데, 그는 과거 한·중 전략대화에도 참여한 바 있는 미국문제에 해박한 국제문제전문가이다. 동 연구소 내 미국전문가로는 류지엔페이(劉建飛) 교수가 있고, 현재는 퇴임했지만 장롄구이(張璉瑰) 교수가 한반도문제를 담당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민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개혁·개방논단이 중앙당교의 산하 기관으로써 중국 국내외 주요 전문가·연구기관과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외곽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2005년부터 1.5트랙 전략대화를 개최하여서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특히 개혁·개방논단은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리징티엔(李景田)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중앙당교 교장인

시진핑(習近平)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국가안전부 산하 조사연구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1999년부터 국가안전부와 함께 당 중앙 외사관공실에도 직접 보고하도록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수집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국가안전부 이외에 당 중앙 외사관공실에도 직접 제공하는 한편, 추이리루(崔立如) 원장이 당 중앙 외사관공실과 정치국 회의에 종종 참여하여 국외 정세 판단과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³⁸⁾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정책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당 직속기구로 <인민일보>가 있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 걸쳐 국외 지사를 설치하여 국외 사정을 국내에 보도하는 언론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외정보를 수집하여 당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인민일보> 기자들은 국외 주재 중국공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재국 여론주도층과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 국무원 정보계통

국무원 직속 정부부처의 주요 국외정보 수집, 분석, 활용 부서로는 국가안전부와 공공안전부(공안부), 외교부 그리고 상무부 등을 들 수 있고, 신화사도 부급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정부의 첩보기관이면서 정치보위 기관이기도 하다. 1983년 7월 당 중앙조사부를 주축으로 하여 공안부의 방첩 부문 그리고 중앙 통전부와 국방과학공업위원회의 일부 부서를 합병하여 설립했다. 1990년대 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경후이창(耿惠

438) 김흥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09-08, 2010.6), p. 28.

昌)이 부장을 맡고 있다. 국가안전부가 발족한 목적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외국인과 내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해짐에 따라 조직적으로 방첩활동을 전개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⁴³⁹⁾

중국 개방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외정보 수집과 내외국인의 감시·통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부도 편제상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안전부는 정보기관이 지닌 특성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15개가 넘는 공작국과 10개 내외의 행정지원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국은 국제정보국으로서 국제 전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3국은 정치경제정보국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4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 전해진다. 5국은 정보분석통보국으로 세계 각 지역과 국내 여러 부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각 부서에 지도·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7국과 8국은 방첩담당 부서로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간첩에 대한 정찰·체포 및 국외 중국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시 및 공작을 담당하며, 9국은 대내 보안정찰국으로 국내 첩보기구에 대한 방첩 및 중국 주재 외국 기관·인사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국은 국외주재 중국공관에 대한 안전업무와 국외 유학생과 국외 중국인에 대한 지원 및 감시활동을 맡고 있다. 16국은 각국의 영상정보와 위성정보 판독을 담당하고 있다.

11국은 국외정보 자료의 수집, 연구, 분석업무를 맡는 전문부서로써 외부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1999년부터 당 중앙 외사판공실에도 국외정보를 직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⁴⁴⁰⁾ 연구·분석업무를 위주로 하면서 외국의 전문연구기관과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고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부는 중국주재 외국공관과 공식·비

439) 김태호, “중국의 정보보안체계,”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 501.

440) 중국주재 공관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관원들은 공식적으로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

공식 접촉을 통해 정보교류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호텔과 공관 등 공공시설 등에 비밀 설치된 전자감청시설을 통해 중국 내 외국기와 기업인 등 외국인과 반체제인사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도 국가안전부가 책임을 담당하는 업무 분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부는 정보수집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내 반체제인사와 시장(티베트)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독립운동 동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공안부 및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⁴⁴¹⁾

중국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안전부 요원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언론계종사자, 학자, 상인, 심지어는 정치적 망명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국외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화사, 중국통신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국제교류협회, 중국국제여행사 가이드 그리고 중화무역공사, 선전 전화호텔(振華賓館) 직원 중 상당수가 국가안전부 요원으로 알려졌다.⁴⁴²⁾

외교부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국외에 설치된 170개가 넘는 공관을 통해 주재국의 정세와 동향을 수집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파견된 중국의 외교관들은 주재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받은 정보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외 공관에는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만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부, 상무부, 교육부, 문화부 등 수많은 단위의 요원들이 파견되어 역할분담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한 직속기관으로 국제문제연구소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 국외 공관 주재 이후 임시 귀국한 외교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국외정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외교부와 중앙외사관공실 등에 전달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중국과 외국 간의 경제교류협력 업무를 다루는 경제부서이기 때문에 대외무역과 국제경제 협력 및 대외투자와 원조 등에 관한

441) 北國研鑿, “中國國家安全情報,” <<http://bbs.tiexue.net/bbs32-0-1.html>> (검색일 2011.8.22).

442) 1999년 중국 국무원은 과거 국가안전부 산하 기관과 단체들을 국가안전부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들 기업과 단체에서 일부 국가안전부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체제적인 정보와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상무부도 중국 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타 부처와 달리 다수의 국외 주재 상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무부의 국외 주재 상무관이 주재국의 경제무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에서 국외 시장의 중요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경제·무역 관련 정보획득 분야에서 상무부가 차지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다) 군 정보계통

중국 군사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정보 수집·분석담당 부서는 총참모부 2부와 3부 그리고 총정치부 내 연락부이다. ‘중국의 CIA’로 지칭되는 총참모부 제2부가 중국의 국외군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양후이(楊暉)가 책임자로 있다. 외국에 신분을 위장한 요원을 파견하거나 국외주재 공관에 무관을 파견하여 공식·비공식루트를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하며, 국외의 공개 출판물에 등재된 군사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군사정보가 극도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군사정보에 대한 비밀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총참모부 2부 내에는 군사전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특별히 특사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활동하는 요원들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처에도 여러 개의 소조(T/F)가 있는데, 이 중 터키에 본부를 둔 소조가 가장 활동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대규모 소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소조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무기기술, 군사사상·군사정책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방면의 정보도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정보는 공개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집하지만, 민감한 정보는 비밀공작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중국군 총참모부는 군사기밀수집을 위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난징의 교학원(최근 인민해방군 국제관계학원으로 개칭)을 두고 있으며, 첩보기

술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심층적 정보수집을 위해 3개의 정보분석처를 두고 있는데, 4처는 독립국가연합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군사정보수집을 전담하며, 5처는 미국과 서유럽국가에 대한 군사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6처는 아시아 지역 군사정보수집을 맡고 있다. 5처의 경우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 의회보고서와 랜드연구소의 출판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업무로 알려졌다.⁴⁴³⁾

총참모부 2부 내에는 국외 군사정보에 대한 연구, 기획,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처(7처)를 신설했는데, 첩보 장비를 개발하는 제58연구소, 기술지원장비 생산을 위한 베이징 전자공장과 하이어우전자설비공장(海驅電子設備廠), 제57연구소 그리고 북방교통대학 컴퓨터센터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이 외에도 총참모부 제2부는 주요 국제안보문제 연구와 정책자문 및 대외학술연구 교류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민간형태의 중국국제전략학회를 두고 있으며, 마샤오텐(馬曉天)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회장을 맡고 전현직 고위 군 간부와 민간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참모부 3부도 군사정보활동을 담당하는데, 주요 임무는 신호정보에 대한 감청활동이다. 변경 지역과 연해 지역에 설치된 수많은 감청시설을 통해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베이징 서북부 지역에 사이버통제센터를 가동하여 전자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이, 칭다오, 주하이, 하얼빈, 칭다오 등지에 3부 지역총부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주요 감청센터가 있다. 각 지역 군구사령부 3국(감청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있다.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3부 내 정보요원들은 24시간 외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국제전화 및 전자우편(e-메일)을 감시·감청하고, 최근에는 유무선 사이버공간에 대한 감시활동이 주 업무로 추가되었다. 미국 군사위성에 대한 감시활

443) “中國神秘的禁區部門—解放軍總參2部3部(和國安部)” <<http://www.douban.note/164454819>> (검색일 2011.9.3).

동까지 전개하고 있고,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서사군도의 중린
 다오(中林島)에도 감청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⁴⁴⁴⁾
 워양외국어학원이 총참모부 3부 담당하에 설치되어 국외 군사정보 정탐
 을 위한 외국어 요원양성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총정치부 연락부도 군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부서 중의 하나로
 써, 설립 초기에 ‘적공작부(敵工部)’로 활동하였으며, 대만국민당에 대한
 침투·교란업무를 담당해 왔다. 산하에 연락국, 조사연구국, 변방국, 대외
 선전국 등 4개의 단위 이외에 상하이와 광저우 분국을 거느리고 있다.
 조사연구국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
 고, 중국인민대외국제우호연락회를 통해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평화와 발전연구중심도 총정치부 연락부 소속기관으로 국외 군사안
 보문제를 연구하고 대외학술교류협력 업무를 진행한다. 대외선전국은 중
 국군의 대외선전홍보활동을 담당하며, ‘대만의 소리’ 방송을 운영하고 있
 다. 변방국은 베트남과 같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공작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⁴⁴⁵⁾

(라) 민간 부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서방세계로부터 고립을 당하여 중국은
 당·정 외교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아 인민외교를 중시했다. 중국인민대
 외우호협회, 중국국제교류협회, 중국국제우의촉진회 및 중국국제인재교
 류협회 등을 창설하여 정부와 집권당의 이름을 내걸고 전개하기 어려운
 국제교류를 진행해 왔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중국정부와 공산당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민간기구로서 외부세계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외부세계와 정상적인 교류를 전개함과 동시
 에 비공개적으로 국외정보수집활동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44) “中國神秘的靜臨門—解放軍總參2部3部和國安部” <<http://www.douban.note/164454819>> (검색일 2011.9.3).

445) 김태호, “중국의 정보·보안체계,” 문정인 편저, 『국가정보론』 p. 508.

국가안전부와 군 총참모부 등 정보요원이 이들 단체의 구성원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기 반공식적인 기구 이외에도 중국은 수많은 기업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국제여행사, 중국투자공사, 중화무역공사, 선전 전화호텔(振華賓館), 전화(振華)공사, 베이징 연산(燕山)호텔, 원동집단, 중국 전화수출입공사, 푸저우 신다(新達)무역유한공사, 샤먼 중국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시쌍반나(西雙版納) 상무공사, 홍콩 화룬(華潤)그룹, 신광(新光)수출입공사, 티엔룽(天龍)공사, 푸웨이(賦維)투자공사, 방마오(邦貿)총공사 등이 실제로는 중국정보 부처의 직간접적 담당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당과 기업, 정부와 기업의 분리조치에도 중국의 국유기업에는 여전히 당조(黨組) 서기를 두고 있으며, 당조 서기 지시 아래 중국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이 국외정보수집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국외에 파견·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교수, 기업인들도 중요한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외 주재 중국공관의 교육참사관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을 만나 주재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재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대표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과 주재국 국민의 정서를 중국공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수천만 명에 달하는 화교사회를 통해서도 국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외에 망명한 중국인들까지도 외국정보수집에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⁴⁴⁶⁾

(2) 국외정보활용

중국이 개방화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외정보관리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대되었다. 중국

446) 北國研警, “中國國家安全部解密,” <<http://bbs.tiexue.net/bbs32-0-1.html>> (검색일 2011.8.22).

은 당·정·군의 공식·비공식 정보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통해서도 국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수집된 국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대외정책 결정시스템(국외정보활용체계)의 체계화·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중국의 주요 대내외정책 결정권한은 공산당에 있지만, 국무원과 군부 등 유관 부문의 협조를 거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화·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외부에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과 같이 여전히 정보통제조치가 강하게 취해지고 있는 국가의 국외정보수집 및 활용 시스템을 외부에서 투명하게 탐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국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단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당, 정부, 군부소속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국외정보를 1차적으로는 소속기관에 직보하고, 이들 각급 정보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연구·분석부서에서 분석·취합하여 문서 및 구두 형태로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중국공산당의 경우, 중앙 대외연락부의 지역담당 부서와 연구·분석 담당자들이 정보를 분석한 뒤 보고서 형태로 서기처 산하 외사판공실에 직보하며 공산당 서기처와 정치국 위원들에게도 구두 및 서면 형태로 국외사정을 설명·자문하고 외국 정당과의 교류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교의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당과 정부 간부들에게 국제전략문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당교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치된 중국개혁개방논단은 왕지쓰(王輯思) 등 고급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단 이사장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인 리징티엔(李景田)을 통해 차기 국가주석으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등 당 중앙서기처와 정치국 구성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국무원에도 국가안전영도소조를 두고 있고 외교부와 상무부 및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국외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는 부서들이 있다. 국가안전부, 외교부, 상무부 등 행정 부서는 당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해당 부서의 정보분석 단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정책건의를 국무원 판공실 및 국가안전영도소조 그리고 당 중앙에도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당 중앙서기처 소속의 외사판공실에 해당 부처 파견 관료들이 있고 해당 부처의 장이나 정책담당자가 직접 당 중앙외사영도소조 회의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보고를 하는 때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군부 내에도 군사정보를 다루는 부서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참모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총정치부 연락부에서 수집·분석한 국외군사정보와 기밀 자료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직보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외 군사정책과 전략방침이 결정되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부 조직이면서 동시에 당 중앙기구이기 때문에 군 관련 정보기관에서 수집·보고되는 국외군사정보는 당 중앙에도 전달된다. 귀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위원으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며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군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마샤오텐 부총참모장이 중앙외사영도소조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군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국외군사정보가 곧바로 당 중앙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9명의 정치국상무위원 또는 25명의 정치국원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⁴⁴⁷⁾ 당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는 정치국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물론 정치국(상무위원)회의에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올리기 이전에 서기처 내 당 중앙 외사판공실

447)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Second Edition*, pp. 8-20.

이 당·정·군 관련 부서와 관계 전문가의 정보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 중앙외사관공실에 중국의 각급 국외 정보들이 집중되며, 여기에서 종합된 정보보고와 의견이 정치국회의나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 뒤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결정된다.

2.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현재 중국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평화발전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이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 왔으며, 2010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며 한·일뿐만 아니라 대만까지도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미·중관계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 실험과 같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⁴⁴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를 4개의 중요한 전략지대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중 동북아를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직결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동북아

448) 古用成遠, “朝鮮處理國際問題行爲方式及中國의 對策,” 『理論觀察』, 2010年 第4期 (2010.12), pp. 74-75; 李開盛, “一分爲二看朝鮮” <<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일 2010.10.8).

의 한가운데에 있고 북한은 중국과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전략 이익에서 북한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⁴⁴⁹⁾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외교·안보 공세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중 군사적 견제정책이 심화되는 등 미·중 간 안보적 대결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10년 미 항공모함 서해 진입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나타났고,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 남중국해의 향해 자유 문제에 대한 개입입장을 천명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중·일 간 댜오위섬(釣魚島) 영유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였다. 미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⁴⁵⁰⁾ 이러한 미·중 간 긴장 분위기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전략가치를 더욱 중시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는 안보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⁴⁵¹⁾

이와 같은 대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중국이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목표는 첫째,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고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며 둘째, 자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며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⁴⁵²⁾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 심화는 곧바로 중국 동북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북한이

449) 朱聽昌,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北京: 時事出版社, 2002), pp. 34-45.

450) 王帆, “美國的東亞戰略與對華戰略,” 『外交評論』(2011.6), pp. 19~28; 黃鳳志, 呂平, “中國東北亞地緣政治安全探析,” 『現代國際關係』, (2011.6), pp. 36~41, p. 62;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夥伴關係論析,” 『國際問題研究』, (2011.1), pp. 45~51.

451) “爲什麼中國不能放棄對北韓的支持?” <http://www.zaobao.com/forum/pages4/forum_us110901a.shtml> (검색일 2011.9.1).

452) 신상진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1), pp. 38-52.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보면서도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하여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최소한도의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질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국 내에는 북한을 자산으로써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201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에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한 바 있고⁴⁵³⁾ 2010년 이후 김정일의 4차례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북부 지역 연계 개발에 합의하였다. 북한체제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비롯하여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접경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중국의 세력권 내에서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북한과 정치·경제·안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이유는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 가지는 전략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내부동향과 대외행보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과 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이 주목한 대사에 중앙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역임한 류홍차

453)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military.people.com.cn/GB/172467/11543524.html>> (검색일 2010.5.7).

이(劉洪才)를 임명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북한과의 당 대 당 접촉을 강화하여 더욱 가치 있는 북한정보를 획득하려는데 있었다.⁴⁵⁴⁾ 중국이 줄곧 북한에 부부장급의 비중 있는 인사를 대사로 파견하고 있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북한과의 정보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중앙당교 산하 연구분석기관인 개혁·개방논단 내에 설치된 3개의 연구센터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평화연구센터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정보획득과 분석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⁵⁾

나.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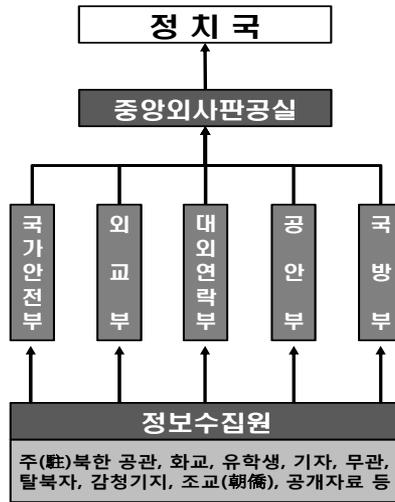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도 북한정보수집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2002년 10월 말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와 정상회담 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실토한 바 있고,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을 때에도 중국은 사전에 이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내부정보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는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북·중 국경선을 넘나들며 무역거래를 하는 수많은 중국인이 있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에 파견된 중국 정보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집권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업 간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정보 수집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엄밀하게 따져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정보 수집·분석 활동은 모두가 당·정·군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식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454) 중국과 북한은 당이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제관계'를 통해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상대방과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455) 중국개혁·개방논단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외에 경제사회연구센터와 미·중전략센터를 두고 있으며, 한반도평화연구센터 주임은 한반도문제전문가인 위메이화(于美華)가 맡고 있다.

구분하여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정보 수집, 분석,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설명하기로 한다(<그림 6-3> 참고).

<그림 6-3> 중국의 북한정보수집체계



(1) 중국의 북한정보 수집·분석

중국의 북한정보 수집·분석 활동 역시 당·정·군 정보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양국 집권당 총서기 등 고위층 간 접촉과 교류를 통해 고급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중국과 북한은 한·중 수교 이후 최고 지도자 교환방문 전통이 7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1999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을 시작으로 최고 지도자 교환방문이 재개되었다. 북·중 최고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 시 양국·양당 간에 논의되어 온 핵심 의제 중의 하나는 자국의 경제, 사회 발전상황을 통보하는 것이었고, 양국은 중대한 대내외 정책을 결정할 때 상대방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에 통보하는 전통을 이어왔다.⁴⁵⁶⁾ 1991년

456) “應中韓總書記邀請金正日總書記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人民日報』(2006.1.19).

북한이 한국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했을 때에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했으며, 2000년 북한이 한국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을 때에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를 사전 통보했다. 2010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시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측에 내정과 외교 중대 문제, 국제 및 지역정세, 치당치국(治黨治國) 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제의했다.⁴⁵⁷⁾ 또한, 2011년 6월 리원차오(李源潮)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방북을 계기로 중·북 집권당 간 전략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중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 고급정보교환이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지도자의 상호교환 방문을 통한 전략적 소통 이외에도 북·중은 정당교류 채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왕자루이 부장이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접촉을 하고 양국 간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자 김정일 총서기와도 접촉을 하고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남 정책 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와 북한 노동당 국제부 간부 간에 긴밀한 접촉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무진 간에는 더욱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실무진과의 긴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은 북한의 내부 정세와 대외정책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외교부보다는 당 중앙 대외연락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정보수집에 대외연락부 채널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⁴⁵⁸⁾

457)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직접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김정일은 이를 부인했다. “胡錦濤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www.people.com.cn/GB/172467/11543524.html>> (검색일 2010.5.7); “胡錦濤與金正日舉行會談” <<http://www.idcpc.org.cn/dongtai/110526.htm>> (검색일 2011.5.27).

458) 북핵문제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은 외교부가 아닌 당 중앙 대외연락부 채널을 가동하여 북한을 설득해 왔다.

주북한 대사관이 중국의 대북정보수집에 핵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채널이다. 중국은 북한에 평양주재 대사관 이외에 청진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류홍차이가 당 중앙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역임한 후 대사로 파견되었으며, 대외연락부에서 파견된 마오웨이청(繆衛誠)이 정당교류를 담당하는 참서관으로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의 대북정보수집에서 대외연락부가 점유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사관 내에는 정치처, 영사부, 무관처, 문화처, 교육조, 과학기술조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외교부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이외에 군부, 상무부, 교육부, 문화부 등 각급 부서 파견 관리들이 근무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외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보기관에서 파견한 요원들이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 지역 방문과 특정인과의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정보를 접하고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⁴⁵⁹⁾

중국은 각종 정부대표단 교환방문 및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서도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당 대표단 이외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문화부, 인민일보, 신화사 등 정부 각 부문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의 접촉을 통해 북한사정을 이해하고, 북한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정보를 수집한다. 중국과 북한의 각급 정부 부처 사이에는 수많은 업무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업무협력 과정에서 북한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⁴⁶⁰⁾

북한에 파견된 인민일보와 신화사 특파원도 중국이 북한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이

459) 전직 중국외교관과의 대화 (1998.5.19).

460) 예를 들면, 중국 공안부와 북한 국가보위부 간에는 국경 지역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업무 수행 시 상호 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1986년)되어 있다.

며, 신화사는 중국 국무원 내 장관급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인민일보와 신화사가 북한에 파견한 특파원들은 단순히 언론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취재한 정보를 참고 자료 형식으로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인민일보와 신화사 내 세계문제연구중심과 국제문제 편집부서에서 북한주재 특파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정보를 가공하여 당과 국무원 정책부서에 배포하고 있다.⁴⁶¹⁾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여행사도 북한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외환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북한이 중국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중국 동북 지역의 중국인들도 북한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 간 교역의 8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동-신의주 통행로 그리고 최근에는 훈춘-나선 육로를 통해 많은 중국인이 북한 지역을 관광하고 있다. 단동 진화(金華)국제여행사가 가장 규모가 큰 중·북 관광여행사인데, 이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부가 국가안전부를 위해 북한정보를 수집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도 북한 지역 관광을 통해 북한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북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시각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와 유학생 그리고 북한 내에 친지가 있는 동북 지역의 중국 조선족들도 중국이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내에는 현재 중국화교가 약 5,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북한에서 무역상의 특권을 누리는 특권계층으로 부패한 북한에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에만 200여 가구에 이르는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 TV 방송을 자유자재로 시청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내 친지들과 큰 어려움 없이 통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친지를 두고 있는

461) 『參考資料』와 『大參考』를 내부회람 자료로 작성하여 중국의 최고지도부와 관리들에게 북한 등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홍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p. 23.

중국 내 조선족과 중·북 국경을 넘나들며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중국 정보부서가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국비유학생으로 파견된 중국 학생들도 평양 주재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북한동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내에는 수십만 명으로까지 집계되는 탈북자들이 있다. 이 중에는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국경선을 넘은 주민도 있지만, 고위군 간부나 정치적 망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탈북자들의 의사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추방형식으로 한국에 보내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심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수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일본주재 중국대사관도 북한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주재국 외교관뿐만 아니라 인민일보와 신화사 특파원 등 언론인 그리고 중국기업들도 대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재국 정보수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남북통일 관련 다양한 학술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재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하는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주재국 대사관과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정보요원들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북한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 동향을 수집하는 ‘백색 정보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⁶²⁾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국에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기술정보망을 가동하여 북한정보를 획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중국군 총참모부 제2부 6처에서 북한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이 부서의 군사정보요원이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 무관으

462) 신분을 위장하여 비밀리에 정보수집을 하는 ‘흑색 정보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공개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백색정보’는 신문과 잡지, 정부간행물 등 공개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하기도 한다. 唐文彰, 姜紅明, 『當代中國國家安全問題』(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p. 331.

로 나가 있다. 또한, 중국은 웨이하이, 다롄, 단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해안 지역에 감청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지는 한국군과 한국 주둔 미군의 동향뿐만 아니라 북한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정보 분석업무는 중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소속기관의 소수의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문제는 극도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 내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북한정보분석업무를 다루기로 한다.

우선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당 소속 부처와 연구분석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외연락부는 냉전 시기에 비해 역할과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중국 내에서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빈번한 실무접촉 및 지도부 교환방문을 통해 북한 고위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기관으로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정보를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주재 대사관과 각종 고위급 접촉을 통해 획득한 북한정보를 전현직 대외연락부 간부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북한문제와 북한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당 중앙에 보고한다.⁴⁶³⁾ 중앙당교 산하 중국개혁개방논단 내에 한반도문제를 연구 분석하는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외교부와 군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약연구원을 통해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등에 관한 정보분석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중국정부기관으로는 국가안전부, 외교부 정책연구실과 국제문제연구소,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등이 있다. 대외정보 전문부서인 국가안전부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한 북한정보를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과 일본연

463) 베이징 인터뷰, 2004.4.

구소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외사판공실 등 상부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2001년 현대국제관계 연구소로부터 연구원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조선반도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은 북한국제문제연구소와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라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정보에 대한 현장감을 익히고 있다. 일본연구소도 한반도문제와 북한정보를 깊이 있게 다뤄왔으나, 2010년 한반도와 북한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양보장(楊伯江) 소장이 국제관계학원으로 이동한 뒤에는 북한정보분석에 대한 일본연구소의 역할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는 본부의 정책연구실과 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정보 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문제연구소 내에는 외교부 조선반도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양시위(楊希雨) 대사 등 북한문제에 해박한 연구원들이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 공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역임한 리빈(李濱)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와 정기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주재 대사관과 중국외교부를 통해 제공되는 북한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중국외교부와 중앙외사판공실에 전달하고 있다.

국무원 소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아·태연구소 내에도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수 연구요원이 있다. 러시아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소장조리를 맡은 파오젠이(朴鍵一)가 아·태연구소에서 북한정보 분석업무를 주관해 왔다. 특히 그는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내 북한과 한반도문제 전문가 모임(중국 조선반도문제연구회) 회장을 맡아 왔는데, 중국학계의 북한정보 분석업무 수행에 일정 정도 비중이 있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중국 군부 내에서 북한군사정보를 다루는 연구분석기관은 군사과학원과 국방대학 국제전략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북한의

군사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과학원에서 북한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왕이성(王宜勝) 연구원이 있고,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쉬웨이디(徐緯地)와 왕바오푸(王寶付)가 북한과 한반도 군사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판전창(潘振強) 장군도 중국군부 내에서 북한군사정보를 다루는 핵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북한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 북한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성의 사회과학원은 북한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다수의 북한문제 전문연구원을 두고 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에서는 조선족 출신의 진저(金哲)연구원을 비롯한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길림사회과학원도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지린성과 북한 북부 지역을 연계개발하는 ‘창지투 개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정보분석업무를 더욱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당교 교수로 활동해 온 장렌구(張仁九)도 과거 지린 사회과학원에서 오랜 기간 북한정보를 다룬 경력을 인정받아 중앙에 발탁되었다.

한편,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정부기관과 일부 민간전문가 사이의 북한정보공유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북한정보 분석업무에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학계에서 북한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비중 있는 인사들로는 베이징대학의 주평(朱鋒) 교수, 천평진(陳逢君) 교수, 진징이(金景一) 교수를 비롯하여 칭화대학 류장용(劉江永) 교수와 추수룡(楚樹龍) 교수 그리고 런민대학의 스인홍(時殷弘), 진잔룽(金燦榮) 교수 등이 있다.

북한정보 분석·해독 과정에서 중국은 학술 세미나에 정부관료와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거치고 있으며, 북한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들은 T/F를 구성하여 북한정보를 분석하고 있고, 관계 부처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시행한 직후에도 중국은 국무원 내에 조선소조(朝鮮小組) T/F를 구성하여 북핵정보를 전 정부 차원에서 분석·대처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⁴⁶⁴⁾ 중국은 당 중앙의 지휘하에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정보를 가공·분석하고 있다.

(2) 중국의 북한정보 활용

중국은 북한문제를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하고 당 중앙이 직접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 외교부는 당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중 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수록 중국은 당 중앙 대외연락부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진행하고 최고 위급 인사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왔다.

북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내 기관은 당 중앙인 바, 당 중앙의 대북 정책결정체계 분석을 통해 중국의 북한정보활용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 내 북한정보는 당 중앙외사판공실로 집중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최종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외사영도소소회의나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에 상정, 대북정책이 최종 결정되도록 돕고 있다. 물론 당 중앙외사판공실로 북한정보가 집결되기 이전에도 대외연락부, 국가안전부, 외교부, 총참모부 등 실무부서에서도 북한정책실무와 관련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분석·판단·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중 관계와 관련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국의 국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를 처리·활용할 때 당 중앙에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북한정

464) “北, 중국과 신규합작 사업 전면 중단,” 『한국경제』, 2009년 6월 17일, <<http://news.hankyung.com/200906/2009061770101.html>> (검색일 2009.6.30).

보 활용과 대북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전직 북한대사와 같은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보 활용 과정에서 중국도 부처 간, 지역 간 이견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 중앙 대외연락부와 군 정보기관은 북한 정보를 다루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반면, 외교부와 상무부 등 정책 실무부서는 북한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이미지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와의 관계보다는 중국 당 중앙 대외연락부와 군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북·중관계가 악화되거나 북·중 간 신뢰가 훼손되는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왕자루이 대외연락부 부장과 대외연락부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당 중앙 외사관공실 주임을 맡은 다이빙궈가 전면에서 북한 지도부와 접촉을 하고 북한정보를 직접 챙겨 왔다.

또한, 중국은 지역별로 북한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북한정보를 중시하는 비중도 다르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동북3성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대남군사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한다.⁴⁶⁵⁾ 반면, 중국의 중서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은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이 적고 북한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정보에 둔감하며 북한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상하이보다 베이징이 국가안보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정보를 더 중시하고 대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북한정보를 깊이 있게 고려한다.

465) 신상진 “중국의 대 북한 인식 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통일연구원, 2008.6), p. 284.

<표 6-3>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현황과 평가

구분	현황	평가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을 통해 정보교환 -집권당 간 전략대화 채널 구축(2011.6)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와 북한 노동당 국제부 간 채널을 통한 정보교환 -북한주재 대사관을 통한 정보수집 -정부·지방 대표단 교환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인민일보, 신화사 북한특파기자 정보수집 -여행사, 관광객을 통한 정보 수집 -주북한 화교, 유학생, 변경 지역 조선족을 통한 정보수집 -탈북자를 통한 정보수집 -한반도와 인접 지역에 감청기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INT 수집 채널이 다양하게 존재 -감청활동을 통해 북한 정보수집 보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중앙 대외연락부가 당제교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국가안전부, 외교부 정책연구실, 국제문제 연구소, 사회과학원,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군사과학원, 국방대학 국제전략연구소 등이 북한 정보분석 -베이징대학과 런민대학 등 저명 교수 정부자문에 참여, 북한정보분석에 기여 -전직 북한대사, 외교관도 북한정보분석 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의 외교·안보부처와 소속 연구기관이 북한정보분석 -전직관료와 주요 대학교수도 자문위원으로 활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국(상무위)가 북한정보를 활용, 대북정책 정책결정 -당 중앙 외사관공실에서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되는 북한정보를 취합, 정치국회의에 대북 정책 보고서 제출 -덜 중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외교부 등 실무부처가 대북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중앙이 북한정보 최종 활용 -북한정보활용 과정에서 부처 간, 지역 간 이견 발생하는 경우 존재 -지역별로 북한정보 판단 기준과 부간정보 중시 태도 상이

3. 한·중 북한정보 협력방안

가. 한·중 북한정보 협력현황과 문제점

한·중이 북한문제를 다뤄나가면서 협력하기보다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한·중 간 정치·안보적 불신이 증대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를 꺼려하므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정보를 공유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2009년 이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중 간 북한정보공유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위축되었다.⁴⁶⁶⁾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현 국면에서,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과 북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 자신도 북한에 관한 정보수집에 제약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민감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북한정보를 제공하는데 극히 소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⁴⁶⁷⁾ 2006년 한국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 주한 중국대사 리빈(李濱)이 당적과 현직 박탈 및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⁴⁶⁸⁾ 대외연락부 조선처장 장류청(章榴成)이 간첩죄로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06년 한국에 북한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리빈 전 주한 중국대사가 체포·구속된 후 실속 있는 북한정보를 중국 측으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워졌으며,⁴⁶⁹⁾ 한·중 정부 간 북한정보 협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중국을 활용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466) 『중앙일보』, 2010년 12월 29일.

467) 2003년 중국 연지시 안전국 책임자가 북한정보요원에게 30만 달러에 수매 당하여 북한 내 중국 정보망을 누설함으로써 북한 내 중국 정보망이 일망타진되었다고 한다. 毛峰, “邊城生死劫慶州情仇,” 『亞洲週刊』 (2003.1.27-2003.2.2), pp. 14-17.

468) 單仁平, “讓匪罪去神祕化,” <<http://www.huanqiu.com/roll/2011-09/1965478.html>> (검색일: 2011.9.1).

469) “외교부 중국2과장 일본에 간 까닭은,” 『중앙일보』, 2011년 9월 14일.

북한 핵문제와 탈북자문제 등을 다루면서 중국에 협력을 요청해 왔고,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제한적이거나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요구를 수용한 경우는 한·중관계가 우호적일 때였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고민했던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한·중 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비교적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⁴⁷⁰⁾ 동북아시아위원회와 중국개혁개방논단 주관하에 진행된 전략토론회에서 중국 정부기관 참가자들은 한·중 간에 북한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기까지 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중국이 반대해 온 선양주재 영사사무소의 총영사관 격상에 동의한 것도 한·중 정치외교적 신뢰가 축적됨으로써 가능했다.⁴⁷¹⁾

반면, 한·중이 외교·안보적 사안에서 갈등을 보일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문제를 한국과 협력하여 다루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중국은 북한급변사태 등 북한문제를 공개적으로 한·미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북·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한국과 북한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08년 연말 이후 한·중 간에 외교부 제1차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전략 대화가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양국 간 북한정보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이외에 외교부 국장급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자 및 지역정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470)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 10월 13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문제 협력에 합의했다.

471) 선양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1999년 중국이 서양 영사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뒤 4년 만에 총영사관 개설을 승인했다.

2011년 7월 김관진 장관 방중을 계기로 한·중 국방부 간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기 시작했다.⁴⁷²⁾ 한·중 국방부 간 교류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는 점을 공동보도문을 통해 천명했다. 그러나 한·중 간에 북한군사정보 교류협력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한국 측이 국군포로가족 조기 상황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중국은 성의 있게 호응하지 않았다. 2009년 한국 기무사령부 소속 장교가 중국 선양에서 국군포로가족 실태파악활동을 벌이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1년여 기간 동안 구속된 다음에야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한국에 송환된 사실은 한·중 군부 간 북한정보협력이 초보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⁷³⁾

국정원과 중국 국가안전부 간에도 북한정보에 대한 교류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정보요원들은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을 접촉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정보수집 업무보다는 연구·분석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보교류협력에 한계가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의 북한 담당 간부와의 교류도 장류청사건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에서도 중국과 북한문제 관련 협력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중국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 동북 지역 선양에 통일부 간부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각 1명을 파견하여 중국 동북 지역 북한전문가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중 간 교류협력동향을 분석하여 본부에 보고했다. 현재는 베이징주재 대사관에 통일부 파견 주재관 1명을 3년 임기로 파견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 공식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베이징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국제관계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와의 개별 접촉과 학술회의 참가를 통해 중국 내 여론주도층의 북한에

472) 중국이 한국과 국방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이 대만과 장교 교환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했다.

473) “원세훈 사과하라, 중국의 오버,” 『중앙일보』, 2011년 10월 20일

대한 인식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한·중정부 차원의 북한정보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관리와 민간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형식의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책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아시아위원회와 중국개혁개방논단 주관 하에 전략대화를 개최,⁴⁷⁴⁾ 북한문제와 북·중관계를 다루는 세션을 설치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에는 한·중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과 북한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8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중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5트랙의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한·중이 ‘전략대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정세와 한반도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문제가 제기될 때 양국 간 이견과 갈등이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 사이에도 많은 학술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기관 간에도 북한정보교류협력은 극히 초보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수교 이전부터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세미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과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의 학술교류 시 북한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다. 통일연구원 이외에 세종연구소, 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정례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북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와 정례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 간에는 북한문제보다는 국

474) 중국은 ‘전략대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략연토회(戰略研討會)’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으며,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문제와 한·중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연구원은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와도 연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나, 베이징에 있는 연구기관보다 북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상호협력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진행하면서 유관 연구기관들을 동시에 방문하여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을 방문하는 계기에 북한정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도 방문해 왔다. 마찬가지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이 통일연구원과 정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할 때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찾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포항제철(POSCO) 등 민간기업체도 북한 산업정보 획득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중 간 수출입 규모 현황을 추산할 때 중국 상무부와 통계국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주재 코트라를 통해 입수되는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⁴⁷⁵⁾ 북한 경제정보 획득 과정에서 코트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포항제철이 북한 내 풍부한 철광 광산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국 선양 등 동북부 지역에 진출해 있어 북한경제자원 정보를 획득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북한정보수집활동을 국내 종교단체와 탈북자 인권단체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면서 탈북자들과 접촉하여 북한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간접적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법륜스님이 운영하는 <좋은벗들>도 중국 내 탈북자들을 통해 파악한 북한 내부사정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교단체와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중국정부

475) 한국정부 관리와의 인터뷰, 2003.5.25.

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탈북자 지원 및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발각될 때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있다.

언론기관들도 중국에 파견된 특파원을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가 중국 내에 가동하고 있는 정보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보도해 왔다. 1997년 2월 덩샤오핑 사망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바 있고, 김정일의 중국방문 정보를 특종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 언론사들은 2000년대 초 탈북자 기획 탈출에도 깊이 개입하는 등 북한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나, 언론사들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북한정보를 수집하려 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9월 중앙일보 기자들이 북·중 국경 지역 취재 과정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었는데, 중국은 여행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을 취재하여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한국 기자들을 억류했다.

나. 한·중 북한정보 협력 및 개선방안

(1) 한·중 정치외교 신뢰관계 강화

북한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신뢰관계를 축적해야만 한다. 정치 민주화를 고취하여 중국 사회주의체제붕괴를 기도하려는 서방의 대중 ‘화평연변(和平演變)’ 전략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중국은 한국과 북한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하지 않으려 하고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과거 한·중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한·중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이 협력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한·중 간 외교·안보적 불신이 형성되면 북한문제가 한·중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008년 이후 한국정부가 대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채택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북핵문제와 재중 탈북자문제 그리고 김정일의 중국방문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북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한·중은 6자회담 재개 시점과 우라늄 농축문제 해법 등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했고, 중국은 탈북자 단속정책을 강화하여 중국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조기 한국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⁴⁷⁶⁾ 그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초에 예정되었던 김정일의 중국 방문사실을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한·중 간 정치외교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중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면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하려 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책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국면으로 진입해야만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한국과도 협력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북한정보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국 내 북한정보기관, 전문가와 협력체제 구축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북한정보를 민감한 이슈로 다루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고급정보는 당 중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476) 2009년 이후 중국은 중국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3~4년이 넘도록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영사관 진입을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사관 내 일부 탈북자들은 심지어 스스로 영사관을 떠나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북한에 송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 한국외교관과의 대화, (2011.4.22); 정베드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탈북자 강제송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발제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1.10.12), p. 3.

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증시하는 중국 외교부를 불신하고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와의 접촉 채널을 신뢰한다. 중국과 북한 간 고급정보 교류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의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외연락부가 외국 정당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집권정당이 수시로 교체되고 정당의 수명이 길지 않은 나라는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와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보적 단계에 있는 대외연락부와의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이익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 정당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와의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안전부, 외교부, 상무부, 총참모부 등 국외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통해서도 북한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도 중국의 유관부처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북한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 외교부 조선처 관리들은 한국과 북한에 교차적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 중국과 관리들이 이들과 자주 만남으로써 북한정보를 교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중 정부 간 북한정보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정치외교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국외정보와 북한정보가 분석되어 집중되는 기관은 당 중앙 외사판공실이다. 여기에서 정보가 최종적으로 가공되어 보고서 형식으로 외사영도소조와 정치국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외사판공실과의 접촉 및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중국과 전략대화를 개최해 왔는데, 현재 중국의 대미 전략 및 경제대화 대표가 바로 외사판공실 주임인 다이빙귀다. 현재 한·중 간에도 고위급 전략대화

가 개최되고 있으나, 한·중 양국 전략대화 대표는 외교부 수석 차관이 맡고 있다.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 중국외교부 대표뿐만 아니라 외사관 공실과 대외연락부 대표도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화사, 인민일보, CCTV 등 당과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매체들을 평양에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언론기관은 북한정세를 보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북한정보를 입수하여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파견되는 기자들은 본국에 귀국했다가 한국지사에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중국 언론기관·기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에서도 신뢰할만한 북한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과 북한접경 지역에서 나도는 북한정보는 대부분 첩보수준에 그치며 정보로써의 가치가 높지 않다. 전 북한주재 외교관,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개혁·개방 논단 등 일부 당·정 연구기관과 학계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10월 구성된 중국외교부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과의 자주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⁴⁷⁷⁾ 이들 자문위원은 중국외교부뿐만 아니라 당·정 부서들이 요청하는 북한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면서 북한정보브리핑을 받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북한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중국과의 신중한 북한정보협력

중국이 북한문제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중이 북한정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은 국가비밀보호법 제10조에서 국가비밀을 ‘절밀(絶密)’, ‘기밀(機密)’, ‘비밀(秘密)’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9조 3항에서는 외교

477) 중국 외교부 자문위원으로는 전직 주요국 대사와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저우 원중(周文忠), 전 UN대표부 대표 천지안(陳健), 외교학원 원장 우지엔민(吳建民) 그리고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지쓰(王緝謨),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 장위엔(張宇燕)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중 획득한 비밀사항과 외국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를 약속한 사항도 국가비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⁷⁸⁾ 중국은 북한지도자의 중국방문과 같은 북한과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보원으로부터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내 친한 적 성향을 보였던 북한담당관리들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으며, 외교부와 사회과학원 및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정보기관에 북한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숙청,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믿을만한 북한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단절되었다.

대만의 대중국 정보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1996년 초 대만 총통선거 과정에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중국의 대대만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중국군부 내에 구축되었던 대만의 정보협력망이 일시에 와해하였던 사례도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천수이볜 총통이 대만을 겨냥하여 중국해안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숫자를 공개하였을 때에도 중국 내 대만정보요원들이 큰 위협에 처한 바 있다. 대만은 이러한 정보를 대만 정보요원에게 매수되어 대만에 정보협력을 하고 있었던 중국 인민해방군 류롄쿤(劉連崑) 소장을 통해 획득하여 공개하였고, 이후 중국은 내부 조사를 통해 류 소장 등 대만에 정보협력을 하였던 중국군 간부들을 색출하였다. 결국, 중국군부 내 대만정보망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⁴⁷⁹⁾

앞으로 한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정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정보정책을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과 정보요원들이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을 위해 중국 내 정보협력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고려하여 북한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에 북한정보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 번의 실수로 오랫동안 구축한 정보협력망이 일망타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478)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北京: 法律出版社, 2010), pp. 3~4.

479) “대만총통 말 때문 중내 첩보요원들 붙잡혀” 『조선일보』, 2003년 12월 21일,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122170314> (검색일: 2011.10.21).

(4) 다양한 형태의 한·중 북한문제 대화추진

현재 한·중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학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술 세미나,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하는 학술교류활동, 대학과 민간연구소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보문제만을 다루는 학술교류행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중 정부·민간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에 북한문제와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션을 만들어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도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나 의견을 발표하는데 크게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및 정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정보 관련 학회를 지원하여 중국 내 북한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문제와 북한정보를 다루는 한·중 양국의 정부인사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에 북한 측 인사를 참여시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에는 북한관리나 학자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제와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북한에서도 참여가 쉬울 것이다. 중국 연변대학과 같이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중국 측에 북한학자가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한·중이 협력하여 북한정보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5) 외교·안보부처에 중국정보관리 인력 보강

중국과 북한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보체제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부부처 내에 보강되어야 한다. 중국은 국가안전부를 비롯하여 당과

군부 내에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정보전문가들을 가동하고 있고,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서도 당·정·군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중국의 북한정보 수집·분석 기관과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북한과 중국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을 배치·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협력을 통해 가치 있는 북한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비밀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외교·안보 부처관리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학계전문가들이 북한정보를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국내 북한정보공유체계 구축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업, 종교단체 및 학계전문가들이 중국을 통해 수집하는 북한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부처 들도 중국과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정보를 취득·활용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경쟁적으로 정보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소속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국을 통해 취득한 북한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관이 수집·분석한 북한정보가 서로 다른 때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여러 정보출처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가 권위적인 분석기관에 취합되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축적·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부처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인권단체들 사이에 긴밀한 협업·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각 부처 파견 관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공식 카운터파트를 구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정원과 통일부 파견 관리들이 업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정부정보기관이 효율적으로 북한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단체와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북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중국 내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표 6-4> 한중 북한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관계 악화와 한·중 정치적 신뢰 미비로,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교류가 전개되고 있으나 북한정보협력은 제한적·초보적 단계 -한·중관계 개선, 남북관계 우호적일 때, 한·중 북한정보협력기 가능 -1.5트랙 형식의 회의, 세미나를 통한 북한문제, 북한정보교류 -중국에서 종교단체와 탈북자지원단체가 탈북자 등 북한문제와 북한정보수집활동 전개 -언론기관이 중국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북한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간 정치·외교적 신뢰관계 구축 -중국 내 북한정보관리기관·전문가와 교류협력체제 구축 -북한정보에 협력하는 중국인사 보호 -한·중 북한문제대화 다양한 형태로 추진 -외교·안보부처에 중국정보관리 인력 보강 -국내 북한정보공유체제 구축

IV.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일본의 국외정보관리체계

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 국외정보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후 국가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경제부흥 및 발전에 쏟아 붓는 안보 경시, 경제 중시의 국가전략을 한동안 유지하였다.⁴⁸⁰⁾ 따라서 국가정보 가운데에서도 경제 정보, 특히 국외경제정보가 중요시되고 군사, 안보와 관련된 전략정보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는 독특한 일본의 정보체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안보 면에서의 대미무임승차가 정보 분야에서의 무임승차로도 연결된 것이다.

국외경제정보는 MITI로 더 알려진 통산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이하 METI)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통산성은 특히 경단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상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수의 종합상사는 실제로는 산업정보의 첩병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

냉전체제의 종료 이후 일본의 대외환경은 오히려 일련의 사태의 발생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변화해 나갔다. 국내에서 발생한 한신 대지진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의 부상,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국외에서의 일본인 생명과 재산의 위협 등을 경험한 일본정부는 위기관리 및 국가정보능력의 정비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 미·일동맹의 강화 및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안보 역할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일본은 서서히 외교·안보의 틀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였다. 대립의 냉전구도가 붕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정보기구의 효율화와 축소를 추진하였지만, 일본은 반대로 군사력과

480) 이러한 전략은 요시다(吉田) 독트린으로 불리면서 후임의 총리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일본의 초기의 경제대국화를 가능케 하였다.

정보력의 질적·양적인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외정보능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독자적인 첩보위성을 운용하는 등 다각적인 수집능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일본의 정보능력 강화 노력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중요한 외부적인 요소로 북한, 중국과 대(對)테러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열도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일본인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북한의 계속된 괴선박의 일본 주변해역 출몰과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재부상 등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자연히 효과적인 대북정보수집 및 분석이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국내에서 유사법제를 정비하는 등 위기관리체제의 구체적인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초한 국력증대는 대중 정보능력의 대폭적인 향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의 강화와 대만문제의 재부상은 미·일간의 동맹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과 정보 협력 및 공유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 위에 미국에서의 9·11테러사건 발생은 일본의 국가정보 역량의 확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저지가 국제사회의 최고의 공통적인 안보적인 현안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 차원의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테러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 및 공조체제의 구축이 힘을 얻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이 강화, 확대되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은 일본열도 부근에서 미 제7함대와 일상적인 데이터 교신을 하고 있으며 테러특별조치법에 의해 인도양에 파견되어 미군의 대 테러전을 후방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2009년 가을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정권은 이전의 자민당정권과는 다소 다른 미·일안보관계의 대등함을 추구하였으나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다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강조하고 있다. 일본 국내 상황의 어려움은 국외정보 역량 강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의 국외정보 강화의 노력은 일본정부가 어느 선까지 독자적인 외교 및 군사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 수준 및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정부가 이전같이 미국 의존적인 외교 및 군사정책을 견지한다면 일본류의 독자적인 정보기관 구성과 기능 및 역할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는 않겠으나 일본 국내외의 상황 변화 때문에 일본정부가 독자적인 외교·군사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독자적인 정보력 운용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증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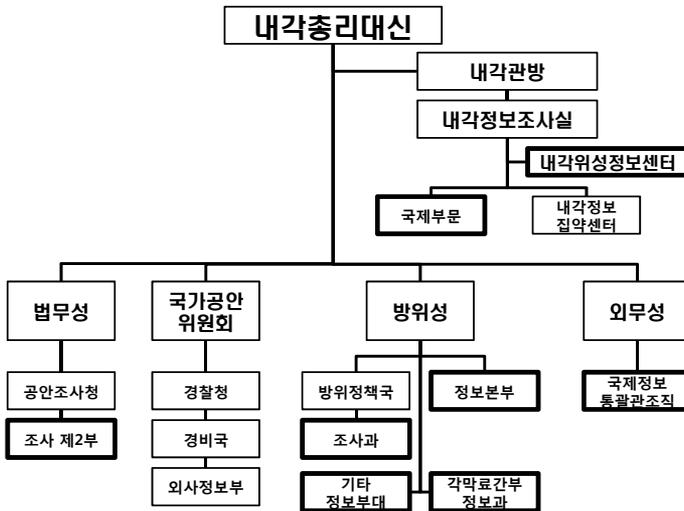
나. 일본 국외정보관리체계

일본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외정보, 특히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군사 및 안보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요소별 정보의 중요성도 일본사회의 다원화와 불안감 증대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급의 경제정보,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수요 및 정보유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과제를 일본정부는 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보조직의 대규모적인 확대 재·개편, 첨단 장비 및 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그리고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의 제고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보조직 재·개편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기구로는 전반적인 국가정보를 다루는 내각정보조사실, 국외정보를 관장하는 외무성, 구(舊) 공산권 및 좌익세력 관련 정보를 주도하는 공안조사청, 군사정보를 주관하는 방위

성, 방첩활동을 담당하는 경찰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⁴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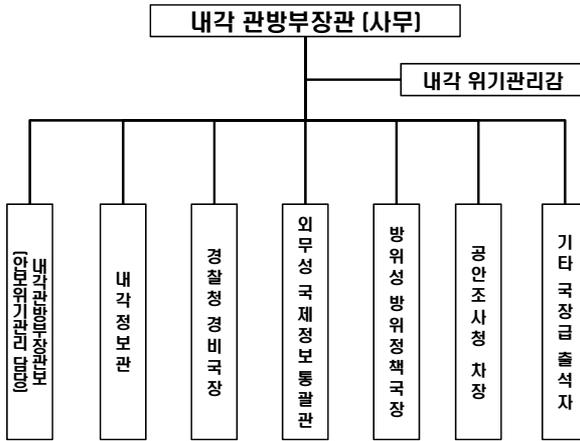
일본은 전반적인 국가정보를 다루는 내각정보조사실의 규모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기 때문에 각 요소를 관장하는 부문 정보기관의 역할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부서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외정보를 둘러싸고 외무성과 경찰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군사정보와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본 최대의 정보조직인 방위성 정보본부도 이러한 경쟁에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일본의 국외정보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개별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자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4> 일본대외정보기관



481) 일본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C)를 망라하는 합동정보회의(JIC)가 격주로 사무담당 관방부 장관의 주재하에 총리 관저 내에서 개최되어 의사소통의 장으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보를 평가 결정하는 곳은 아니다. 이 회의에는 내각위기관리관, 내각정보관, 공안조사청 차장, 방위청 방위국장,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경찰청 경비국장이 출석하고 있다.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文藝春秋, 2005), p. 25; 합동정보회의의 상위기관으로서 내각정보회의가 있으나, 이는 연 2회 관방장관 주재로 관계성청의 차관급들이 모이는 회합 체이나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못하다.

<그림 6-5> 합동정보회의



(1) 내각정보조사실 (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

일본 국가정보관리체계의 중추적인 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이하 내조실)은 총리를 보좌, 지원하는 내각관방(Cabinet Secretary)의 하나의 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다.⁴⁸²⁾ 내조실의 주요 기능은 내각의 중요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기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내조실은 내각 정보관을 수장으로 차장, 내각정보분석관, 총무 부문, 국내 부문, 국제 부문, 경제 부문, 내각정보보급센터, 내각위성정보센터, 그리고 카운터인텔리전스센터(Counter Intelligence Center: 이하 CIC)로 구성되고 있다.⁴⁸³⁾ 내조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매주 한 차례 총리 독대의 정보 브리핑이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 이후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482) 일본정보조직은 1952년 4월 9일 탄생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해 미국의 단독점령 정치가 끝나기 3주 전에 내각관방조사실(내조실)이 탄생한 것이다. 발족 당시는 경찰관료인 무라이 준(村井順실장 이하 7인에 불과하였다. 주된 임무는 국내외의 중요한 국책관련 제반 정보를 관계성청과 협력해 수집, 종합조정해 정부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그 밖의 임무는 국제심리전에 대처하는 고도의 홍보 및 선전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당시의 중요한 현안사항이었던 외국 특이 소련, 중공 등의 암호전신을 감청, 해독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6년 후인 1958년 4월 1일 특수기관인 ‘육무2부별실(陸武2部別室)’, 소위 ‘이별(二別)’이 탄생하였다. 대부분 요원은 자위대원이었으며 감청시설도 육상자위대 시설을 사용하였으므로 형식상은 육상자위대에 속하나 실질은 내조실의 하부기관이었다. 따라서 ‘이별(二別)’의 최고 책임자는 내조의 관계 깊은 경찰관료가 맡게 되었다.

483) “内閣情報調査室” <<http://www.cas.go.jp/jp/gaiyou/jimu/jyouthoutyousa.html>> (검색일 2008.4.13).

각 부서의 업무를 보면 내각정보분석관은 특정의 지역 또는 분야에 관해 특별한 고도의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총리관저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4월 만들어진 동기구는 출발 당시는 3인의 전문분석관 체제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5명 체제로 강화되었다. 전문 분석관들은 각각 한반도, 중국 등 아시아, 국제테러, 군사·대량살상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중장기적인 주제의 정보평가서 원안을 작성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 이러한 원안을 기초로 합동정보회의가 최종안을 완성한다.⁴⁸⁴⁾ 총무부는 인사, 예산, 홍보 및 정보의 종합분석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부는 내각의 중요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국제부는 내각의 국외정보 수집·분석의 창구로서 세계경제조사회 등 외곽단체를 운용하는 국외정보 담당 부서다.⁴⁸⁵⁾ 경제부는 국내외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 연구 및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정보집약센터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시 정보수집을 담당하며⁴⁸⁶⁾ 내각위성정보센터는 국가안전 확보와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관장한다.⁴⁸⁷⁾ 카운터인텔리전스센터(CIC)는 2008년 4월 1일 설치된 내조실 산하의 새로운 기구로(내각정보관이 센터장) 방첩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조실은 인원과 장비의 부족 때문에 독립적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원수하는데 적지 않은 제한과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일본의 내조실은 미국 등 정보강국의 국가정보기관들과 비교할 때 그 조직과 활동이 상당히

484) 『요미우리신문』, 2008년 3월 31일

485) 국제부는 부장인 국제부주간하에 미주반, 한반도반 같은 지역담당반이 있고 군사반과 국외 우호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교환반 등이 있다.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關』, p. 24.

486) 센터는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경찰청, 소방청, 공안조사청, 방위청, 해상보안청 등이 파견한 5개 반 20명으로 출범하였다. 긴급 정보를 모아 총리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판단, 지시의 권한이 없다.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關』, pp. 48-50.

487) 정찰위성 보유를 위한 물밑 노력을 하였으나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북한의 대표동 발사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각에서 정보위성의 개발이 결정되었다. 위성센터는 2000년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으로 탄생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기의 첩보위성과 320여 명의 인원으로 미국판 국가정찰국(NR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 4대로 지구상 어느 곳이나 24시간 이내 촬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로 북한, 중국, 극동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상도 1m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⁸⁸⁾ 또한, 국가정보기구로서 부문별 정보기관의 정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에서도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내조실은 정보를 정리하며 내외관계자와의 정보교환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공작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내조실은 주로 풍부한 자금을 기초로 주로 외곽의 민간 연구기관들을 활용하고 공개 자료도 중시하면서 국가정보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조실은 특히 언론기관 등의 뉴스매체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외국의 정보기관들과의 정보공유에 힘입어 획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IA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내조실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군사정보에 관한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정보협력도 특기이다.⁴⁸⁹⁾ 일본은 1947년 맺어진 미·영간 신호정보공유협정(UKUSA Accord)에 제3자적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⁴⁹⁰⁾ 최근 일본은 미국이 프랑스 또는 이스라엘과 체결한 이상의 내용을 갖는 ‘군사정보 일반 보전협정 (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체결하여 일정수준의 암호처리 방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⁴⁹¹⁾

왜소한 규모의 내조실은 전통적으로 경찰, 특히 외사경찰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내조실의 수장은 경찰 서열 3-4위급 인사가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임해오고 있다. 현재의 내각정보관도 물론 외사경찰 출신이다. 또한, 내조실 전체 인원의 약 1/4은 경찰청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다음으로 내조실에 영향력이 있는

488) 오오모리 전(前)실장은 내조실 소속의 본래의 직원은 80명 정도로 밝히고 있다.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 p. 24. 한 공개 자료에 의하면 내조실 총직원 수는 약 180명으로 그중 순수 내조 출신이 약 70인, 경찰 파견자가 약 40인, 공안조사청이 약 20인, 방위성이 약 10인, 그 밖에 위무성, 총무성, 소방청, 해상보안청,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약간명을 파견하고 있다.

489) Andrew L. Oros, "Japan's Growing Intelligence Cap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pring 2002), pp. 5-7, p. 11.

490) Robert D'A Henderson and Brassey's (Firm), *Brassey's International Intelligence Yearbook, 2002 Edition* (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2), p. 94

491) 미국은 MD 공동개발 등에 따른 군사기밀 공유가 확대되면서 일본 측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보호대상을 기존의 무기성능, 기술정보에서 작전 훈련정보까지 확대하고 무기 및 부품조달 관련 민간업체에도 비밀준수를 의무화하는 GSOMIA를 체결키로 2007년 5월 합의하였다.

집단은 외부성이다. 외부성은 관례로 제1부실장을 배출하며 5명 안팎의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그밖에公安조사청, 방위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도 나름대로 인원을 내조실에 보내고 있다. 내조실과는 대조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公安조사청도 경찰 다음으로 다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청이 전통적으로 내조실의 요직을 담당하고 있어 내조실이 진정한 정보공동체의 수장 노릇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조실은 부문정보기관과의 정기적인 회합을 주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결정은 내각회의에서 결정된다. 내조실에는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각 성·청의 수집정보가 종합적으로 총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는 관련 성·청이 먼저 총리에게 직보하여 시의성에서 내조실이 불리하며 또한 파견 나온 직원들도 내조실보다는 출신 성·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⁴⁹²⁾

내조실은 다양한 외곽단체를 운영하여 왜소한 조직 및 인원의 불리함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외곽단체들은 예산을 내조실에 의해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하기관으로 볼 수 있다. 내조실은 외곽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외곽단체의 주요 책임자들은 내조실 출신의 인사들로 참여해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세계정경조사회, 내외정세조사회, 국제정세연구회, 동남아조사회, 일본국외뉴스센터, 라디오프레스,⁴⁹³⁾ 민주주의연구회, 국민출판협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내조실은 기업 등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협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관·재(政·官·財)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라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하여 진행된다.

492) 오모리리에 의하면 내조실장 4년 재임 중 외부성의 공전(公轉)을 본적이 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도 중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構』, pp. 37-39.

493) '라디오프레스'는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을 최초로 입수하여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동기관의 스즈키(鈴木典幸)이사가 내조실 정보분석관에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임명된 바 있다『요미우리신문』, 2008년 3월 27일.

(2) 방위성 정보본부 (Defense Intelligence Headquarters)

일본은 통합된 군사정보기관이 없었고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등 각 부대와 통합막료회의 그리고 자위대 직속의 정보부대 등이 분산되어 정보활동을 전개해왔다. 각 정보기구는 독자적인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방위청(2007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 전체로의 정보수집, 분석 작업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각 정보기구들의 능력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정보의 통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95년 11월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시였다. 그 결과 1996년 5월, 성립된 ‘방위청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정보본부의 설치가 인정되었고, 1997년 1월 20일, 새로운 통합된 군정보기구로 정보본부가 통합막료회의(2006년 3월 통합막료감부로 개편)의 하부조직으로서 탄생하였다. 이후 정보본부는 2006년 3월부터는 다시 방위청장관의 직할기관으로 변신하여 방위청의 중앙정보기관으로서 역할 및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방위청·자위대가 2006년 3월부터 통합운용체제로 이행되어 통합막료장이 자위대의 운영에 관하여 군사 전문적 관점에서 방위청장관을 단독으로 보좌하게 됨에 따라 정보본부는 통합막료감부와 부대에 대해 부대운용에 직접 필요한 정보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정보본부의 주축이 된 기구는 육상막료감부(육군본부) 조사부 제2과의 ‘조사부별실(二別)’이라는 조직이었다.⁴⁹⁴⁾ ‘조별(調別)’라는 통칭으로 불리었던 조사부별실은 육상막료장의 지휘가 아닌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실

494) 일본의 감청기구는 미군의 영향하에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특기할 만하다. 점령시인 1950년, 미군은 비밀리에 경찰예비대원을 모아서 전파 감청조직을 구성했으며, 그들은 사이타마 대정(大井) 통신소 내에서 활동하였다.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이 나중에 ‘이별(二別)’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별(二別)’ 나중의 ‘조별(調別)’은 감청 시 녹음테이프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주일미군에, 때로는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에 직접 송부를 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비밀적인 관계를 모르고 있다가 1983년 9월 KAL기 격추 때 미 정부가 소련의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자위대가 감청한 내용을 공개해도 좋냐고 타진해 올 때 비로소 알고 대로하였으며, 그때 미·일 감청기관의 특수적인 관계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관저와 방위청 고관의 승낙 없이는 자위대의 감청 내용을 미군에 자동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에 미군은 1983년,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내에 강력한 감청시설인 골프공 형태의 돔을 건설해, 자위대의 정보력을 압도하고 있다. ‘조별(調別)’은 1997년 1월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로 개편되었다.

장이 지휘하면서 전파를 통해 얻은 극비정보를 내조실에 직보하였다. 동조 직은 과거에 임표(林彪)사건(1971.9), 마오쩌둥(毛澤東)사망(1976.9), 대한항공기 격추사건(1983.9)의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 실적이 있다.

신설된 정보본부는 냉전 시대 시 숨겨진 존재이었던 ‘조별(調別)’을 정식으로 방위청 지휘하의 조직으로 재편하고 통합막료회의와 육·해·공 3자위대 조사부의 국외정보 담당 부문을 흡수해 통합 만들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군사정보수집의 일원화를 통하여 군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정보본부는 ① 정보본부가 공개정보, 전파정보, 영상정보 등으로 스스로 수집한 정보, ② 방위성의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③ 타부서로부터의 정보 등을 집약하고 종합적으로 처리·분석하여 방위청과 자위대가 필요로 하는 전략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다. 그를 위해 정보본부는 통신정보(COMINT),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 인간정보(HUMINT) 등의 모든 국방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조정, 분석하여 관련 부대에 전파하고 방위청 내국 및 각 막료감부와 공유하며 내각에도 보고한다. 현재 정보본부에는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본부장, 부분부장 산하에 6개 부서와 6개 통신소를 운영 중이다.⁴⁹⁵⁾ 따라서 정보본부는 국외의 군사정보를 비롯한 각종 인텔리전스를 담당하는 일본 최대의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본부장에는 현역 육·해·공장의 자위관이 임명되며 부분부장에는 민간의 사무관이 방위성 내부부국의 심의관 겸무로 임명된다. 그 밑에 정보전문 스태프로 4명의 정보관 (1명의 사무관과 3명의 자위관)이 위치한다. 사무관은 주로 각국의 안보·국방 정책에 관한 정보를, 3명의 자위관은 각각 일본주변 지역, 다른 지역의 군사정세를 분담하고 있다. 6개의 부서는 총무부, 계획부, 분석부, 통합정보부, 화상·지리부 그리고 전파부로 이뤄지고 있다. 핵심적인 부서인 화상·지리부는 영상·지리정보에 관한 수집정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파부는 전파정보

495) 戦争の理論, 『2006 日本防衛編-防衛白書を考える』, p. 123.

에 관한 수집정리 및 조사, 장비품의 기술연구 및 기술개발 요구와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본부의 많은 인원이(약 7할 정도) 전파부와 6개 통신소에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언급한 방대한 업무에도 정보본부는 비밀공작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본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의하면 40여 개의 재외공관에 약 50여 명의 방위주재관(defense attaches, 대사관의 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⁹⁶⁾ 최근에는 방위주재관에 의한 정보수집 및 분석태세 강화를 위해 이제까지 외무성을 거치던 보고 채널을 방위성에의 직접보고를 가능토록 수정한 바 있다.

한편, 이치가야 방위청 신청사 통합 이주는 일본의 국방 부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촉진했다. 정보본부는 첨단건물의 독립성을 갖추어 정보활동의 획기적인 개선·발전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⁴⁹⁷⁾

(3)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조직(Intelligence and Analysis Service)

일본 외무성은 2004년 8월,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강화를 위해 이전의 국제정보국이 폐지되고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동(同)조직은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무성의 하나의 부국(部局)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업무는 위성영상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수집활동의 강화와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객관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정세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외무성은 각 지역국과 기능국을 기초로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임하고 있으나

496) Andrew L Oros, "Japan's Growing Intelligence Capability," p. 11.

497) 방위청 신청사는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A동에는 내국, 통막, 육막, 해막, 공막이, B동에는 육해공 각 통신부대가, C동에는 정보본부와 육해공 각 중앙 자료대가, D동에는 계약본부, 기술연구본부, 방위시설청이, E동에는 각 자위대 지원부대 등이 입주하고 있다.

동조직은 일상의 안전처리나 정책판단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증장기적 또는 횡단적 분석을 해 정책담당부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인 정세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다.

동조직은 1명의 정보통괄관하에 4명의 국제정보관, 사무관, 임기제 전문분석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총인원은 대략 100명 이하 정도이다. 제1 국제정보관실은 정보수집의 총괄, 과학적 정보수집, 외국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조사를, 제2국제정보관실은 정보분석의 총괄, 국제테러·대량 살상무기 확산문제·안보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조사를, 제3정보관실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 남서아시아 지역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제4정보관실은 유럽, 중앙아시아, 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⁴⁹⁸⁾ 그러나 대부분 직원은 외무 성직원들과 똑같이 2~3년 주기로 본성(本省)과 재외공관으로 인사 이동 되기 때문에 전문분석관의 자질을 갖추기가 어렵고 또한 분석관으로서의 자각의 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외부에서 충원하기 위해 전문분석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무성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동조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부서가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성내(省内)협력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동조직이 분석·평가한 것이 외무성의 최종 의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2005년 4월, 대외정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인텔리전스 전문가들을 모아 『대외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간담회는 같은 년도 9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①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정보 수집체제의 강화와 위성정보의 활용 강화 등을 통한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 ② 외부 연구·조사 기관 및 전문가의 활용과 정보분석능력의 향상, ③ 교육·훈련과 정보보전조치의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⁴⁹⁹⁾

498) “国際情報連絡官組織”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sosiki/koku_j.html> (검색일 2008.4.9).

499)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東京: 日本 外務省, 2006), pp. 254-256.

간담회의 제언을 기초로 외무성은 조직 개편 및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나 HUMINT를 담당할 요원을 육성하는 것과 외무성의 외국(外局)으로 새로운 대외정보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많은 난제를 남기고 있다.

(4) 기타

일본의 부문 정보기구로써 부수적으로 국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법무성公安조사청(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Agency)과 경찰청 경비국 그리고 해상보안청을 꼽을 수 있다.

내조실이 정보의 분석·평가·조정 기능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기관이라면 일선 현장에서 직접 손과 발로 뛰는 활동기관이公安조사청이다. 동(同)청은 법무성의 외청으로 약 1,500명의 직원을 갖고 일본정보기구는 특이하게 인간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독립적인 방첩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동청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일본 내 좌익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파괴활동방지법 및公安조사청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렇게公安조사청은 일본 공산당의 파괴활동을 막기 위해 창설되었지만 정보수집의 임무는 점차,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권의 대일 공작, 일본주재 기관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중국 및 북한과 관련한 동청의 정보수집능력은 높이 평가되었다. 동청은 미국의 FBI 또는 영국의 MI5와 유사한 기관으로 주로 국내에서의 위협 요소 타파와 방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냉전 시公安조사청의 활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일본 내 좌익세력인 공산당, 사회당, 일부 노조기구, 조총련 등이 활동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다양한 극우세력들도 그 감시의 목표물이 되었다. 동청은 또한 공산권의 정세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발간해 국외정보기구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동청은 경찰청과 함께 일본 내 방첩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청의 역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의 사회당과 좌익세력에 대한 감시 업무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오음진리교같은 종교적 원리주의자, 마약, 국제테러 같은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청의 조직은 2001년의 조직 통폐합에 의해 본청, 연구소, 8개 지방공 안조사국, 14개 지방사무소, 9개 출장소로 구성되고 있다. 본청은 총무부, 조사 제1~2부, 국제참사관실로 구성되며, 핵심부서는 조사 제1~2부이다. 조사 제1부는 국내 정보를 총괄하며 제1과는 종합공안정보를, 제2과는 극좌과격파를, 제3과는 공산당을, 제4과는 우익을, 그리고 특별조사본부는 오음진리교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사 제2부는 국외정보를 총괄하며 제1과는 한반도, 제2과는 중국 및 아시아, 제3과는 러시아 및 미국,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개의 국제참사관실은 국제테러리즘과 국외정보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를 각각 분장하고 있다.⁵⁰⁰⁾

일본의 경찰은 사실 일본의 다수의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경찰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기초로 국내 치안과 정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출신자들이 타 정보기구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⁵⁰¹⁾ 경찰은 정보활동 중 주로 국외 각국의 간첩을 감시하는 방첩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 중심에 경비국 외사정보부가 있으며 그 휘하에 각 지방 경찰본부마다 공안부가 조직되어 있다. 외사경찰은 전통적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정보에 강하며 최근에는 국제테러단체의 정보수집으로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의 해상에서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이다. 소속은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으로써 정원은 대략 12,600명(2011 현재)이다. 동청은 일본 국토의 36배에 해당하는

500) 惠谷治, 『世界テロ戦争』(東京: 小学館, 2002), p. 109.

501) 내조실의 최고책임자인 실장은 경찰출신이 말고 있으며, 경찰은 그 외에도 방위청,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의 주요 보직에 경찰 출신들을 파견하고 있다.

수역을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이다.

452척의 함정과 72기의 항공기 보유(2011.4 현재)하면서 북한 선박의 일본 왕래, 대한해협 등 주요 해협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년 노도(能登)반도 근해에 북한의 수상한 선박의 출현 이후 북한의 해상 침투 감시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와의 공조체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2.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가. 일본의 북한 인식과 정책

일본외교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인 인접성과 안보적인 위협성의 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를 역임하면서 대북관계를 주도하였던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는 한반도를 일본외교의 원점이라고 간주하였다.⁵⁰²⁾ 그에 의하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역사적 사실 이었고, 현재의 남북분단과 북한의 존재는 일본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 작업은 일본외교의 최고로 중요한 능동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자국의 머리를 넘는 한반도정책은 지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일본은 대북 능동적 외교를 전개했다고 회고하고 있다.⁵⁰³⁾

일본의 대북관계는 일본외교의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즉, 과거 문제의 미청산에 의해 국교관계가 미수복,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북한의 현실적인 안보적 위협은 일본국민을 불안케 만들고 있으며, 일본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안보 태세를 정비케 하고 있다. 또한, 비밀성과 불투명성의 성격을 갖는 북한지지세력인 조총련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관리가 대북관계의 과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02) 田中 均 『國家と外交』(講談社, 2005), pp. 16~19.

503) 위의 책 pp. 17~19.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의 안보적 위협과 북한정세의 불투명, 불예측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본외교의 대북관련 현안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일본정부는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일본안보의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상, 정착한 이 문제를 도외시키고 넘어갈 수는 없다.⁵⁰⁴⁾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군사정보는 일본의 국가적 안위와 관련해 최고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일본의 국외정보에서 북한의 군사정보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압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정세의 유동화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악화 가능성을 한반도 유사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단정하고 있다. 1997년에 책정된 신(新)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주변 유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는 지리적인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본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한반도 유사라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북한유사를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한반도유사를 단정한 소위 주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국내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시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경제의 피폐함이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일본이 보는 북한의 대일접근의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경제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다.⁵⁰⁵⁾ 북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물자 및 서비스를 대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외에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경제적인 부담, 국내여론의 분열과 대립, 북한의 과도한 대한(對韓) 의존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⁵⁰⁶⁾ 또한, 일본은 북한 측이 대미관계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대일관계의 개선을 활용하려 한다고 간주한다. 특히

504) 小此木 政夫, “北朝鮮問題の新段階と日本外交,” 『國際問題』 (2003.5), pp. 2-4.

505)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50억~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ark E. Manyin, “Japan-North Korea Relations: Selecte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6, 2003), pp. 1-2.

506) 小牧輝夫, “日朝交渉に賭ける北朝鮮の意圖” 姜尙中 外 編 『日朝交渉』 (岩波書店, 2003), pp. 45-51.

부시정권 같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분명하고 확고할 때 효과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일본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일·북수교를 통해 전후(戰後)문제 총결산, 과거 문제 대청산, 21세기 신시대 외교 전개라는 복수의 외교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북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납치문제가 너무나 큰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고, 과연 핵, 미사일문제의 해결 없는 납치문제의 해결, 국교 정상화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본은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일·북 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⁵⁰⁷⁾ 즉, 북한 측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일·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인 과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래는 2국 간 문제인 납치, 국교정상화 문제의 처리도 다국간의 틀과 접근을 최대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협력, 지지 확보에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동북지방에서의 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관계에 신경을 쓸 입장이 못되며, 리더십의 부족으로 새로운 외교적인 돌파를 시도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따른 대피해를 극복하고 국내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일·북관계에서의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당분간은 일·북수교를 서두를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국내 상황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며 납치문제의 일부 양보가 일·북수교로 단순히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미·북 간의 주요 현안인 핵, 미사일 관련의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납치문제, 경제협력 등 비안보문제의 현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일·북 간의 관계 개선의 조짐 및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507) 북한체제의 국제적인 보장과 핵, 미사일의 완전 포기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고 일본은 여타의 지역국가들과 더불어 이를 지지, 보장할 필요가 있다. 姜尙中 外 編 『日朝交渉』 (岩波書店, 2003), pp. 19-24.

나.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

일본의 북한정보수집은 전통적으로 강한 신호정보를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 강화되고 있는 영상정보를 가미하는 기술정보(TECHINT) 위주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 위에 획득 가능한 인적정보(HUMINT)와 OSINT를 활용해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신호 및 영상정보수집체계를 우선 파악하는 일이며 그 후에 인적 정보와 공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신호정보(SIGINT) 수집

(가) 방위성 정보본부 전파부

일본의 정보기구는 형식적으로 내조실이 먼저 출범하였으나 정보다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탄생한 것은 잠재적 적국의 통신정보를 감청하는 신호정보기관이었다. 최초의 신호정보기관은 내조실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육상자위대내에 설치되었고 육막(陸幕) 제2부 베시츠(別室)로 통칭 니베츠(二別)라 불렸다.⁵⁰⁸⁾ 니베츠는 1977년 육막 개편에 따라 조사부별실(調別, 초베츠), 1996년 정보본부 창설에 따라 전파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초기 니베츠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방위관료와 자위대 간부들도 그 내용을 몰랐다. 당시 방위사무차관을 역임한 인사는 “타부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별세계였다.”라고 회상한다. 미소 냉전 중 니베츠는 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1970년대에는 정원이 약 1,000명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일본열도의 남북에 걸쳐 9개소의 감청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소련, 중국, 북한의 군사 관련 전파를 감청하기 쉬운 장소에 통신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신호정보 역량 강화 및 확대 현상은 사실

508) 일본의 대표적인 신호정보수집기관인 방위성 정보본부 전파부는 그 탄생이 내조실의 업무적 필요성 때문에 설치된 조직이기 때문에 내조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내각조사실 관계자들은 사이타마시 오이 통신소의 시설을 일부 빌려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일본의 신호정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출범 초부터 깊은 관여를 하는 특색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본부의 전파부장직은 대대로 경찰청에서 출발해 취임하고 있다. 극히 일본다운 조직 운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군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문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일본의 군사 및 정보 관련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국들의 정보, 특히 군사정보를 획득하였던 것이다.⁵⁰⁹⁾ 대표적인 일본 내 미군의 신호정보 기지로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약 1,000단위의 분석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의 정보기관인 정보본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전파부와 영상·지리부이다. 그중에서도 전파부의 역할과 기능이 압도적으로 중시되어 정보본부 전체 직원의 약 7할 정도가 전파부 또는 각 통신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소 중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전파정보수집의 중요한 거점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한 니가타(新潟) 코부나토(小舟渡), 도토리(鳥取) 미호(美保), 후쿠오카(福岡) 타치아라이(大刀洗) 통신소이며 그 역사, 규모와 성능에서 가장 뛰어난 사이타마(埼玉) 오이(大井) 통신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⁵¹⁰⁾

일본 신호정보의 능력은 다수의 역사적인 개가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 주요한 업적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미국에 통지하고 미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였고, 이후 일본은 소련의 사후 대항조치로 고전하였으며, △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1983.9)시 조종사와 모스크바 간의 교신 내용을 홋카이도의 와카나이 통신소가 파악해 미국에 제공하였으며, △김일성 사망 후 의사단의 묘향산 이동(1994.7)을 탐지한 바 있다.

509) 따라서 일본의 정보본부는 미국의 신호정보 주체인 국가안보국(NSA)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통신 감청 시설인 Echelon을 운영하고 있는 NSA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 제3국 지위를 갖는 일본을 포함하는 일군의 협력국들과 통신정보수집을 위해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감청을 위해 미국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면에서의 미·일동맹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이 그 대가로 받을 미국이 수집한 고급정보는 일본의 국익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정보의 세계에서도 힘의 논리는 적용되며, 따라서 정보강국을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인 것이다.

510) 1999년 3월 노도반도 근해 북한수상선박의 전파를 잡은 곳은 방위청 미호통신소(도토리현 사카미미나토시)와 고부나토통신소(니가타현 사바다시), 경찰청 야마 통신소, 미공군 미사와 기지 감청시설이었다. 黒井文太郎, 『日本の諜報機関』(講談社, 2007), pp. 80-82.

반면에 일본 시그트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해막(海幕)의 정보기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실제상황 같이 파악해 보도했으나 사실은 지휘소 주관의 연습적 훈련이었다. 이는 훈련과 실제적 상황을 분간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러한 실수를 경험한 자위대는 귀(감청, 신호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눈(영상정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정찰위성의 필수성을 강조하기에 나섰다.

(나)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 외사과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과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등의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치안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외국 간첩,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를 적발하기 위해 고도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는 외사경찰 부문을 갖고 있다. 외사경찰은 경비국 하위에 외사정보부에서 업무를 맡는다. 경비국장은 내각 합동정보회의에 참가하는 정식 구성원이기 때문에 외사경찰이 수집하는 중요한 정보가 일본의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정에 자연스럽게 투영·반영되는 것이다. 외사정보부는 외사과와 국제테러리즘대책과로 나뉘는데 북한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는 외사과라고 볼 수 있다.

외사과는 납치문제대책실, 한반도담당, 중국담당, 러시아담당, 분석담당, 서무담당 등과 독립된 부서로 제2무선통신소(일명 야마)를 갖고 있다. 이는 외사경찰이 독자적인 감청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그 대상은 북한발 통신전파, 단파방송의 감청, 분석과 관동지역에 잠복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의 무선통신이다.⁵¹¹⁾

외사경찰의 감청 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일본 내의 통신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방위성 정보본부는 북한 내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거리 탐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사경찰은 북한공작선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동해 연안은

511)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関』, pp. 120~126.

더욱 엄중하게 커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¹²⁾ 과거에도 몇 차례 걸쳐 경찰이 공작선 발신 전파를 알아낸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야마 통신소와 관련된 사항은 별로 알려졌지 못하나 대체로 도쿄도 히노시에 본부를 두며 전국에 13개소의 지방통신소를 갖고 전파 감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은 여타의 정보기관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졌지 못하다. 그만큼 정보보전의 정도가 확실히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다) 일본 신호정보활동 사례: 북한공작선과 일본의 대응

1999년 3월 18일, 일본 노도반도 부근에 북한의 수상한 선박이 출현하였다. 이는 나중에 공작선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청 경비국 외사과의 극비 통신감청반 ‘야마’와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가 감시하고 있는 북한공작 지령 암호로 알려진 A-3 방송에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북한공작 부문이 어떠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경찰, 자위대는 즉시 긴박한 태세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공작선 가능성 정보의 단서는 미군 정찰위성에 의해 다음날(19일) 주일미군사령부 경유로 일상 정보로 일본의 정보본부에 전달되었다. 그때 동해 북부에서의 통신 증가를 정보본부도 알아내었다.

한국으로부터도公安조사청에 대해 ‘청진에서 공작선 2척으로 일본에 중요 물질 운반’ 정보제공이 있었다. (문예춘추, 1999년 5월호) 그러나 이런 정보가 경찰청, 방위청, 해상보안청에 신속히 전달되지는 않았다. 물론 총리 관저에는 속보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한·미로부터의 정보가 일본의 중요 정보기관에서 상세히 검토되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낮음이 입증되는 순간들이었다.⁵¹³⁾

3월 20일, 해상자위대가 경계 태세에 들어가면서 P-3C초계기, EP-3

512)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関』, p. 122.

513)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関』, p. 79.

전자전데이터수집기가 동해 초계를 위해 출동하였다.

3월 21일, 노도반도 동쪽 해상에서 의심 전파가 발신되는 것을 복수의 일본 정보기관들이 일제히 알아차렸다. 의심 선박이 임무를 끝내고 귀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컸다. 의심 선박은 청진의 공작본부 거점과 단파로 직접 교신을 시도하였고(요미우리, 1999.4.3), 이로써 동(同)선박이 공작선임이 확인되었다.

의심전파를 알아챈 곳은 방위청 미호통신소(도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와 고부나토통신소(니가타현 시바다시), 경찰청 야마 통신소, 미공군 미사와 기지 감청시설 등이었다. 미군과 방위청은 당시 주일 미군사령부와 정보본부, 미국 국방부 정보국(Defence Interintelligence Agency: 이하 DIA)와 정보본부 전파부, 요코스카 제7함대사령부와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 등이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였다.

3월 22일, 경찰청 외사과는 이시가와, 토야마, 니가타 등 해당 지역 경찰에 KB정보(Korean Boat)를 전달하면서 경계태세를 주문하였다. 자위대도 마이즈루기지에서 제3호위함 하루미, 이지스함 묘코, 지방대 호위함 아부쿠마호가 긴급히 출동하였다.

3월 23일, 해상자위대가 북한공작선 2척을 동해 상에서 발견하였다. 해군의 통보를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하였고, 해군, 공군, 미군도 공동 대응하면서 추적하기에 이르렀다.

3월 24일, 일본정부는 오전(00:50) 최초의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였고, 북한공작선은 매우 빠르게 도주하여 방공식별권을 초월(06:06)하면서 북한영해로 진입하였다. 일본 해보(海保)는 추적을 중지하였으며 해상경비행동도 해제(15:30)되었다.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동(同)사건은 일본정보 분야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과제를 남겼다. 우선, 미국의 통보로부터 일본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까지 3일간의 시간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작선이 귀로에 본부와 단파 교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각되지 않고 상황이 끝날 수도

있었다. 자국의 정보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타국 정보는 초기 단계에서 확산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경비활동의 주체인 해보가 정보전달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뒤늦게 전달받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방위청, 경찰청 등이 특이사항을 인식한 것은 늦어도 3월 19일의 시점이었고, 이어 해보는 20일에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의심전파가 21일 밤 포착되었으며, 경찰청, 자위대, 주일미군 등이 22일 대소동을 벌였고, 23일 아침 공작선이 P-3C에 의해 발견되나 그 정보가 막상 해보에 전달되는 것은 5시간 후였다. 해보는 자체의 감청시설도, 미군정보 획득의 루트도 갖고 있지 못했다.

2차 공작선이 2001년 12월, 동중국해 큐슈 서방해역에 출현하였다.

12월 18일, 이와 관련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한 북한공작선을 미국의 정찰위성이 알아내 방위청에 전달하였다.

12월 19일, 방위청은 큐슈 지역 서일본지방의 통신소를 완전 가동하였고, 가고시마현의 키카이시마 통신소가 공작선의 통신전파를 포착,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12월 21일, 미·일 방위당국은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가고시마 기지에서 출격한 P-3C기가 공작선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에 성공하였으며, 이 사실을 방위청장관과 총리에 보고하였다.

해상 단속 주체인 해보에 전달된 것은 총리보고 후 7시간 후인 12월 22일 새벽이었다. 2차 공작선 사건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지적되었다. 우선 미국 측의 정보제공에서 공작선 발견까지 3일이 걸렸다. 또한, 매뉴얼주의, 관료주의 탓으로 관련 기관에의 정보전달이 늦었다. 특히 해자와 해보 간의 마찰은 도를 지나쳤다. 양 기관은 1999년 1차 공작선 사건 이후 공동대처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무장 해보와 중무장 해자 간의 갈등은 뿌리 깊었으며, 특히 해자의 해보무시가 문제였다. 해자는 유사시 해보의 무능함을 우려해 비상 대기하면서 이지스함, 호위함까지 출동 준비 중이었고 특수부대인 특별경비대도 대기 중이었

다. 그러나 해보 순시선이 공작선을 집요하게 추적하였으며, 충격전 후 공작선은 자진 침몰하였던 것이다. 해보의 강공책은 해자의 신세를 안지려는 양자 간의 미묘한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자가 해보에게 정보전달을 늦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영상정보(IMINT) 수집

(가) 내조실 내각위성정보센터(Cabinet Satellite Intelligence Center)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일본 나름대로 국방태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자체적인 정찰위성 운영과 미사일방위(MD)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99년 정보수집위성도입 준비실이 설치되었으며, 드디어 2001년 내조실내에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위성센터는 중앙센터, 정보분석센터로도 불리면서 첩보위성의 운용과 그에 의해 획득한 화상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타 조사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쿄의 중심지인 신주쿠구(新宿區)에 있다. 일본은 이전까지 미국의 전략정보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였으나 신설된 위성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위성 제작에 본격적 돌입하게 되었고, 드디어 2003년 첫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

정찰위성은 2003년 3월, H-2A 로켓에 의해 광학 1호기와 레이더 1호기가, 2006년 9월에 광학 2호기가, 2007년 2월에 레이더 2호기, 2009년 11월에 광학 3호기, 2011년 9월에 광학 4호기가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연내에 레이더 3호기, 내년엔 레이더 4호기, 2014년에는 광학 5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⁵¹⁴⁾

최근 발사에 성공한 광학 4호기는 지상 6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중상수준 정도의 위성이고, 광학 5호기는 미국위성 수준인 40cm 이하로

514) 기존 위성의 성능 저하와 노후화 때문에 추가적인 위성 발사 추진이 불가피하다. 대략 위성의 수명기간은 5년 정도이다.

해상도를 더욱 제고시킬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나아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GPS 위성도 2016년까지 6~7기 보유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위성망 구축은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결과라는 대체적인 평가이다.

일본의 첩보위성 시스템은 주간 감시용인 광학위성과 야간 감시용인 레이더 위성을 각각 2대씩 보유해 2조 4기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3기 위성을 운용하면서 4일에 1회 정도 동일지점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동일지점에 대한 정찰은 평균 2일에 1회 정도로 행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⁵¹⁵⁾

<일본 정보수집 수단 발전 과정: 정찰위성 중심>

- 1993. 3 : 이지스 ‘콩고’함 준공
- 1993. 5 : 북한, 노동 미사일 발사
- 1998. 8 :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 1998. 9 : 일본, 정찰위성 도입 검토 시작
- 1998.12 : 내각회의에서 위성 도입 결정
- 2001. 4 : 내각위성정보센터 설치
- 2003. 3 : 광학 및 레이더 위성 각1기 발사 성공
- 2003.11 : 광학 및 레이더 위성 각1기 발사 실패
- 2006. 9 : 광학위성 2호기 발사 성공
- 2007. 2 : 레이더 위성 2호기 발사 성공
- 2009.11 : 광학 3호기 발사 성공 (광학 1호기 대체)
- 2011. 9 : 광학 4호기 발사 성공
- 2011 연말 : 레이더 3호기 발사 예정
- 2012 : 레이더 4호기 발사 예정

515)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関』, p. 72.

- 2014 : 광학 5호기 발사 예정
- * 최종적으로는 해상도 40cm 목표
- * 2007. 3 위성 중 1기 고장
- * 2012년까지 정찰위성 4기 체제를 갖춰 지구 상 원하는 지점을 하루 1회 이상 촬영한다는 구상

정찰위성 운용과 관련해서는 본래 영상정보의 인프라를 소유하면서 일상업무로 영상정보를 다루는 방위성, 외국 전반에 대해 정보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외무성, 외사 부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갖는 경찰청 등이 큰 기대를 갖고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들 성청간의 균형을 배려한 조직 구성이 우선적 작업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센터장은 방위성 제복조 OB가, 내조차장과 동격으로 임명되었고, 센터 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의 파견자(심의관급 간부)가, 분석부장은 외무관료가 거의 지정석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간부의 구성은 전체적으로는 영상정보와 관련해 오랜 경험을 보유한 방위성이 앞서면서, 조직운영 부분에서 경찰관료가 이를 추격하는 모양새이다.

위성정보센터의 총 직원 수는 약 320명 정도이며, 신조직으로 약간명의 행정 관련 사무관 이외는 모두 각성청과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자들로 구성되었다. 출신관청은 방위성, 경찰청,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토교통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성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실적으로 센터를 주도하는 방위성, 경찰, 외무성 등 기관은 자부서의 인재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센터의 조직은 크게 관리부, 관제부, 분석부로 구성되며, 관제부에는 민간기업에서 파견한 기술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분석부에는 약 100명의 분석관이 분석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분석부는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동 및 기타 등 4반 체제로 각각 군사시설, 중요 인프라시설, WMD관련시설 등으로 나뉘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시되

고 있는 것은 한반도반의 WMD관련시설 담당관들이다. 센터는 그 밖의 시설로 위성으로부터의 암호전파를 수신해 영상화하는 부센터를 이바라키 현에 갖고 있고, 그 백업 수신 시설인 북(北)수신관제국(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 남(南)수신관제국(가고시마현 아쿠네) 등도 보유하고 있다.

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은 긴밀히 제휴하고 있는 정보본부 영상지리부 소속 160명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센터는 해상도 1미터급 위성 영상 대응이 가능한 IMSS(영상정보지원 시스템)을 200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프랑스 상업위성 사진을 구매해 해석하거나 또는 미군 영상을 해석하는 등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또한 2010년 9월, 독자적인 GPS 위성인 미치비키 1호를 발사해, 현재 운영 중이고, 2008년에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개발 및 방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기타 정보기관

위성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물론 내조실 내각위성정보센터의 역할이 크지만, 타부서들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위성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정보부서가 관여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를 위해 정보수집위성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동(同)위원회는 내각관방장관이 주재하며, 그 구성원으로는 내각위기관리감, 내각정보관, 안보 및 위기관리담당 관방부장관보, 내각위성정보센터장,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방위성방위정책국장, 경찰청경비국장, 공안조사처차장 등으로 일본정보기구를 망라하고 있다. 방위성과 경찰청계가 각 3명, 외무성과 법무성이 각 1명으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이한 것은 경찰청 경비국이 영상정보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1990년대 중반부터 영상분석요원 육성을 개시하였고, 외무성도 1998년에 국제정보국이 상업위성사진의 구매를 시작하면서 분석 요원 육성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부문 정보기관도 내각위성정보센터 분석

부와 제휴하는 영상분석 부문을 각 조직 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실전부대로서는 정보본부 영상·지리부가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지만, 그 외에도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조직 제1국제정보관실 영상분석반,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위성정보관, 내조실 국제 부문 영상분석반 등도 각자의 영상정보 관련 임무를 수행 중이다.

영상정보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구축된 방위성도 미군이 제공하는 영상정보를 최고로 중요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운용되는 위성의 개수와 선명도 등이 아직은 미·일 간에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방위성 청사 일각에는 주일 미군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공군 간부가 상주하면서 자위대 측이 요구하는 영상을 제공할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체적인 정찰위성 운용은 미국 및 타국과의 정보교환의 기회를 질적으로 증대시키므로 어느 정도 기술력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독자의 정찰위성 보유는 의의가 크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인 것 같다.

(다) 일본 영상정보활동 사례: 북한 핵·미사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그때의 주된 수단은 정찰위성이다. 미국이 획득한 정보는 CIA가 내조실에 또는 DIA가 정보본부에 전달된다. 물론 미 국방성과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무부와 외무성의 정기적인 정보교류 시에도 정보전달은 있을 수 있다. 또 때로는 현장에서 미 태평양해군 정보 부문이 직접 해자 자위함대 사령부와 해막정보과에 전달하는 때도 있다.

미국정부가 파악한 대북정보를 전체로 그대로 일본에 전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 측은 전달의 효과를 치밀히 검토한 후 극히 선별된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극히 부분적인 정보조차도 일본 측에는 유일한 신뢰 가능한 귀중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도 위성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고는 있

나 그 성능 자체가 아직은 제한적이라 미국의 첨단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⁵¹⁶⁾

또한, 미국은 정찰위성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정보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를 거점으로 고도 정찰기로 북한영공을 들어가 영상 정찰과 전파신호를 감청하며, 그 결과의 일부는 CIA, DIA 경유로 일본 측의 카운터파트에 전달된다.

2004년 9월, 북한에서 대규모 폭발 가능성의 기사가 나온 후 일본의 정찰위성은 고도 500km 상공에서 초속 7km/h 날면서 폭발 지역을 촬영 하였으나 구름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2004년 4월,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이 발생했다. 일본은 위성궤도를 급하게 수정하면서 발생 후 2일 후 촬영에 성공했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 여름, 일본의 정찰위성은 북한의 대표적인 핵개발 의혹 지역인 영변 주변을 촬영하였다.

이처럼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정찰위성은 이제 북한사정을 정확히 알아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눈)이 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지진파 해석과 대기 중 핵물질(방사성핵종)의 채취·분석으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은 ① 기상청 관측시설이 지진파를 측정, ② 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복수 시설에서 핵물질 관측, ③ 자위대 항공기가 동해 상공의 대기 표본 수집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물질은 지리적 거리가 있는 일본에서보다는 북한 가까이 들어가 대기의 표본을 수집하는 미군기 또는 휴전선 인근 한반도에 설치된 미군 센서가 훨씬 정밀한 자료를 거둬갈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도 일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준의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시 그 징후를 포착한 일본정부는 이시스함을 동해와 태평양의 양 방향에서 전개하면서 레이더에 의해 추적, 탐지의

516)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関』, pp. 198~202.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스함 레이더는 수평선 넘는 범위는 탐지하지 못함으로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동해 깊숙이 전개하는 미군의 미사일 실험 관측기, 관측함(미사일 본체가 발신하는 텔레메트리라는 전파신호를 포착하는 기재를 탑재)에 의존하였다. 실제의 미사일 발사 순간 포착은 미군의 조기 경계 위성에 전적으로 위임, 의존한 바 있다.

(3) 기타 대북정보 수집

북한과 관련한 신호 및 영상정보 이외에 간첩공작, 탈북자정보 등 HUMINT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정보기관(특히 국정원)이 주역이고, 일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본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을 경유로 휴민트를 획득하고 있다. 때로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두터운 정보 루트를 가진 중국 및 러시아 경유로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일본 국내에서도 냉전기로부터 대북 휴민트활동과 관련한 일부의 업적이 존재한다. 조총련 관계자, 재일조선상공인으로부터 정보 수집·분석을 주로公安조사청과 외사경찰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총련 사회의 북한소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조총련 세력의 영향력 저하, 북한권력 중추와 조총련의 연결 약화 등 때문에 조총련을 통한 대북핵심정보의 획득은 더욱 곤란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총련 중시 정책의 변화도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관련 휴민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는 公安조사청 조사 제2부 3부문이다. 조사2부는 대외정보를 담당하는데, 일본 적군 추적은 제1과, 우호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은 2과, 북한담당이 3부문, 북한 이외의 국가담당이 4부문, 이슬람 과격파 담당이 5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公安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행으로 위장된 일본의 첨단기술 및 부품이 실제로는 북한에 제공되고 있으며, 부정 수출되는 정밀기기도 상당해 일본의 첨단기술이 북한의 첨단기술 무기개발에 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WMD 관련 물자의 부정 수출도 감시하는公安조사청의 감시 대상의 최종요국은 북한이다. 북한은 일본 내에 광대한 인적 네트워크 갖고 이를 활용해 첨단 그리고 유용한 일본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⁵¹⁷⁾ 2003년 5월에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장치에 전용할 수 있는 ‘직류안정화전원장치’를 무허가로 북한에 수출하려는 일본인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북한미사일 부품의 90%가 일본제라는 탈북자의 증언도 제시된 바 있다. 북한의 화력선 환경보호는 정기적으로 일본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후 일본은 대북 전면 수출 금지를 시행 중이고 북한의 모든 선박은 일본 입항이 금지되고 있다.⁵¹⁸⁾

公安조사청과 더불어 대북 휴민트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곳이 경찰이다. 경찰은 일본인 납치사건과 북한의 대일 공작활동 저지를 담당한다. 납치사건의 경위 해명과 북한공작기관에 의한 대일공작을 저지·적발하는 책무는 주로 외사경찰이 담당하며, 특히 경찰청 경비국의 외사정보부 외사과와 경시청公安부 외사2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청 외사과는 북한공작기관의 통신(수상선박 포함)을 철저히 감청하고 있다.公安조사청도 북한공작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나公安상의 조사가 주된 임무이다. 따라서 강제수사권, 수사 비용, 수사 전문요원의 수 등에서 유리한 외사경찰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화학무기 원재료,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자재 등의 대북수출 저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경시청公安부 외사1과가 관장하고 있다.

517) 일본에 거주하면서 북한공작원의 편의를 도모, 지원하는 다수 협력자가 있다. 이들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거 알선 등을 하며 심지어는 일련의 납치사건에서 납치대상자를 선정, 현장에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때문에 사실상 인질의 상태에 놓여 있다.

518) 大島眞生, 『公安はだれをマークしているか』(新編新書, 2011), pp. 150-168.

3. 한·일 북한정보 협력방안

가. 한·일 북한정보 협력현황과 문제점

(1) 정치소국, 정보소국 일본

한·일 간 정보 협력현황을 살피기 위해 일본이 여타의 국가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유의할 것이다. 일본은 서방 선진정보국가들과 양호한 제휴 및 유대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밀접한 관계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맺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 MI6(SIS), 프랑스 DGSE, 독일 BND, 이탈리아 SISDE, 캐나다 CSIS, 호주 ASIS, 이스라엘 모사드, 한국 국정원, 대만 국가안전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극비의 중요한 다양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교환의 주된 이유는 △정보전달로 상대국에 바람직한 행동 촉구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전자(前者) 때문이다. 즉, 미국은 원활한 안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제공할만한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전에는 조총련, 조선인 상공인 등을 통해 얻은 대북정보와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진출해 얻은 대중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즉, 미국 측에 제공할 중요 정보가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가와의 협력관계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대 이유는 정치적으로 일본국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교환은 기본적으로 등가교환(等價交換)의 원칙이 기능한다. 상대국이 반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거리가 별로 없으면 상대국으로부터도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정보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은 현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정보세계에서의 주된 관심은 이슬람과 테러의 네트워크와 WMD 관련 국가와 사항에 집중되나 일본은 이와 별로 관계가 없다.

최근 중요 정보가 일본에 모이지 않는다는 일본 내의 비판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동아시아 첩보세계의 중심지가 서울과 홍콩(주요 국제 미디어 취재 거점도),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북·중 국경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문제로 조금은 중요시되나 기본적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정치소국이기 때문 정보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경제대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발언력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 정보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세계에서 일본은 비주류에 불과하다.

(2) 최근 일본의 독자 정보력 강화 노력

최근 일본 내에서도 독자적인 정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다수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고 또한 그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하 그들의 견해를 정리한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독자적인 정보력이 없어도 대미의존으로 어느 정도 생존과 번영을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외부적인 신 위협과 자연재해 등 때문에 국가안보와 번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외의 신 위협은 독자적 판단과 독자적인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해 줄 독자의 정보 수집·분석의 필요성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시대 배경하에 최근 일본 내에서도 정보기구 개혁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분산된 기구의 통합 조정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북한과 중국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일이다. 휴민트에서는 한국, 대만에 이길 수 없으나

군사정보 등 일본이 독자적인 수집이 가능한 분야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정보세계의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 일본의 독자정보의 가치가 크면 타 분야 정보와 관련해 상대국으로부터 정보교환의 형식으로 고급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제까지 포기해온 휴민트 분야도 조금씩 관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동맹국 미국에 대해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별, 지역별 휴민트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대책, WMD 대책 등 이슈별 휴민트도 불가결하다. 휴민트 구축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다는 각오하에 꾸준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

(3) 한·일 정보 협력현황

한·일 간 정보협력은 양국 정보기관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별적인 정보 기관별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가) 내조실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구로서 국정원, CIA의 카운터파트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규모는 왜소하나 그 역할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국가레벨의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시 거의 유일한 상대 창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총리와 직결되므로 의사결정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핫라인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 도래시 상호 협의·대책을 강구하며 신속히 지원책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한·일 국가정보기관들은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고책임자 간의 회합도 간간이 있으며, 분석관 간의 정세(특히 대북) 파악을 위한 상호교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미국과 특수한 안보, 군사, 정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교류, 협력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무자 간의 교류, 협력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나,

양 국민의 감정, 영토문제 등 일부 현안 등 때문에 순조롭고 편한 협력관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일본은 한국의 대북 휴민트에, 한국은 일본의 영상 및 신호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정보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족 부분의 해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의 처지에서 더욱 대미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내조실의 구성이 다수 부서의 혼합형이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협력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즉, 내조실은 순수 내조의 조직에 경찰, 외무, 방위, 공안 등의 부서가 직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對韓)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및 규모의 상이로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한 측면도 존재한다.⁵¹⁹⁾ 내조실의 상대적인 왜소함으로 인해 한국의 국정원은 일본의 여타 정보기구와도 관계를 구축하여 교류 및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가레벨의 정보의 취합·정리는 내조실에서 이뤄지지만, 개별 정보기구는 각자 전문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서 이기주의에 기초해 각자의 정보를 분류·배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부의 중요 정보는 다른 채널로 보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부문 정보기구와의 관계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한 경찰, 방위성 정보본부, 공안조사청, 외무성, 해상보안청 등과의 관계 구축, 제휴 강화는 바람직한 대일정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519) 내각정보관의 지위, 위상(차관보급)과 한국의 국정원장과의 현격한 위상의 차이도 협력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경찰

일본경찰은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대규모의 정보기구다. (약 25만) 대외정보는 외사경찰이 주도하면서 약 70여 개국에 주재관을 파견하여 휴민트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파견관이 기본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경찰은 일본관료사회의 엘리트 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비밀적이며 단결이 강한 조직이다. 외무성이 대외관계를, 경찰이 대내관계를 주도할 정도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강력한 조직이다.

일본경찰은 외사정보에도 강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사정보와 관련해 국정원과 교류하고 있으며, 양국 경찰 간의 정기적인 교류도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현희 일본어 선생이었던 다쿠치와 이은혜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판별한 것과 김현희의 일본방문(일본인납치연 초청) 등에 일본경찰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정보본부

정보본부는 방위성 신청사 입청과 군사보안 강화의 여파로 그 장벽이 더욱 높아져 접근이 어려운 일본 최대의 전문 정보조직이다. 한·일 양국 군은 군 정보기구 간 기본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특히 양국 군 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건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 무관도 상호 교환되고 있다. 일본은 방위주재관의 자격으로 육·해·공 3군 대령급(一佐)의 현역들이 대한(對韓)군사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자위대의 신호정보 공유·획득에 관심이 있지만 일본의 자세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의 NSA와의 특수한 관계(기지제공, 정보공유)유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정보기관

공안조사청은 조총련 활동과 대북첩보와 관련 한국 측과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WMD 관련 물자 단속을 위한 앞으로 양국 기관 간 협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양국 외무성은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속에서 자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싱크탱크(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간의 비공개적 회의 및 접촉도 강화 중에 있다.

해상보안청은 일본주변의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북 한과 바다를 매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동(同)청은 특히 어선을 이용해 일본에 착륙한 북한주민의 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정부를 다루고 있다. 즉, 북한선박의 선원, 일부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대북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작선, 수상한 선박 추격, 격침, 인양 등 작업 과정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맡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기관과 협력할 소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침몰한 북한공작선 인양 과정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기본 재원 자료와 관련해 한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 관련 현안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해상보안청의 역할이 평가받을 수 있고, 한·일정보 협력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나. 한·일 북한정보 협력 및 개선방안

(1) 고려점

대북정보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일본정보기구의 특수성과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근 일본정보환경의 변화 내용을 숙지해야한다.

우선 일본의 국가정보기구인 내조실의 기능 및 능력의 인식이 필요하다. 내조실은 형식적인 국가정보기구로서 외국의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구와 접촉하는 일본 내 유일의 창구이지만 그 조직과 규모의 면에서는 왜소

한 조직이다. 미국은 CIA가 내조실과의 정보협력을 진행하면서도 내조실의 상대적인 역할하므로 말미암아 여타의 부문 정보기구(정보본부, 경찰 등)와의 교류,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정보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협력에 의한 정보획득은 내조실의 강한 장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외정보는 외무성과 경찰이 강한 정보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 갈등으로 인한 패쇄적, 정보 불공유, 부서 이기주의 팽배의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한편, 일본정보는 감청 중심의 신호정보가 전통적으로 강하며, 21세기에 들어 새롭게 화상정보의 역량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력을 발휘해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 선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보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일본정보는 HUMINT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⁵²⁰⁾ 정보 부서 간 공조, 공유 노력이 부족하며, 군사 및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만연, 대북접촉망의 상대적 인 약체 등의 약점을 갖고 있다.

<표 6-5> 일본정보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전통적으로 신호정보 발근	-인간정보의 취약
-화상정보의 질 개선	-부서 공조 취약
-정보선진국과의 연대	-정보에 대한 알레르기
-민간 분야 활용	-대북 접촉 망 취약

최근 일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 변화는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 파워의 동요에

520) 일본 내 인간정보는 경찰, 공안조사청, 정보본부 등이 일부 수행하고는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 보도는 일본 정부도 인간정보수집에 큰 관심이 있고, 호주비밀정보기구, 영국의 MI6, 미국의 CIA 등을 모델로 내조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중국, 북한, 대테러전 등에서 인간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의 저문에 의하면, 일본은 최근에는 심양의 영사관 등 외무성 기관을 통하여 인간정보의 다양한 루트로 대북정보수집망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조총련을 통한 인간정보도 제한되고 센카쿠문제 등으로 중일 긴장이 조성되면서 중국 공안의 감시가 강화되어 구(舊)만주 지역에서의 활동도 애로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능력 보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대중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위협과 북한정세의 유동화 가능성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대처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 차원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2) 정부 차원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 카운터파트 간의 관계 강화

한·일 간 대북정보 협력의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안은 성격이 유사한 정보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고 수준 높게 향상하게 시키는 일이다. 우선,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내조실이 중심이 되어 각기관간의 관계를 제고시키며 나아가 부문기관 간의 관계 강화를 유도·선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부문정보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군 정보기구, 외교부, 경찰 등과 일본의 정보본부, 외무성, 경찰 간의 대북업무교류 강화 등이 해당한다.

정보기관 간의 대북업무 협력은 유사기관 간의 정보대화의 정례화와 교육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 강구가 현실적이다. 이미 국정원과 내조실, 기타 부문 정보기관간의 대화 정례화는 시행되고 있으나 대화의 질적인 발전이 과제일 것이다. 한편, 한·일 간 정보교육의 교류는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나 군사 분야의 교육교류에서 나타나듯 정보 분야에서도 분위기가 조성될 때 정보교육의 교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 분야의 인적교류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도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다.

(나) 이슈별 협력 모색 및 강화

한·일 양국은 안보위협 인식이 유사하고 정보목표도 유사하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특정의 안보현안과 관련해 정보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더구나 양국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상당한 기간 유지·견지하고 있어 정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정보협력 없는 안보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일본정부가 미국을 위시한 정보선진국과의 정보협력관계에서 획득하고 있는 대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⁵²¹⁾

양국은 특히 공통의 최대의 안보현안인 북한문제와 관련해 정보협력의 수준을 대폭 개선,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와 북한의 WMD 확산 저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이 될 것이다.⁵²²⁾ 이는 북한군사와 관련한 정보협력을 의미함으로써 양국의 국가정보기구와 군사 부문의 정보기구 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군사동향파악을 위해 양국이 장기적인 수집방법을 상호보완하면 획득이 되는 정보의 질은 고급화될 수 있다. 즉, 한국의 인간 및 신호정보와 일본의 영상 및 신호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때 더욱 정교한 대북군사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²³⁾

군사정보 이외의 중요한 현안들의 예를 들면, 북한정치체제의 안정도, 북한경제 및 사회의 현황, 북한의 대외관계, 조총련문제 등에 대해서도 분야별, 이슈별로 양국은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대비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21) 이와 관련해 아차파동을 언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위무차관인 아치가 방일 중이던 한국 의원들에게 한반도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고 싶으나 미국을 의식해(당시 한·미관계가 불편했다.) 말해줄 수 없고 했던 해프닝이 발생했다.

522) 북한발 GPS 신호 교란이 발생할 경우, 보조 GPS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응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한·일 간 보조 GPS 시스템 협력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원 송화섭 연구위원 자문).

523) 일본은 사전에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일본 방위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찰위성 운용 등 정보수집능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특히 ISR(정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보 자산이 매우 중요시되나, 위성 운용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BOC(Besoin Operational Commun) 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 간 위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현실성에서는 떨어지나 중장기적으로 한·일 간 위성정보공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국방연구원 송화섭 자문).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유사사태 발생 시 대비책을 민간, 1.5트랙,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를 축적·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일본정부는 다수의 북한주민이 일본에로의 유입 가능성⁵²⁴⁾과 한반도 내의 자국민들의 보호 및 소개(疏開)작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⁵²⁵⁾

(다) 1.5트랙 협력

한·일 정부 간 정보협력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교적 쉽게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가 1.5트랙이다. 즉,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처지에서 더욱 유연하게 그러한 현실성 있게 교류 및 협력의 장을 개척,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국의 각종 국책연구소 소위 싱크탱크간의 연구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연구기능의 한 분야가 북한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현실이다. 일본은 이러한 한계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싱크탱크 간의 교류도 주로 유사한 성격의 연구소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국방연구원(KIDA), 국방대학교와 일본의 방위연구소, 방위대학교가 인적교류 및 안보 세미나의 공동 주최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과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비공개적으로 정세 평가 교류회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사·외교 분야의 대표적

524) 일본정부는 대량난민 발생의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에는 약 20만인 난민 발생 가능성을 단정하면서 수용태세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난민이 동해로 표류해 올 때 국제조약에 따라 이를 거부 못 하고 수용해야하며, 이때 자위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난민 50인에 자위대원 1인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때 4,000명의 자위대원 동원이 필요하며, 3교대 시 1.2만 명이 필요하며, 후방지원까지 고려 시 합계 2개 사단 상당의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민 속에 북한공작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 난민과 공작원의 구별 작업 또한 쉽지 않고, 테러의 가능성도 존재하여 결국 일본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복되는 동해 루트를 통한 탈북 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다수의 Boat People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있다.

525) 일본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거주 자국민의 보호 및 국외 탈출을 위해 자위대의 출동과 한반도에서의 활동 가능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 국책연구소 간의 교류는 더욱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북한의 요소를 연구하는 15트랙 차원의 싱크탱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내조실의 다양한 외곽 연구단체와의 접촉 및 유대관계 구축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싱크탱크 간의 교류제도화와는 별도로 일본 내 유능한 북한 연구자의 리스트업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의 개별적인 유대관계 구축도 필요할 수 있다.

(라) 민간 부문 협력

한·일 간 대북정보협력을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양국 민간 부문의 전문가집단 간의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이다. 그 주축은 민간과 기업연구소 및 대학의 북한연구자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강화이다. 민간 부문의 협력도 유사성격의 기관 간의 교류가 더욱 자연스럽게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 측의 민간연구소로는 세종연구소, 제주평화연구소, 신아시아연구소 등이 있고, 일본 측은 세계평화연구소, 평화안보연구소, 도쿄재단, 오카자키연구소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일 민간연구소간의 연구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신아시아연구소, 일본의 오카자키(岡崎)연구소,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Pacific Foru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등 한·미·일 3국의 싱크탱크가 1990년대 말 왕성하게 안보대화 및 교류 나아가 공동연구 및 정례 세미나 등을 진행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한·일 간에는 안보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상호 방문하면서 민간 차원의 새로운 안보대화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교훈으로 민간 수준의 한·일 인텔리전스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한국의 인텔리전스 관심자들의 모임인 한국국가정보학회와 일본의 정보전문가 집단 간의 교류 등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모색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²⁶⁾

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예를 들면, 삼성경제 연구소, LG연구소, 포스코연구소, 노무라연구소, 미쓰비시연구소, 종합 연구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이하 NIRA)등도 부분적으로 북한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연구소들은 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능 및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가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집단을 포용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미 한·일 주요 대학 간의 학술교류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북한연구가 간의 접촉 및 교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⁵²⁷⁾ 즉, 북한관련 연구회 또는 세미나 등이 조직화 및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관련 학회의 학술행사 시 상호 방문,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일본 내에는 다수의 한반도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한국전문의 연구자들이고 북한전문의 연구자는 소수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한국전문가들이 북한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진은 게이오대 오코노기(小此木政夫) 교수,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武貞秀士)교수, 시즈오카현립대의 이즈미(伊豆見元),⁵²⁸⁾ 고하리(小針進) 교수, 와세다대 시게무라(重村) 교수,⁵²⁹⁾ 정책연구대학원 미치시타(道下徳成) 교수,⁵³⁰⁾ 방위연구소 무로오카, 아쿠쓰 교수⁵³¹⁾ 등으로 망라할 수 있

526) 최근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인텔리전스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교토대학의 나카니시(中西輝政)교수를 중심으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정보 관련이 기본서가 다수 출판된 바 있다. 주요 연구진은 기타오카(北岡 元) 정책연구대학원 교수(前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 외무성 국제정보국 과장, 내조실 위성정보센터 과장 역임, 이론과 실제 경험자), 고다니(小谷巒)방위연구소 교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527) 대표적인 국립대 수준의 학술교류는 서울대와 도쿄대, 사립대는 연세대와 게이오대, 고려대와 와세다대, 서강대와 조지대 등이 유사한 기반과 전통을 기초로 유대관계를 견지하고 있다.

528) 북한 관련 언론이 활동 왕성, 북한문제와 관련해 기존세대 중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529) 장기간 미니니지신문 서울 특파원의 경험을 갖고 북한과 관련해 대담 예측하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530) 미치시타(道下徳成) 교수는 한국에서 어학공부,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학위, 한국어 및 영어가 능통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영어 논문 및 저서 다수 발표, 차세대 북한 및 한반도, 동아시아안보 연구의 유망자이다.

531) 아쿠쓰 교수는 한국에서 어학 공부, 호주국립대 박사학위, 한국어 및 영어 능통, 한반도 관련 안보전문가 신예이다.

다. 오코노기, 다케사다 교수는 현역을 은퇴하였고, 미치시타 등 후진 학자들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북한문제전문가 집단과의 접촉의 기회를 증대시켜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표 6-6> 한·일 북한정보협력 개선방안

	개선방안
고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정보기구의 특수성 (내조실의 조직 및 규모 왜소) 수용 -일본의 정보능력의 장·단점 파악 -최근 일본정보환경의 변화
정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운터파트 간 교류 확대·강화 -정보대화의 정례화 강화 -정보교육의 교류 추진 -정보자산의 상호보완 추구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공동대처방안 강구
1.5트랙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책연구소 간 교류 확대·강화 -북한 관련 공동연구 및 전문가회의 제도화 -내조실 외곽단체와의 접촉 및 교류 확대·활용
민간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력 민간연구소 간 교류 확대·강화 -양국의 북한 관련 학회 간 교류 확대·강화 -양국의 주요 대학 및 기업연구소 간의 연구교류 장려 -일본 내 북한연구자 리스트업, 접촉, 유대관계 구축

V.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가.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과 국외정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을 구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양극체제의 세계질서를 이끌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진 것이다. 비록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능력이 약화하고, 국제적 지위와 역할도 축소되었지만, 대외정책에 대한 전략 구상과 전개는 여전히 지구본을 놓고 이뤄진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지니고 있으며, 기나긴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 대외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와 안보적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외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동 역시 세계적 범주에서 이뤄질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옐친행정부와 푸틴 및 현재의 메드베데프 집권기를 거치면서 다소간 변화를 거듭해 왔다.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목표, 국정운영 성격, 대내정치환경, 국제체제 변화 등 국제환경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립·전개된다. 먼저 구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의 와중 속에서 정치권력 투쟁을 겪었으며, 가격 자유화 등 급격한 시장경제 원칙의 도입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옐친은 이러한 대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측의 원조와 지지 획득을 우선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친서방 추종 노선(1991~1993)’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서방측의 냉담함과 지원하지 않음으로 실패하게 되었으며,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국제사회에의 러시아위상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다시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1994~1995)’으로 선회하게 되고,

1996년 프리마코프가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1999년 12월 옐친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푸틴은 제2차 체첸전을 통해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2000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2008년까지 푸틴집권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푸틴은 ‘강대국 러시아 재건’을 국가목표로 삼고 과거 구소련기 구가했던 강대국으로서의 면도를 되찾는데 진력하였다. 이에는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슬라브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내적으로 푸틴은 집권 초기부터 상원구성법 개정, 대통령 전권대표제의 도입,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 권력 수직화 작업을 통해 대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냈으며, 고유가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푸틴집권기에 이뤄진 외교·안보정책은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었다.⁵³²⁾ 전방위적으로 강대국 노선을 추구하되, 실리를 꾀하는 실용주의적 요소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푸틴은 취임 후 북한, 쿠바, 베트남 등 구소련 붕괴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하거나 소원해졌던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테러전 시대를 맞아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제적 대테러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등 국제질서 변화에 조용해 나가면서, 러시아의 부활을 도모해 나가는 실리 추구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2008년 출범한 메드베데프행정부 역시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은 푸틴이 추구한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후계자 대통령 대 실세 총리’라는 러시아 특유의

532) 러시아 대외정책에 관한 분석은 홍완석,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5), pp. 602~651; 홍완석, “푸틴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분석과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2), pp. 343~363; 신범식, “유라시아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5~323; 박정민,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0), pp. 188~213; Vasily V. Mikheev,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지역사회』, 겨울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4), pp. 9~18 등 참조.

이중권력(tandem) 내지 양두체제(diarchy)의 권력기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메드베데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전 보다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욱 우호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메드베데프 자신이 ‘전진, 러시아!(Go, Russia!) (России, вперед!)’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 핵심어는 ‘현대화’인데, 이후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경제)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외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실용주의적 성향이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푸틴이 권좌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가 추구했던 실용적 신진방위 강대국 노선이 현재 상황보다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 추진과 국외정보 수집·분석·활용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열친, 푸틴, 메드베데프행정부 시기 동안 이뤄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를 토대로, 집권기 별로 정보기관에서 과연 어떤 정보를 먼저 수집·분석하고 활용에 임했을 것인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열친기에는 서방 측의 지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정보 사안에 주력했을 것이고, 푸틴기에는 체첸 관련 대테러정보, 구소련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안보정보,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정보,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정보 등의 획득과 활용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다. 메드베데프 집권기에는 푸틴기 활동에 덧붙여, 경제 현대화를 위한 국외 경제 관련 정보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집권기마다 일련의 외교·안보문서들을 성안하고, 이에 기초해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푸틴 시기에는 국가안보개념(2001.1), 군사독트린(2000.4), 외교 정책개념(2000.6) 해양 독트린 2020(2001.7)⁵³³⁾ 등을 성안하였고, 메드베데프 시기에도 ‘대외 정

533) “Морск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www.scrf.gov.ru/documents/18/34.html>.

책개념(2000.7)', '국가안보전략 2020(2009.5)',⁵³⁴⁾ '환경독트린(2009.12)', '식량안보독트린(2010.1)'⁵³⁵⁾ 및 '신군사독트린(2010.2)'⁵³⁶⁾ 등 외교·안보 문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적 측면에서 NATO의 동진에 대해 민감하며, 미국의 동유럽지역에 대한 MD 구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체첸에서의 분리 독립운동을 포함해 국외 거주 러시아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테러, 불법이민, 마약밀매 등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reset), EU와의 관계 개선 등 서방 주요국들과의 협력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자 하고 있다. 또한, BRICs 정상회담 정례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의 협력 강화 등 세계질서의 다극화, 다극주의를 겨냥한 외교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은 지역별로 미국, 중국,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역별로도 전통적인 군사안보 부문은 물론 국제테러, 국경안보, 경제외교 사안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우에만 살펴볼 때도 러시아는 2006년 6월 미국,⁵³⁷⁾ 2007년 7월과 2010년 12월 영국,⁵³⁸⁾ 2009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 2009년 8월에는 체코, 2010년 12월에는 스페인과 상호 외교관을 맞추방한 바 있다. 이밖에 미인계를 활용한 안나 채프먼 공작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록 냉전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익 추구를 위한 첩보활동의 정보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34)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2009.5.12), <www.scrf.gov.ru/documents/1/99.html>.

535) "Доктри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scrf.gov.ru/documents/15/108.html>>.

536)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2.5), <www.scrf.gov.ru/documents/18/33.html>.

537) 러시아는 러시아를 위해 간첩활동한 전(前)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로버트 핸슨과 관련해 미국주재 러시아 외교관 50명을 추방키로 한 미국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 외교관을 맞추방하였다.

538) 러시아가 영국에 망명 중이던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를 살해한 혐의로 안드레이 루고보이의 신병인도를 거부하면서 영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양국은 외교관을 맞추방하게 되었다. 영국 국 내정보국 MI5는 영국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첩보원이 냉전 당시만큼 많은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0년 12년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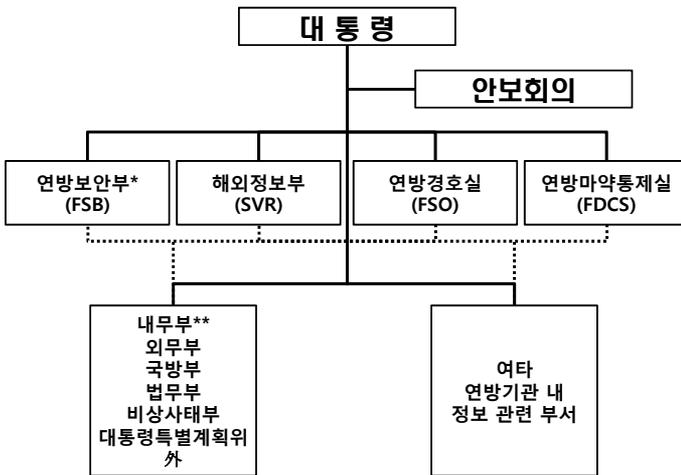
나.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러시아의 정보기관체계는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안보회의(Security Council)가 보좌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크게 보아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보안부(FSB),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해외정보부(SVR,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대외정보국, KGB 제1부가 분리 독립된 조직)의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론 이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또한, 총리가 담당하는 내각과는 별도로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비상사태부 등 외교·안보 관련 무력 부처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무부의 연방이민실, 국방부의 연방군사기술협력실, 연방방위실, 법무부의 연방형집행실 등은 정보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밖에도 연방경호실, 연방마약통제실 및 여타 연방기관 내 정보 관련 부서도 러시아 정보관리체계의 구성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안보회의 정보관리 분야의 수족으로서, 정보 관련 연방기관은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연방보안부(FSB,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ФСБ), 연방해외정보부(SVR, Служба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ВР), 연방경호실(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охраны, ФСО), 정부 시설, 요인에 대한 통신 및 전반적인 보안을 담당), 연방기술수출통제부(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и экспортному контролю, Гостехкомиссия의 후신), 연방관세부(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연방마약통제실(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контролю за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ФСКН, Госнаркоконтроль의 후신), 대통령특명부(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ГУСП, Президента, 응급상황 시 정부 요인들의 대피 시설 관리하는 조직·과거 KGB 15국이 독립하여 발족한 조직, 내무성(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군정보부(Главно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С, ГРУ), 군작계수립부(Военно-топограф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штаба ВС, ВТУ), 대테러본부(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НГ, АТЦ СНГ)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구들 가운데, 국외정보의 경우는 국외에 자체 요원을 파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는 경우로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연방해외정보부 및 군정보부를 주시해야 한다.

<그림 6-6> 러시아연방의 정보기관체계⁵³⁹⁾



* 국경수비대, 연방정부통신정보청 등의 업무는 FSB로 이관

** 내무부(연방이민실), 외무부, 국방부(연방군사기술협력실, 연방방위실), 법무부(연방형집행실), 비상사태부, 대통령 특별계획위 등 대통령 직속기관 포함

(1) 러시아연방 안보회의(Security Council)⁵⁴⁰⁾

러시아연방 안보회의는 러시아 국외정보를 포함해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정보관리 분야의 최고기구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 및 각료와 상하의원 대표 및 양대 정보기구인 FSB와 SVR 국장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011년 11월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위원

539) 서동주,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 『중소연구』, 제31권 2호 여름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p. 142.

540) 유관 법령, 조직 임무 및 활동, 역사 등 러시아연방안보회의(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crf.gov.ru> 참조.

장이며, 파트루셰프가 안보회의 서기직을 맡고 있다. 또한, 푸틴 총리, 글리즈로프 하원의장,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나리시킨 대통령 행정실장, 라브로프 외무장관, 누르갈리에프 내무장관,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장부장, 프라드코프 해외정보부장 등이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⁵⁴¹⁾ 러시아 권력의 핵심인물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8개 연방지구 대통령전권대표들⁵⁴²⁾ 및 모스크바시장,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장 등 지역 대표 및 행정부 및 학술원 의장까지 포함하는 위원이 별도 구성되어 있다. 연중 회의는 2010년의 경우, 3월 17일, 6월 9일, 10월 1일, 12월 13일 이상 4차례 개최된 것으로 공표되었다.⁵⁴³⁾ 연구분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전략 전술 및 정책을 입안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국가외교·안보전략 문제, 국제안보, 독립국가연합(CIS) 문제, 군산복합 및 과학기술 안보, 경제 및 사회안보, 군사안보, 정보안보, 반테러활동,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위협에의 대처문제 등을 다룬다.

(2) 연방보안부(FSB)

러시아정보기관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소연방시절 명성을 떨친 국가보안위원회(KGB)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KGB는 1991년 8월 군부쿠데타에의 가담과 실패 등 러시아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연방보안부(FSB)와 해외정보부(SVR), 연방정부통신정보청(FAPSI), 연방경호국(FSO), 국경수비대(FPS) 등으로 분할 재편되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95년에는 연방경호총국을 대통령 경호실에 통합시키고 대테러

541) <www.scrf.gov.ru/persons/sections/6/> (검색일 2011.11.15).

542) 부총리 겸 북카프카스지구 대통령전권대표(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외에 북서지구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중앙지구 (в Центра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남부지구 (в Юж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극동지구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우랄지구 (в Ураль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프리볼스키지구 (в Приволж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시베리아지구 (в Сибир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대통령전권대표로 구성된다.

543) <<http://www.scrf.gov.ru/documents/19/53.html>> (검색일 2011.10.1).

업무 단일화를 위해 알파 특수부대를 연방보안부에 이관한 바 있다. 또한, 국경수비대를 연방보안부에 편입시키고, 연방정보통신정보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보안부에 이관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체계를 개편시켜 나가고 있다.⁵⁴⁴⁾

연방보안부의 기본임무는 러시아 시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전, 헌법체계 보호 등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⁵⁴⁵⁾ 연방보안부장은 보르트니코프이며, 6명의 차장이 있다. 조직원은 약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임무는 방첩과 국경수비, 반테러 작전 및 조직범죄 예방, 외국정보기관과 합동훈련 등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 및 경제 범죄 퇴치 등으로 크게 나뉜다. 연방보안부는 기본적으로 대내안보문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국외정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즉, 연방보안부는 국외 전자감청을 담당하는 연방정보통신정보청(FAPSI)의 기능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제테러, 사이버 안보, 불법이주 차단, 무기 및 마약물질 불법 유통 해결 등과 연계되어 국외정보활동⁵⁴⁶⁾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3) 해외정보부(SVR)

해외정보부는 러시아에서 국외정보를 다루는 가장 주요한 정보기관이다. 원래는 KGB의 제1국이었던 기구를 1991년 12월 독립하여 별도 조직으로 발족하였다. 본부는 모스크바 남쪽 야세네보(Yasenevo) 지구에 위치한다. 해외정보부장은 총리를 역임한 보르다브킨이며, 직원 수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방보안부와는 달리, 해외정보부는 러시아 국외의 정보와 간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 전략, 경제, 과학, 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안보 정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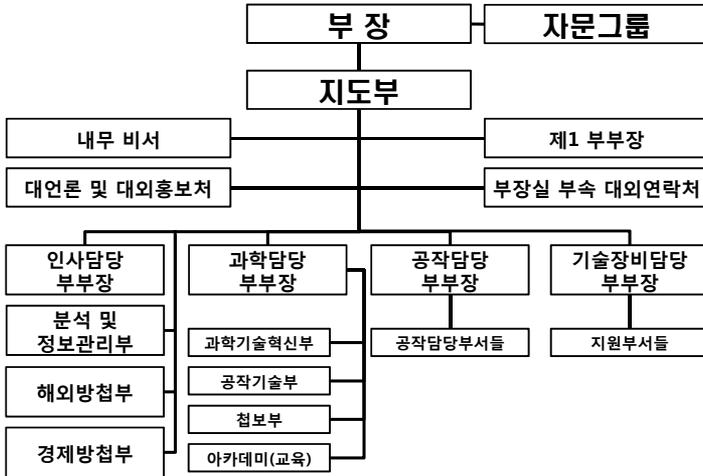
544) 현재의 운용 중인 연방보안부 조직구성체계는 <www.fsb.ru/fsb/structure.htm> 참조 (검색일 2011.11.15).

545) KGB, SVR를 비롯해 러시아 정보기관의 조직 개편과 현황, 세부활동에 대한 분석은 김광린,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현황과 활동: FSB와 SVR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 (국제대학교육종합대학원, 2010), pp. 185~220 참조

546) 연방보안부의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sb.ru/fsb/international.htm> (검색일 2011.11.15).

제반조치의 실행, 해외 공관원과 그 가족 보호, FSB, SVR 등 국가정보기관들과의 합동 활동, 외국에서의 전자 감청,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의 확산 방지, 불법무기와 마약거래, 조직범죄에 관한 업무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국가들의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교관, 무역대표부 직원, 특파원, 상사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 파견된 요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⁵⁴⁷⁾ 해외정보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http://svr.gov.ru>> 밝히고 있는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6-7> 러시아 해외정보부 조직표⁵⁴⁸⁾



한편, 국외에서의 활동은 군정보기구인 GRU(Chief Intelligence Directorate of the General Staff of the Russian Army, 러시아군첩보대)와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해외정보부는 지휘하고 실행은 GRU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의 경우, GRU는 해외정보부에 비해 6배 정도 많은 요원을 국외에서 활동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해외정보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정보기관과 반테러 협력 및 정보공유를

547) 김광린,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현황과 활동 FSB와 SVR을 중심으로,” pp. 206-207.

548) <http://svr.gov.ru/svr_today/struk_sh.htm> (검색일: 2011.10.1).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보분석 및 첩보의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⁵⁴⁹⁾

(4) 군정보부(GRU)

GRU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보수집과 직접적인 작전 수행으로 알려졌다. 주로 군무원 및 해외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작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체첸 분리주의자 지도자인 조하르 두다예프의 위치를 첨단 위성 전자 장비를 이용해 탐지해서 암살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는 ‘둥’과 ‘서’라는 체첸인들로 구성된 두 개의 특수여단(스페츠나즈)을 구성하여 체첸전쟁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8월 당시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두 여단의 지도자들을 만나 공을 치하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2004년 2월 13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체첸의 지도자 안다르비에프와 그의 13세 아들의 살해사건도 GRU의 공작이었다고 한다. 당시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나 러시아로 송환되었는데 이들은 러시아 정보기관원으로 알려졌다.⁵⁵⁰⁾ 체첸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연방보안부(FSB)와는 달리 GRU는 직접 작전에 참여했다⁵⁵¹⁾고 하지만 사실은 연방보안부의 정보와 작전에 따라 GRU는 실행만 했다는 주장도 있다.⁵⁵²⁾

(5) 민간 부문

전직 KGB 요원인 유리 스페츠(Yuri Shvets)에 의하면, 구 소련시절에는 KGB가 국외요원을 충원하는데, 주로 외무성 인력, 그리고 소련정부 대외통상 관련 인력, 그리고 언론 인력(대표적인 예가 TASS통신 특파원)을 통해 충원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 러시아 정부는 국외에 광범위하게 진출

549) Christopher M. Andrew and Vasili Mitrokhin, *The Mitrokhin archive: the KGB in Europe and the West*, Gardners Books. (New York: Penguin, 2000).

550) <<http://www.agentura.ru/english/dossier/gru>> (검색일 2011.10.1).

551) <<http://www.agentura.ru/english/dossier/gru>> (검색일 2011.10.1).

552) 런던 인터뷰, 2011.10.20.

해 있는 민간회사를 통해 충분한 인력충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Gazprom), 석유회사인 루코일(LUKoil)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⁵⁵³⁾

그러나 민간회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러시아 정보부가 개입되어 있는 회사는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예로플로트(Aeroflot)다. 냉전시절 소련 국영항공사였던 아예로플로트는 국외 파견 소련공민들 가운데 강제송환이 필요할 때 동 항공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는 서방의 연구실험실에서 도난당한 세균이 ‘생화학무기 개발용도’로 아예로플로트의 승무원 짐칸을 통해 러시아로 반입된 사건도 있었다.⁵⁵⁴⁾ 1996년 민간 사업가 니콜라이 글루사코프(Nikolai Glushkov)가 아예로플로트 경영을 맡은 당시, 14,000명의 직원 가운데, 3,000여 명의 FSB, SVR, GRU 요원이 있었다고 한다.⁵⁵⁵⁾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예로플로트의 경영 총책임자는 FSB의 고위간부 출신이며, 푸틴의 측근으로 알려진 빅터 이바노프(Viktor Ivanov)였다.

러시아의 정보관리는 민간 부문과의 협조체제라기보다는 요원을 직접 신분위장을 통해 파견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학자, 유학생, 심지어는 현지에서 정착하여 사는 신분으로도 정보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가 러시아로 송환된 안나 채프먼 사건은 대표적인 예이다.⁵⁵⁶⁾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제는 정보기관 주도, 특히 FSB와 GRU의 주도하에 정보기관, 외교관, 언론인, 학자, 유학생, 민간회사

553) Mark Franchetti and Sarah Baxter, "Putin spy war on the West," (The Sunday Times, 20, May, 2007); Jonathan Littell, "The Security Orga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 Brief History 1991~2004," (Paris: Psn Publishing House, 2006).

554) Alexander Kouzminov, *Biological Espionage: Special Operations of the Soviet and Russ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West*, (Yorkshire: Greenhill Books, 2006.1.1).

555) 당시 그가 확인한 바로는 아예로플로트 항공권 판매 대금이 무려 352개의 국외계좌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서, 이들 계좌를 폐쇄하고, 1996년 당시 SVR의 책임자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Yevgeni Primakov)와 FSB 책임자 미하일 바르쉬코프(Mikhail Barsukov)에게 정보요원들의 봉급 대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2000년 그는 당국에 의해 공공형량죄를 선고 받았다.

556) <<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2713>> (검색일 2011.10.1).

직원, 현지 정착신분 등 다양한 형태로 요원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국외정보관리체계의 특징

러시아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렵다. 이는 바로 러시아 정보환경의 현실에서 비롯되며, 정보관리체계의 그 대체적인 특징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정보기관이나 그렇지만, 특히 러시아정보기관의 활동이나 구조 전반 등에 관한 사실도 많은 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러시아정보기관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정보관리체계는 사실 과거 소련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소련이 해체된 시기를 전후해서 많은 전직 구소련의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회고록, 인터뷰 등을 통해 쏟아 낸 자료들은 그나마 과거의 내막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과거의 활동을 근거로 현재에도 대체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설적 전제로 삼고자 한다.⁵⁵⁷⁾ 구소련의 문서보관서의 자료들이 많은 참고가 된다.⁵⁵⁸⁾

둘째, 러시아 정부 역할의 상대적 과도함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우리가 다루려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민주화의 정도가 성숙하여 민·관 간에 혹은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이 상호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직도 과거 소련 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두드러지며, 국가 영역의 사회 영역에 대한 관여,

557) 과거 소련시절 정보기관의 활동과 현재의 활동을 같은 연장선에서 보려는 이유는 첫째, 현재 러시아의 실질적인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푸틴 총리가 과거 소련의 KGB에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성장해 온 KGB장교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KGB의 후신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FSB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바 있고, 둘째, 푸틴을 이후로 러시아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과거 KGB에서 성장해 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자수, “냉전 후 러시아 정치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pp. 139~174 참고.

558) 하지만 현재 고문서실의 자료 공개, 특히 KGB 문서실은 더욱 공개의 폭이 좁아졌다. 연구자는 2011년 10월 19일 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실 현재 명칭은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истории, РГАСПИ,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실, 모스크바 시내 발샤야 드미트롭카 15번지 소재를 방문하였는데, 2004년 방문했을 때보다 문서 공개의 범위가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조종, 통제 혹은 장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가 러시아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예이다.

셋째, 국가기구 내부와 일반 사회를 막론하고 유통되는 국외정보가 다양하지 않고 대체로 일체화된 인상을 준다. 그것은 공개, 투명성의 정도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기관의 활동에 관한 공개사항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나라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넷째, 러시아에서 특히 국외정보의 유통 과정은 관찰하다 보면, 정보가 정부주도로 일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다양한 정보보다는 집약된 정보의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더하여 정보 생산 과정이 자율적으로 집약되어 상부로 전달되기보다는, 상부의 방침 혹은 정책방안에 맞는 정보만이 정리되어 보고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의 수합과 분석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전망을 세우는 작업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쪽으로 발달했다. 예를 들면, 테러, 암살, 반혁명 세력 분쇄, 반소 분자 제거, 협력자 혹은 스파이 총원 등에 주력해 왔음⁵⁵⁹⁾ 소련 정보기관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요컨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전 정보의 획득 실패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과연 러시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559) 다음은 전 KGB대령의 독극물 테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이다. “독일 검찰이 베를린에 거주하는 러시아 반 체제 인사 부부가 독극물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27일 전했다. 이달 초 독일 시사주간지 포커스는 빅토르와 마리나 칼라슈니코프 부부의 혈중 수은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 검찰청 대변인은 칼라슈니코프 부부가 계획적인 중독인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정치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인 빅토르 칼라슈니코프는 브뤼셀과 빈에서 옛 소련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으로 일하다 보리스 옐친의 연구원으로 합류했으며, 부인인 마리나 칼라슈니코프는 역사학자다. 부부는 둘 다 1990년대 말부터 프리랜서 기자와 논평가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해 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각지를 옮겨 다녔다. 지난 10월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이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안증과 심한 두통 및 척추 통증에 시달리는 등 이상한 증세를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수치가 정상(1~3 $\mu\text{g/l}$)보다 훨씬 높은 53.7 $\mu\text{g/l}$, 56 $\mu\text{g/l}$ 로 측정됐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러시아 첩보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런던에서 방사성 독극물 테러로 암살됐다. 영국 수사관들은 전 KGB 요원 안드레이 루고보이를 암살 배후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0년 12월 28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849817&ctg=1300> (검색일: 2011.8.6).

것이냐를 가늠해 봄이 오히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러시아와의 정보협조협력관계는 정보공유 혹은 교환보다는 직접적인 현상타개의 측면에서 공조할 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안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 국외정보 유통체계는 ① 연속성(냉전기 상황이 연속, 복원, 강화되고 있음), ② 관주도(민간, 시민사회 영역의 상대적 미약과 강력한 정부 주도), ③ 일체성(언론보도와 정부방침의 상호 조율), ④ 하향성(자율적 사실 분석에 입각한 정보의 상향적 유통이 아니라 상부방침에 맞는 정보의 주문·생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표 6-7>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특징

구분	과거(구소련)	현재
수집·분석	수집과 분석보고서 작성은 모든 구성원의 임무	수집·분석에 정책적 제안까지 포함
공작	내부협조자 확보, 탈법행위 포함	휴민트 중시, 탈법 포함
정책반영	형식적 혹은 결국은 당 중앙위의 판단	정책결정 과정에 절대적 영향력
평가	성과 지향적	과정중시, 대외이미지 신경

한편, 자료 분석과 대담 등을 통해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관찰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소련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면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전통의 답습의 측면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여기서 과거의 방식이란 국외정보를 수집·분석, 정책 대안 수립이라는 역할 틀에서 벗어나, 상부(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구체적인 공작 지시를 수행하는 수족의 수준에 가깝다. 둘째, 여전히 분석보다는 공작의 흔적들이 확인된다. 셋째, 이 점에서 밑에서 위로 흐르는 정보의 유통 과정은 보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지시의 공작 수행만이 두드러진다. 넷째, 그렇지 않고 전통적으로 충분히 밑에서 위로의 정보 유통 시스템이 유지됐다거나 혹은 과거는 아니었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최고 실권자의 전횡적 정책결정 가능성이 여전히 개연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장된 마당에는 정보기관의 정보 유통 시스템의 민주성이나 효율성은 의미가 무색해 지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어쨌든, 현재 러시아 정보기관은 과거의 일방적 관성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정책 과정 담당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응하려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가. 러시아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1990년 한·러수교 이후 북·러관계는 시기별로 관계악화기(1990.9~94.8), 관계개선 모색기(1994.9~95.12), 접근 확대·강화기(1996.1~2000.1), 관계 복원 및 밀착기(2000.2~08.5), 답보 내지 정체기(2008.6~11.2), 관계 강화 적극화기(2011.3~현재)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접근 정책은 여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계 ⇒ 유라시아 ⇒ 동아시아 ⇒ 동북아 ⇒ 한반도 ⇒ 북한으로 이어지는 대외정책과 전략의 연장선 속에서 진행된다.

러시아의 동아시아·동북아 정책은 먼저, 지전략적 측면에서 동서균형 세계전략에의 보완성 확충, 동부국경선의 안정과 안전보장, 영토적 통일성 보전, 동북아안보 주도권 등의 국가이익과 정책 목표가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 정착, 동북아 다극체제 이식, 전통적 우방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권예의 편입, 역내 경제협력기구예의 주도적 참여, 신흥아시아 수출시장의 확대,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촉진 등에 관심이 있다.⁵⁶⁰⁾

560) 홍완석, “푸틴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p. 630, p. 638; 서동주, 고재남, 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의 역할,”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파주 (주)한국학술정보, 2009), p. 365.

나아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호혜적인 경제관계 확대, 한반도문제에의 당사자로서의 참여 등의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보듯 한반도안보 현안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며, 남북한에 대한 관계 증진 및 영향력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덧붙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통과 가스관 연결사업, TSR, TKR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경협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유도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등거리 접근’을 한반도 정책 추진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 있어 북한은 정치·전략적 완충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안보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을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8월 김정일이 극동 지역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면에는 양국 모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비 및 북한의 지나친 대중 경사에 대한 균형 잡기의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에의 참여, WMD 확산 방지 등 역내 안보적 안정 도모를 위해 관심을 뒤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요한 역내 안정 도모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논의 중인 북한통과 가스관 연결사업에서 보듯이 남·북·러 3각 경협의 실질적 참가자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2011년 3월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의 방북을 비롯해 5월에는 프라드코프 국외정보부장의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8월에는 메드베데프-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2002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되는 등 러시아의 공세적 접근과 더불어 북·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양국관계의 외교 채널이 비대칭적으로 바뀌었다. 과거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당과 당의 채널에서 주요정책이 결정되고, 이를 행정부가 실행하는 구조였다면, 현재 북한 노동당의 파트너가 러시아 집권 여당인지 혹은 대통령 행정실인지, 아니면 정보기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일설에는 평양의 러시아 정교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을 연결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여지가 없다.⁵⁶¹⁾ 물론 북한의 내각이 러시아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만, 가령 아직도 러시아 외무성이나 북한의 외무성은 실행기관에 불과하므로⁵⁶²⁾ 양국관계 조율과 같은 수준의 업무는 아마도 정보기관에서 담당할 개연성이 있다.

둘째, 이념적 동질성이 사라졌다. 과거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사회주의 맹방이라는 틀은 사라졌다. 김정일의 표현에 의하면 흐루시초프 당시, 코메콘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과 1990년대 초 한국과 수교한 사건은 공히 양국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예라고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에는 양국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확실히 실종되었다.

셋째, 공동 이해관계의 내용이 바뀌었다. 소련의 국가이익과 북한의 국가이익이 공동운명체 수준으로 동일하게 겹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방진영과의 대치선상에서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충족시키는 한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협력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단 냉전이 해체되어서만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발달로 말미암아 러시아로서는 지정학적인 완충지대란 상당부분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561) 그러나 어떤 대담자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대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익명을 요구하지 않은 콘스탄틴 프레이브라젠스키만이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562) 러시아 외무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에 북한은 대미, 대한관계 혹은 동북아정세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로서의 전략적 가치와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과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TSR(Trans Siberian Railway)과 TKR(Trans Korean Railway)의 연결 및 통과지대로써의 경제적 가치가 대두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으로서는 경제원조 수혜 및 노동력 진출 시장, 첨단무기 지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다른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좀 더 관찰해야 할 것 이다.

넷째, 한·러관계가 북·러관계에 우선하는 측면이 두드러졌다. 한·러 간의 무역관계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⁵⁶³⁾ 양국 간의 문화교류 또한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더욱 확대일로에 있다.⁵⁶⁴⁾ 그 외 학술, 관광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는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긴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에 북·러 간의 무역관계는 최근 4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⁵⁶⁵⁾ 그 외 문화 및 기타 교류는 한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의미가 없는 정도이다. 이처럼 위의 네 가지 측면만 보아도 북·러관계는 한·러 관계에 비해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양국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 소련 시절의 유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친화적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대, 견제 또는 경쟁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태도와 입장이 북한의 대미자세와 친화성을 갖는 측면이 존재한다.⁵⁶⁶⁾ 둘째, 러시아의 권력층을 중심으로 최근 스탈린에 대한 호의적인 재평가 무드와 관련해서 김정일의 집권 방식은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에게 호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⁵⁶⁷⁾ 셋째,

563)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러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77억 달러이며, 대러 수입은 71%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된다. 관세청 수출입통계, (2011), <<http://blog.daum.net/sanatana/16518063>> (검색일 2011.8.6).

564)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한·러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상세하다. <<http://www.koruss.org>>.

565) 러시아 관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북한의 대러 수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천만 달러이며, 대러 수입은 58% 감소한 4천백만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로는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다.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검색일 2011.8.6).

566)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폴리콥스키, 성종환 역, 『동방특급열차-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567) 앞서 언급한 폴리콥스키의 저서에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스탈린에의 향수가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저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과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은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요구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진출을 도모하면서, TSR, TKR 철도의 통합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가스관의 북한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⁵⁶⁸⁾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 이익 역시 예상된다. 넷째, 양국 모두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극동의 정세가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안정 특히 지역적 통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데 아직 체첸을 비롯해 분리 독립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 정치적으로도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김정일과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⁶⁹⁾ 이상에서 북·러관계의 변화된 양상을 상호 배제적인 면과 상호 친화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친화적 요인과 상호 배제적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으로 작용하는 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보부의 북한 관련 정보의 습득에는 양국관계가 친화적 혹은 상호 배제적 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는 김정일이 방러 당시 사용한 열차 차량이 스탈린이 선물한 것임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568)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22000203>> (검색일 2011.8.6).

569) 이에 대해서는 이지수, “아국민의 현지 활동을 제약하는 러시아 관계법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 pp. 95~96.

나. 북한정보관리체계⁵⁷⁰⁾

(1) 러시아의 북한정보 수집·분석

오늘날 러시아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거론할 때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정보기관의 막강한 위상을 들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정보기관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 또는 정부의 하위기구로서의 위상보다는 정부의 정책 입안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책 채택의 지침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과거 공산당과 행정부의 관계를 상기해 볼 때 공산당 대신 당의 역할을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도 여길 소지가 있다.⁵⁷¹⁾ 결국, 북한정보의 수집에서도 정보기관이 주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수립 또한 정보기관의 영역인 것으로 추측된다.⁵⁷²⁾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단일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정보에 관한 한, SVR과 GRU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⁷³⁾

570) 이 부분은 자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러시아 외교관 2인(모스크바, 서울), 러시아 한국 학 관련 학자 2인(모스크바), 은퇴 공산당 고위 간부 1인(모스크바), 전직 기자 1인(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하원 전문위원회 고위직 1인(모스크바), 전직 러시아 정보기관 장교 2인(미국, 영국과의 사신 교환 및 대면 인터뷰)의 덕으로 쓸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정보원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정보원에 따르면' 이라고 표현한다.

571) 혁명 이후부터 소련 해체 직후까지 러시아 정보기관의 운영 동향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러시아 정보기관의 규모, 통제 및 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수, "냉전 후 러시아 정치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전망," pp. 143~144.

572)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화를 소개한다. 이 글의 정보원 중 하나인 순수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모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외교관(2011.10.1. 현재는 제3국 주재)에 의하면, 천안함사건에 대한 자신의 언급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달라졌다. 애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는 '당연히 북한의 소행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 그 후,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 결과 발표 없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분국으로 귀환한 후 정부에 보고를 먼저 한 후, 발표할 것이든 물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후, 러시아에서 천안함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른 견해가 떠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진상 규명에 관한 한 결론 발표가 없다.'라고 했다. 필자는 여기서 한국의 전직 외교 고위층과의 대담 내용을 상기했다. 즉, 70년대 초, 외교관 초임 시절,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연수를 받던 중 배운 요한인 팀이, 자신의 양심과 정부의 방침이 상충할 때, 상대국의 파트너와의 개인적인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자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때는, 서두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다. 상기 러시아 외교관(혹은 주러시아 대사관은 정작 애초 러시아 본국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결정에 대해서도 적어도 러시아 외무성은 별다른 영향력이나 간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73) Its officers are more patriotic than those of the KGB/SVR: the number of the GRU defectors is much smaller. And Western writers have not devoted to it as many books as to the KGB. Simply because they are not so much aware of GRU, the most obscure part of Russian intelligence. The current article is based not only on the published sources, but also on the author's personal experience of contacting and interviewing many GRU officers during his own KGB service from 1976 to 1991. The result includes some unknown aspects and methods of the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Konstantin Preobrazhensky, <<http://www.washprofile.org/en/node/4518>> (검색일 2011.10.1). Konstantin Preobrazhensky에 대해서는, <<http://www.intelligencesummit.org/speakers/KP.php>> (검색일 2011.10.1).

정보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다루는 대외정보 영역은, 첫째, 정치정보, 둘째, 과학 및 기술정보(산업스파이), 셋째, 비합법정보이며, 이상의 정보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양 기관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SVR이 대외방첩 업무 영역을 독점하는 장치를 통해 내용적으로는 GRU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SVR은 GRU요원을 자기 협력자 혹은 요원으로 뽑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반해, GRU에서는 SVR요원을 임의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북한은 대사관에 파견된 정보요원 가운데 GRU와 SVR요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히닌대사가 이끌고 있는 주북 러시아대사관에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대북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대북정보수집·분석의 활동 이외에 여타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정보활동이 연계되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은 폐쇄국가라는 특이점 때문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많은 최고급 순위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건강상태를 비롯해 세계관과 가치관, 정책에 대한 입장, 외교적 행보 또는 제스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세의 파악, 북한 내부의 권력동향 등 많은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정보를 상호 접할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김정일과 이미 네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는 푸틴정부 출범 직후인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유예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토대로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성과를 내세우며 국제무대에 데뷔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2001년 7월 김정일이 장기간에 걸쳐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뤄진 푸틴-김정일 간 정상회담이었다.⁵⁷⁴⁾ 잘 아는 바처럼 당시 콘스탄틴 폴리콥스키

574)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차 편으로 전년도 푸틴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양국 정상회담 이후 8개 항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1986년 김일성 방소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전용열차를 타고 김정일과 동행하였으며, 이를 책으로 출판한 바 있다. 김정일과의 대화, 습관, 사고 등 모든 측면이 관찰과 정보 획득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세 번째는 2002년 8월 김정일이 극동 지역을 비공식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방문 전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 하산에서 폴리콥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먼저 가졌으며, 다르킨 연해주지사, 코필로프 블라디보스톡 시장 등이 영접에 나섰다. 당시로써는 세 차례에 걸쳐 연례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네 번째는 2011년도 8월에 이뤄진 김정일의 올란우데 방문에 따른 메드 베데프와의 정상회담이었다. 9년 만에 치른 정상회담인 만큼 공백 기간의 정보부족 부문을 많이 채워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 측에서는 이샤예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김정은 후계체제 진행상황을 비롯해 현 북한 지도부의 동향 및 북한 내부 정세에 관한 고위급정보를 파악해 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매년 이뤄지는 것으로는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수집활동이다. 양국은 외교관을 비롯해 장차관급 회담 등 고위급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며 교류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2009년 1월과 2011년 3월에 북한을 방문하였고,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2009년 4월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밖에도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2009년 11월, 프라드코프 해외정보부장이 2011년 5월 북한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했다. 특히, 프라드코프의 해외정보부장의 방북은 김정일의 방러를 사전에 조율하고, 김정은에게 국제정세를 교육하기 위해 해외정보부(SVR)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보도⁵⁷⁵⁾와 연계되어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는 셀레즈노프 하원의장,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 이그나텐코 부총

575) 『연합뉴스』, 2011년 8월 24일.

리, 야코블레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마트비엔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로슈코프 외무차관, 카라신 외무차관, 콘스탄틴 코사초프 국가두마 외교위원장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북한 측에서는 박의춘 외무상이 2008년 10월과 2010년 12월에,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008년 11월에, 리명산 무역성 부상이 2008년 11월에, 이용남 무역상이 2011년 2월에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양측 모두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친분 도모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정세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고위관리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의 개인 면담을 했는가 하는 여부도 정보획득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러시아가 대북정보수집에 중점을 두는 부문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안보 현안정보일 것이다. 북한은 이미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UN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6자회담은 러시아에게 있어 한반도문제에 당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외교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책목표와도 연계되어 북한의 안보 관련 행보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외교부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를 소환해 유감을 표명하고, 1874호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하기위해 러시아는 나름의 정보 수집·분석을 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외교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은 북한 내부 동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를 테면 2009년 12월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였을 때도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정보의 경우 러시아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가장 신뢰 있게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북·러는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경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4차 회담이 열렸고, 2011년도에 제5차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대리 채무상환문제, 북한통과 가스관 연결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다양한 양국 간의 경협 문제를 다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북 러시아 상공회의소와 무역대표부를 활용한 정보수집활동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에 파견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직원 등 러시아 언론매체도 여타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북정보수집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정보수집은 별도로 하더라도, 유관연구소에서는 한반도전문가들이 책과 논문 작업을 통해 현안진단과 분석을 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티타렌코 소장을 비롯해 다수의 한반도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극동연구소 <www.ifes-ras.ru>를 비롯해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www.imemo.ru>, 동방학연구소 등을 꼽을 수 있다. 모스크바국립대학,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 외교관을 양성해 내는 국제관계대학,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 등 학계에서도 한반도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론적·학술적 연구는 물론 정책적 측면의 제언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정부 후원하에 남북 모두에게 러시아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바체슬라브 니코노프가 이끌고 있는 루스끼미르 재단 <www.rusскиymir.ru>도 주목할 기관이다. 이 밖에도 미-캐나다연구소 <www.iskran.ru>,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www.carnegie.ru> 등에서도 동북아와 한반도 관련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러시아 정보기관은 북한인 협력자 혹은 오열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① 북한체제에 의심을 품고, 다른 권력대안을 생각하는 자, ② 돈에 의해 매수된 자, ③ 약점을 계기로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면, 북한권력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소유한 자의 범주에서 찾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러시아가 실행하고 있는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정보교류는 상호 경쟁

모델이나 상호 협조모델이라기보다는 민간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장악·주도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간사회나 정부 내 관료사회, 양자 모두, 다원적인 구성 혹은 다원적인 문화가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가령 러시아의 정교 교회가 평양에 세워지는 경우, 러시아 정교회가 평양에서 정교회의 순수한 종교적 목적만으로 활동하는 지, 혹은 러시아 정부의 통제하에 일종의 비밀외교접촉 창구 혹은 첩보활동 기지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일단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⁵⁷⁶⁾ 러시아는 모스크바의 정교회 본부를 정점으로 한 국외 정교회 조직을 규합하여 활용한다고 한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아마도 자국 내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각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북한에 러시아 정교회가 설치된 것은 대단히 어색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 8월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을 준공하였다. 주목 러시아 정교회 역시 일정부문 대북정보수집에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보아 러시아의 대북정보관리체계는 정책 결정부의 지침하에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수집 지시’와 ‘지침의 실행’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식 정보망으로 정부, 현지대사관, (반)관영언론을 비공식 정보망으로 현지 정교회, 유학생, 북한인 정보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러시아의 북한정보 활동 평가

필자가 수행한 서지 자료조사와 면담 작업을 통해 얻은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정보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⁷⁷⁾

첫째, 수집·분석의 측면에서 구소련기에는 휴민트(HUMINT)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휴민트를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작의 측면은

576) 푸틴정부 들어서서 러시아 정교회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http://www.voanews.com/russian/news/a-33-2005-08-18-voa7.html>> (검색일 2011.10.1).

577)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서지 자료를 통한 조사와 아울러 면담 작업을 하였다. 특히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일본에서 타스통신 기자의 신분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콘스탄틴 프레이브라젠스키에게서 연구의 실마리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구소련기에 거의 없었으며, 현재는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셋째, 정책반영의 측면에서 구소련기에는 당의 방침이 절대적이었으며, 정보조직은 거의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는 정책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구소련기에 과업 수행적이었던 면에 비해 현재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8>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정보활동 특징⁵⁷⁸⁾

정보활동	과거(구소련)	현재
수집·분석	휴민트 중심	휴민트 복원 진행
공작	거의 없었음	알 수 없음
정책반영	당의 방침이 절대적인데 정보조직은 거의 배제	정책형성에 영향력 증대
평가	과업수행적	정책중심

한편 천안함사건과 북핵문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대북정보관리체계의 실상과 활용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가) 천안함사건 사례

앞에서 상세히 언급한바, 정보원(당시 주한 러시아대사관 외교관)의 몇 차례 바뀐 태도로 미루어 보아, 천안함사건과 관련해 적어도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모스크바의 외무성의 북한정보관리체계의 실상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무성과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최고실권자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당분간 지침을 받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언했었던 점에서 그렇다.

578) 이는 취재원들에게 질문한 내용들과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둘째, 이것은 비단 외무성이나 주한 러시아대사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최고실권자조차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정보기관들의 각종 정보 수합에 따른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정보기관 스스로 판단을 유보했거나 아니면 판단을 했더라도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유보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러시아 정부의 공식 판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혹은 작동했더라도 최고상부 정책결정자의 판단에는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 즉, 천안함사건이 한국정부의 발표와 UN의 입장대로 북한의 행위로 판단하였건 아니면 반대로 아니라고 판단했건 간에 러시아 최고실권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그에 따라 정부 및 외무성,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공식적인 확인도 아직 공표된 적이 없다. 이것은 최고실권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였든 간에 사실과는 별도로 다른 고려가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천안함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 한국정부의 발표를 반박하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지도자 스스로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고려에 의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넷째, 만약 판단을 못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가 뜻밖에 미약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관리 라인에 대한 일종의 문책이 있을 법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문책은 발견할 수 없었다. 대담자들은 그렇더라도 문책을 받는 경우란 드물다고 전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정보기관(원)의 문책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해당 행위, 반역의 경우에만 국한했으며 지금도 그런 전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⁵⁷⁹⁾

579) 레이건 정권기에 모스크바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올레그 고르디예프스키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파키스탄 대사였던 카피저(나중에 소련 외무성 차관, 동방학연구소 소장,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후보 원사를 역임는 대사관 고용 현지 운전기사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현지 기사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모면했으나 얼굴에 자살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는 문책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 간재함을 과시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Oleg Gordievsky, *Next Stop Execution*, (London: Macmillan, 1995).

다섯째, 결론적으로 천안함사건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정부의 북한정보관리체계는 대단히 미약하거나 혹은 제대로 작동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지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북핵실험 사례⁵⁸⁰⁾

두 번째 사례인 북한 핵실험 사례를 살펴보자.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정부는 막상 북한 핵실험이 행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북한 핵개발의 의지나 추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정작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비난 성명을 발동하였지만, 그 수준이나 대응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고, 6자회담 당사국 간에서도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국정부의 입장에 동정적인 미국, 일본의 그것과도 대조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프레야브라젠스키는 처음부터 푸틴은⁵⁸¹⁾ 북한의 핵개발을 묵시적으로 방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실험 이후의 러시아정부의 반응은 위장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정보원들은 모른다거나 혹은 실제 북한정보에 어두웠을 가능성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

정보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내부 협조자들을 두고 있으며, 또 러시아 대사관의 SVR과 GRU요원의 활동 역시 확인한다. 그러나 북핵정보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580) 이 사례는 리비아의 최근 사태 이전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러시아정부는 중국과 함께 리비아의 시민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카다피정권을 지지하였다. 이는 정보기관의 판단 오류에 의한 것인가 혹은 러시아 권력층의 기류가 그대로 드러낸 것인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여타 국가라면 정부의 판단 착오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가해졌을 것이나 현재 러시아의 권력은 이로 말미암아 약화된 흔적이 없다.

581) 그는 푸틴을 2000년 이래 오늘까지 러시아의 명실상부한 유일한 최고권력자로 지목하는데, 이는 과거 구소련 시절, 헌법상의 공식적 최고지도자는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이었으나, 실제 권력은 공산당 서기장에게 있었던 점을 상기시켜준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도 이러한 권력의 이중적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핵활동 부정이었으므로, 아래 굵은 부분에 해당한다.

<표 6-9> 러시아의 북핵정보판단

북핵활동 유무	정보기관 판단 0	정보기관 판단 X
정부 공식입장 0	상호 일치 (현실 아님. 가정)	정보판단과 다른 정치적 의도 작용 (현실 아님. 가정)
정부 공식입장 X	정보판단과 다른 정치적 의도 작용	상호 일치 정보판단 실패 --> 정책 혼선

위 <표 6-9>를 보면, 북핵활동에 관해, 러시아정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사실(fact)을 왜곡하는 공식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혹은 정보판단에 실패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개연성의 선택지만을 남겨주었다. 만일 전자라면, 이것은 프레아브라젠스키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의 공작활동에 해당하는데, 러시아의 정치 현실은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러시아의 현실 정치를 관찰할 때, 자유언론, 야당, 혹은 반정부 활동가들에 의한 정부의 공작활동을 폭로할 환경적 여건이 우리나라 서방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또한, 공작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핵실험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데까지 과연 사태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남는다. 프레아브라젠스키는 러시아정부가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정보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정치 현실 기조는 대단한 반민주성의 특징을 확인시킨 셈이다.

후자라면 즉, 러시아의 정보판단 실패가 맞는다고 하면, 러시아에서의 정보유통 과정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시킨 셈이 된다. 즉,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핵의혹 제기에도 한결같이 이를 무시·반박했던 러

시아 정보기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패를 자초한 것인데, 이에 따른 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에 따른 문책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양자 모두 정보유통 시스템의 민주성과 관련해서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정보유통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어도 정보유통 과정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정치 현실이 비민주적인 것 혹은 정보 유통구조상 상위의 정치리더십의 민주성이 취약한 것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정보유통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즉, 아래에서 위로의 정보의 자발적 생산유통 과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정보의 주문생산 유통방식에 가깝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3. 한·러 북한정보 협력방안

가. 한·러 북한정보 협력현황과 문제점

한·러 간 관계는 짧지 않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친선 우호관계가 증대하였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영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98년 7월 11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니콜라이 코발료프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부장을 예방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은 당시 우리 정보기관의 미숙함과 동시에 양국 정보기관의 협력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발렌틴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1국의 부국장에 대해 우리 측 외교관 신분의 요원이 접촉을 유지한 것이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양국에서 각자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추방한 것으로까지 진전되었다.

이어서 2008년에도 우리 측 대사관 근무 정보요원이 4명 추방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하

다.”라며 사실상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09년 7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당시 주러 대사관 무관실 소속의 해군 중령이었던 이 외교관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양국 정보기관 간의 비공식적 대화 채널 정비의 필요성이다. 당시 한 사건은 조용히 물밑에서 해결되었다기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국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확대 재생산된 점이 있었다. 이것은 양국 정보기관의 비공식 채널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양국 정보기관은 상호국익이 대치되는 분야 외에 국익이 일치되는 공통사항을 발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호협조를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 시켜준다. 러시아 지역으로의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한국행과 같은 사안은 비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셋째, 당국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경우였던 것 같다. 즉, 우리 측 요원이 접근한 현지인은 현직 외무성 직원이므로 우리 측에서 역시 외교적인 접근 통로를 활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측에서는 직접 러시아 정보당국과 대화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북한인 가족이 탈북한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모스크바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 라인의 채널을 가동했다가 결국 무위에 그친 적이 있었다. 또 당시 한국대사가 현지로 급파되어 현지 지역행정 책임자와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법에 의하면 러시아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은 그 소관이 연방국경경비대에 있으며 국경경비대는

과거 KGB의 부서였다가 독립한 기관임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 채널을 가동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사실 정부 간 관계와 정보기관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면 정보기관 간의 마찰 혹은 충돌을 완화 내지 협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선린우호국가 간의 경우가 그렇다. 또한, 정보기관 간의 관계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조적 사례를 만들어간다면, 정부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평가되는데, 이 경우 특히 시안에 따른 정보기관 간의 협력적 체제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정보기관 간의 다소 우여곡절에도 양국관계는 경제적인 교류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술, 문화, 기술교류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나로호 발사 협력관계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양국 간 이미 상호 연계된 국익의 수준이 이를 파기했을 때의 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 있으므로 앞으로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주소이다.

그러나 우리 정보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한 정보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정부, 특히 정보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 내지 정보기관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불평을 청취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을 따르면, 자국 내의 비합법 경제활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수산물 밀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즉, 러시아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밀수입·밀수출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가장 규모가 큰 불법 활동이 북태평양 원근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관련 마피아 조직이 일본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였는데, 일본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후에는 마피아 세력이 검거망을 피해 일본에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 진출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한국 당국에 협조를 요구해도

미온적인 반응뿐이라는 불만이였다. 실제 부산에서는 러시아 마피아로 추정되는 자에 의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우리 측이 우리 관심사에만 집중하느라 상대국의 관심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공동협력관계에 대한 미숙성을 드러낸 사례일 수도 있다.

정보기관 이외에 러시아 학계와의 협력교류도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광범위한 교류가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 학계에서 러시아 학자를 초빙하는 경우, 대체로 몇몇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혹자는 러시아 학자층의 빈곤함을 호소하지만, 실제 북한과 우호적이면서 우리 학계에는 드러나지 않은 학계인사들은 일반의 예상보다는 풍부하다. 그리고 노장 학자들은 최근 푸틴정부의 권위주의화 경향과 맞물려 새롭게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자들에게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학계의 경우, 반복한적 기류와 친북한적 기류가 공존함을 생각할 때, 균형 있는 교류가 아쉬운 실정이다.

러시아의 북한정보 관련 활동은 정보 수집·분석, 전망·도출, 정책·반영의 측면에서 보아 아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최근의 대북정책이라든가 6자회담에서 러시아 측의 주도권에 그다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강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공작적 차원은 그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확인된 바가 미미하다.

우리 정부가 대러 학술, 문화·예술교류를 지원하는 측면에는 모스크바에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다양한 방면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의 다양한 분야 인물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양국정부 및 정보기관 및 언론·학술기관의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계기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군사교류 역시 우리 측에서 군 장교들의 유학제도를 활용하여 교류에 기여하고 있음은 고무적이거나 현재 타 국가와의 군사교류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이것은 러시아 측에 불만으

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책적으로 유인요건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양국의 유학생교류 실적 또한 미국, 일본,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극동 지역과의 장기적인 인적유대 강화정책이 미흡하다.

국내의 제반 연구기관들이나 국책연구소, 대학 등에서도 북한정보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보다는 북한을 다루는 곳과 러시아를 다루는 곳이 기능적으로나 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급적 러시아와 북한을 아우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정부의 유인정책이 약화되었다.

실제 1991년 수교 직후부터 한동안은 한국에서도 러시아 붐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통상부는 러시아대사관 근무가 주재국 인기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역대 대사도 중량급 인물로 매워졌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 위성락 주러 대사 등 한·러 수교 초창기 러시아 근무 경력의 인물들이 적지 않다. 이 부분은 한·러관계의 증진과 한·러 공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 통일부나 북한 관련 전문가의 러시아 파견 근무가 미약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북한 관련 러시아의 학계와 언론계에 대한 우리 측의 편견도 사라져야 할 과제이다. 대체로 러시아에서 북한 관련 전문가는 노령의 은퇴 직전이며, 과거 소련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인사들이라는 편견은 위험하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이 실제 현재 러시아 권력층과는 정서적으로 친화적인 관계라는 점과 둘째, 이들의 정서가 실제로 러시아의 대북정책에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언론기관은 수교 초기에 비해 주재원의 수가 많이 줄어든 형편이다. 이 부분은 언론기관에서 더욱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일과 대북문제에 특화해야 하는 당위성이 아쉬운 실정이다. 현재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학술행사의 경우, 한·미 안보연구회 등 한·미, 한·중, 한·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0> 한·러 학술교류활동 현황

구분	대표적 표본	그 외 현황
정부간 공식관계	수교, 최근 대통령 방러	한·러관계에 대북공조 미미
비공식관계	사적 유대관계	대북 관련 관심사 공유 미흡
정보기관간 공식관계	공식 채널	몇 차례 강제추방
학술 분야	이메모-외안연 정례회의	북한 초점화 약화
언론 분야	상호 지국 및 주재원	축소, 북한정보교류 미약
교육 분야	유학생, 교환 교수	북한 관련성 찾기 어려움
기타 분야	정례 공동 개최행사	북한 관련성 찾기 어려움

나. 한·러 북한정보 협력 및 개선방안

(1) TSR-TKR,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사업 활용

푸틴은 권력자로 등장할 때부터 독특한 러시아의 상을 거론하곤 했다. 이른바 유라시아 중심국가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결국, 러시아 역사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러시아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러시아가 서구 인가 아니면 슬라브라는 특수성을 갖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으로 러시아는 서구도 아니고 슬라브도 아닌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육교 즉 물류의 통로여야 한다는 발상을 내비쳤다. 현재 전 세계의 물류의 70%가 아시아와 유럽 간에 오가는데, 이중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러시아 횡단철도를 아시아의 구석구석까지 연장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전 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특히 한국으로의 철도연결이 절실한데, 북한이라는 장벽때문에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일단 해상 운송한 이후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실제 항구에서의 상하역, 그리고 다시 철도역까지의 상하역의 절차가 불가피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⁵⁸²⁾

푸틴이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합의 결과는 대체로 TSR과 TKR노선의 연결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철도운행의 정상화를 위한 노후 철도복구지원과 중단상태인 화력발전소 5기의 복구였다. 하지만, 북한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북핵문제 발생, 그리고 정치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 구조적인 한계란 화력발전소를 복원하더라도 연료문제가 대두되며, 철도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경제 전반의 상황 호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어쩌면 푸틴은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자신의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꺼낸 안건이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이 러시아 가스에 의지하는 정도를 높여 러시아의 명실상부한 유라시아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내외에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자가 인터뷰한 정보원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유는 북한이 응할 이유가 없고, 응하더라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온갖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설사 가스관이 설치되더라도 온전한 가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가스관의 운용을 보장받을 조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푸틴의 개인적인 동기에서의 정책을 러시아 관료들은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정부, 특히 최고실력자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애초에 봉쇄되어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정부로서, 우리 정보기관으로서 실제 진행 여부를 떠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기관 차원에서도 각종 기술 관련 정보보고서를 제공해서 러시아 측의 호감을 충분히 구할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단 과도한 투자 부분만을 피하면서 기술적으로 호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582) 물류운송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운송자체가 아니라 상하역이다.

(2) 러시아 내 북한정보관리기관 및 전문가와 교류 협력강화

러시아 내의 북한전문가들과의 전면적인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단, 우리의 국익과 상치하는 것을 일치하도록 수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설득이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교류협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북한문제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요원한 것이며, 우리가 러시아에 얻을 수 있는 점을 명확히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에 관한 정보면 정보, 북한에 있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현지 조직망이면 조직망, 러시아 지역의 탈북자 문제해결이면 이것만으로 국한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러시아 내 북한정보 관련 기관과의 교류 증진을 늘리고, 앞으로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진 인력 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 언론인, 외교관, 학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언어 연수 및 연수, 유학 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종사자들은 대체로 북한 유학생 출신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러시아와 탈북자문제 공조

탈북자문제를 러시아와 공조하는 것은 북한정보 관련 문제를 떠나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언급한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라든가, 수산물 관련 범죄 방지 협조 기타 등 러시아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맞조건으로 얻어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정부 및 정보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가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를 제시하는 한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을 획득해야 한다.

(4) 러시아 정보기관 특성 이해 및 북한정보 협력제안

러시아 정보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협력을 제안·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러시아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관리의 측면보다는 맞춤형 정보생산에 주력한다.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여, 최고지도자나 정부 각 부처가 실제 정책에 활용케 함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지시 내지 선호에 맞춰 정보를 수렴해서 제공하는 형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보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는 정보 유통 과정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기능은 역시 국가든 민간이든 수집 혹은 생산되는 정보를 중앙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집중화, 정부 취합 수단 동원의 수월성으로 인해 정보 유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부정적 기능은 이런 과정이 자칫 다양한 정보 상호 모순되는 정보의 흐름을 어느 쪽인가 편향적으로 집중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기관은 국가의 공적·사적 민간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나 재량권을 가진다. 특히, SVR은 심지어 군정보기관인 GRU의 요원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북한은 러시아 정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기관의 중앙적 일원화는 역시 장·단점을 가진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역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역시 편향된 쪽으로의 선택지만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자체 생산되어 상향적으로 전달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임하는 러시아 정책에 별다른 변화나 주도권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북핵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보다 러시아가 확보해 놓은 현지의 인적 협력망의 협조를 얻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러시아 정부기관의 인적망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인사의 망명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넷째, 아직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관계하는 방식의 차원과 러시아의 그것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수용할 만한 사항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과의 협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상호 공조의 계기를 만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그림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그들이 구축한 인적 정보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협조방안의 강구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 메커니즘과 러시아정부의 통치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협력 추구는 정보기관끼리의 채널이 아니라 더 상층,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푸틴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연속적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쉽지 않은 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임시적 혹은 한시적인 정보의 수집에서 협조체제를 시도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적정보 자원의 구축을 예외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 놓고 대러 방첩 태세에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6-11> 한러 북한정보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러시아 정보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기관 간 대화 채널 구축 미비	-TSR-TKR,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 활용
-사안에 따른 정보기관간 협력적 체제 경험의 축적 필요	-러시아 내 북한정보관리기관 및 전문가와 교류 협력 강화
-러시아 측 정보협력 사안에 대한 관심 부족과 협력 의지 미약	
-학술, 문화·예술,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교류 폭 확대 필요	-러시아와 탈북자 문제 공조
-러시아에 대한 관심 저하와 외교관 처우 미흡 및 주재원 수 감소	-러시아 정보기관 특성 이해 및 북한정보 협력 제안
-한·러간 북한정보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체계 미흡	

Ⅵ.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국제기구와 북한정보의 문제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NGO)와 UN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급격히 줄어든 최근에도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NGO)가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펼치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 UN기구와 유럽연합(EU)이 엄격한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 민간단체(NGO)가 지원물자 분배 확인을 목적으로 잇따라 방북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 NGO는 인도적 지원, 개발, 보건, 비공식 외교, 과학, 교육 분야 등에서 원조를 제공해왔다. 이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직접 관찰하고, 청취한 내용은 오늘날 북한의 경제, 사회적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특히 북한의 고립과 폐쇄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들은 북한의 다양한 조직과 단체 및 여기에서 일하는 많은 관료와 실무자들과의 접촉, 대화를 해왔고, 협상한 경험이 풍부하다.⁵⁸³⁾

다만, 우리는 여전히 국제 NGO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북한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왔는지 잘 모른다. 일부 NGO는 그들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대북지원사업을 비밀로 다루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모두를 고려해서다. 이들은 북한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신뢰는 지원의 규모와 질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활동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583) Mi Ae Talor and Mark E. Many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s Activities in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2011), p. 2.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NGO활동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국제 NGO와 UN기구를 중심으로 이들 기구가 어떻게 북한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연구 목적에 맞는 사례를 발굴해 이를 중심으로 정보교류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정부 및 민간 NGO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다음 <그림 6-5>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시아, 유럽, 북미의 여러 국가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NGO)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북한이 대규모 아사에 직면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도움을 요청했고, 무수히 많은 국제 NGO가 북한을 방문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인도주의적 NGO가 구호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위기가 만성화되고 장기화하면서 원조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북한의 취약점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이를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단기간에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NGO가 북한을 떠났다. 더구나 2005년 UN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은 상당수 NGO에 북한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2006년에 발생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은 NGO의 북한 지원 명분과 동기를 크게 훼손시켰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총괄해온 세계식량계획(WFP)은 각국 정부가 정치적 견해 차이와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이유로 대북식량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또 지원된 식량마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국제 NGO에 북한상황은 대부분의 국가가 보여주는 인도적 응급상황과는 아주 판이한 환경으로 인식되었다. 비록 북한은 그들의 경제체제가 붕괴하였음에도 정치체제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인민들을 먹여

살릴 자원을 구하되 그들 체제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보았다. 북한의 지도층은 그들의 인민들이 더 광범위하게 외부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적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기관들이 지원식량을 그들의 공공배급 시스템(PDS)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러나 그 식량이 북한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감시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방세계에 알려진 바처럼 적지 않은 원조물자가 주민이 아닌 군인들에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NGO에 강요하였다. NGO종사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1주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하며, 감독관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원조기관은 자체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하거나 북한 내에서 어떤 집단이나 인민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 NGO는 원조물품을 배급할 때는 공공배급 시스템(Public Distribution System)을 이용함으로써 정치 안보적 고려에 기초하여 식량배급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제약들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 대부분은 WFP(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미국의 NGO는 북한원조를 더 활성화하고 WFP를 통하여 제공된 원조를 감시하는 한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기금으로 감자 씨를 마련하여 WFP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조직협회(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 라고 불리는 모임을 설립하였다. 이 협회(PVOC)는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WFP를 통하여 제공된 30만 톤의 식량 원조를 감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감자 씨를 보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은 북한 내에서의 원조활동의 정치적 장애들과 또한 북한에서의 다자간 컨소시엄(multilateral consortium)의 구성

과 운영의 어려움이었다. 미국의 NGO가 정부 기금을 북한 내 활동에 활용하려는 PVOC 계획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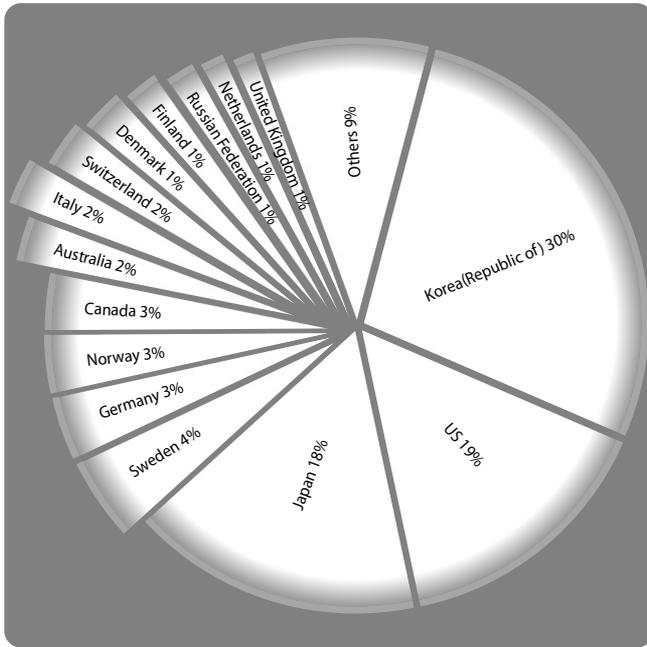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몇몇 미국 NGO가 북한주민의 기아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목적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들이나 일반인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4개의 미국 NGO가 종교단체로부터의 후원금을 받고, 북한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미국우정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FSC), 유진벨재단(The Eugene Bell Funds, 한국의 기독교친구들(Christian Friends of Korea-CFK), 세계자원봉사회(Global Resource Service)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NGO는 미국정부의 50만 톤 식량지원 가운데 10만 톤의 배분을 책임지기도 했다.

국제기구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변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의 사회개발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국의 개별 NGO는 각자의 특색 있는 지원활동을 펴면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교환 및 정책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베이징, 도쿄,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제 NGO가 직면했던 공통적 딜레마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북한정보 수집, 분석, 활용과 관련해 국제 NGO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은 식량 혹은 보건·의료 지원을 명분으로 고립된 나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접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감시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정보 수집과 평가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단순히 구호식량이 지원대상 주민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정보, 나아가 정치군사적 정보까지 직간접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8> 대북지원국가 및 지원 규모



BILATERAL DONORS

Korea(Republic of)
US
Japan
Sweden
Germany
Norway
Canada
Australia
Italy
Switzerland
Denmark
Finland
Russian Federation
Netherlands
United Kingdom
Others
Total(Bilateral donors)
TOTAL HUMANITARIAN FUNDING
2000-2011

CUMULATED FUNDING(US\$)

403,844,901.0
250,340,852.0
247,247,491.0
59,665,012.0
44,295,084.0
37,741,616.0
35,788,106.0
32,991,797.0
32,871,241.0
24,163,331.0
13,174,061.0
12,038,004.0
11,453,320.0
10,321,435.0
7,946,450.0
122,499,787.0
1,341,676,584.0
1,775,480,225.0

NB: Others include: Austria, China, Cuba, Cyprus, Czech Republic, Egypt, Hungary, Iceland, Ireland, Luxembourg, New Zealand, Poland, and Turkey.

출처: The United Nation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DPRK, 2011, p. 71.

2. 국제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가. 미국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 활동 개요

북한의 제도가 외국의 종교적 영향력에 대해서 반감을 품음에도 미국 종교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미국의 NGO는 북한의 개발과 다양한 교환프로그램을 지속해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북한 식량난이 조금씩 나아지고,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외교적 마찰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종교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미국의 NGO는 북한당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들은 미국정부 차원의 인도적 차원의 북한식량지원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50만 톤 가운데 20%인 10만 톤의 배분은 글로벌리소스서비스(Global Resource Service), 머시코(Mercy Corps), 월드비전(World Vision), 사마리탄스 퍼스, 크리스천 프렌즈 어브 코리아(Christian Friends of Korea: 이하 CFK) 등이 담당하였다. 이들 5개 엔지오가 북한에 대한 식량 배분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당국 모두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호활동 외에도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접촉을 주선함으로써 비공식 외교(track II diplomacy)에 이바지했다. 고립된 북한정권의 특성상 전통적인 외교적 교류가 어려워서 NGO는 미국과 북한의 과학자, 학자, 군 장교, 그리고 민간인 사이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주선한 것이다.

<표 6-12> 미국 주요 NGO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관심 분야
Global Resource Service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1997	-수술장비, 응급약 등 의료품 -10개 병원 지원 -어린이용 겨울 외투 -원어민 영어강사 파견사업	-농업 -의료 -식량지원
Mercy Corps (머시코)	1996	-과수원 사과나무 대목지원 -병원 의료기기, 발전기 등 지원 -어업 양식 지원	-식량난 개선 및 산림 복구 -기술지원
World Vision (월드비전)	2000	-씨감자 생산 협력사업	-식량지원 -농업
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 (조선의 기독교친구들)		-병원 수술실 보수, 장비 및 기술지원 -결핵약 포함한 각종 의약품지원 -결핵요양원지원	-식량지원 -의료 -기술지원
Samaritan's Purse (사마리탄스 퍼스)	2000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을 비롯한 기초생활품지원 -홍수 등 긴급사태시 의약품과 식량 지원	-식량지원 -의료지원

1995년에 설립된 CFK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가 ‘유진벨 재단(the Eugene Bell Foundation) 대표단의 일원으로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북한에 선교를 지속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시작했다. CFK는 주로 농업과 보건분야에서 활동했는데, 결핵 관련 의료품, 식품, 농업용품, 담요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활동 지역은 주로 황해남북도, 그리고 개성 주변에 치중되었다. CFK는 자신들과 협력하는 북한기관이나 개인들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토대로 상당량의 물자를 북한에 제공해왔다. 이 기관은 주로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활동은 한국에서 은퇴한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진벨재단(The Eugene Bell Foundation:

EBF)과 CFK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나 1995년에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유진벨은 남한과 워싱턴에 따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북한 내 결핵 진료소들과 병원들에 의약품들을 제공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 유진벨은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일반 개인들로부터 자선 기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로부터도 기금지원을 받았다. 유진벨은 1995~2005년 사이 2천 8백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평양, 남포, 그리고 평양남도와 평양북도에서 활동을 한다. 유진벨은 초기 결핵치료 분야에서 활동의 중심을 서서히 다른 분야로 확장해왔다. 따라서 수술실 의료장비와 산모와 영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도에는 55개 이상의 북한 의료단체에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GRS(Global Resource Service)는 1997년에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재난이 북한에서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주로 미국 남침례교(Southern Baptist)와 관련이 있는 국제선교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GRS는 전문적인 개발지원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본래는 인도적 구제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그들의 활동들은 농업 개발 분야로 확장되어 영농기술의 향상, 목축의 역량 개선, 지역 주민에게 우유, 두부,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설비지원과 관련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GRS는 또한 심장학과 복강경기술 분야의 의료 훈련에 참여했으며, 그 밖에도 단기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중국 북경에 가서 받는 영어훈련프로그램, 미국과 북한 간의 문화교류 등을 후원해 왔다.

AFSC(미국우정봉사회)는 퀘이커교파 내 ‘친구들의 종교적 모임(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의 산하 모임으로 1980년 이래 북한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해 왔다. 그들의 접촉은 준정부기구인 ‘세계인민연대조선인민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Solidarity with the World’s People-KCSWP)’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AFSC는 1997년 이래

북한 내에서의 집중적 농업개발운동을 추진했다. 그들은 과거 5년 동안 매년 35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별된 협동농장들에서의 즉각적인 생산증대를 위한 보조, △농장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갖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AFSC는 4개 집단농장들에 협조를 제공해 주고 북한농업대학(North Korea Agriculture Academy), 유기농개발연합회(The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Association: OADA), 복합미생물연구소(The Research Center for Compound Micro-organism: CM Center)등과 협력하여 황폐해진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피복작물(Cover crops)도입을 포함해서 북한환경에 맞는 농업기술을 장려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회장은 지난 16년간 북한에 의료장비와 식량을 지원하면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기독교 목사인 그레이엄 회장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북한주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며, 한반도가 전능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주민이 알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미국 구호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주요 활동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지난 1995년 북한의 대홍수 이래 잦을 때는 최대 30여 개가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펼쳤지만, 북한당국이 접근을 제한해 활동이 어려운데다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북한지원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기독교 계통 단체들만 북한에 남아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 말 UN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 소속으로 미국과 유럽, 캐나다 구호단체들과 협력했던 에릭 와인가트너(Eric Weingartner)는 기독교계 구호단체들이 독특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⁵⁸⁴⁾

584)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8월 31일.

일반 구호단체들은 단기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따지지만,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에 미리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북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기독교 정신의 전파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비록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개종시킬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북한당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북한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주민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 일반 단체들보다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로 이런 관계 형성은 대북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북한당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때 일 처리가 쉽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 구호단체들의 강점은 직접 현장에서 북한주민과 함께 일해 왔다는 점이다. 북한 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고, 일부는 북한주민과 감정적인 유대관계도 맺고 있다. 기독교계 구호단체들은 주로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과 달리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북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당국은 종교를 자기들의 체제전복요소로 간주하는 그들의 의구심 때문에 이념을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가라앉고 북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제재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NGO는 이미 북한 내에서 중요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에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기 NGO 가운데 몇몇이 북한의 핵 포기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가 제공할지 모르는 에너지 원조의 공급 통로의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이처럼 미국 NGO는 현재 북한 내에서 경험과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국제 NGO에 북한정보수집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특히 이들에게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요원을 북한에 상주하게 해 식량지원사업에 대한 감시 분배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국어 구사 요원은 모든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매우 중요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오해를 불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식량지원 프로그램사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사항이 통역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한국어 구사 요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북한주민과 접촉해 교감할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주민을 위해 미국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민과 주고받는 말을 한국어로 한다면 그들은 더욱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주민과 접촉은 외부세계의 단편이나마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이런 현장교류는 매우 효과적이다. 북한당국자들은 주민이 외국인 분배감시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허락했다. NGO는 주민을 직접 만나고, 가정도 방문하였다. 이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요인이면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NGO는 감시와 투명성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상호협력과 연례(年例)방문(訪問)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미국 NGO들과 관계를 맺은 농장들이나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하

므로 이들 NGO는 북한 내의 동일(同一)장소(場所)를 되풀이해서 방문할 수 있고 보내준 물품들의 도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북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기초하여 그들의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개발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특정문제들을 북한 측과 협력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들 NGO는 북한 내의 전통적 관습과 자기들이 속해 있는 환경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나 지역 답사가 필요할 때 북한당국은 일반적으로 무관심 내지 심한 의구심을 갖고 대하였다. 미국의 NGO는 약속한 지원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평판을 얻은 뒤부터 북한당국자들은 이들 NGO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NGO는 그들의 북한 내에서 초기활동 때에 북한당국이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였으며 NGO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보도나 북한 내부 상태에 관한 부정적 관찰이 포함된 보도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NGO는 북한당국의 신뢰를 얻었고, 북한당국도 이들에게 적용했던 각종 제약을 완화해 주었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어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대했지만 GRS(세계자원봉사), CFK(한국의 기독교친구들), EBF(유진벨)등 NGO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다. 또 북한정부는 NGO의 기구조직을 통하여 협조는 받되 NGO 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나 최종 수혜자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NGO가 현장방문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핵환자들과 북한주민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NGO는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북한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NGO가 표면적으로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은 즉, 식량사

정, 어린이 영양상태 등 취약계층의 보건 실태 등이다. 미국의 민간 구호 단체들이 2011년 2월 북한의 17개 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긴급 식량안보 조사를 시행할 때도 비슷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된 현지 주민의 목소리 등 다소 민감한 이슈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사회의 특정 분야 및 외교 관료 조직에 대한 지식과 협상력, 북한인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와 미국이나 미국 민간인들에 대한 호감도 수준 등도 주요 정부수집의 대상이었다.

미국 NGO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공식적으로는 대북 지원 모금 활동 등에 활용하였다. 현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등 가령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의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회장은 최근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식량 재고가 6월이면 바닥난다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기도 하였다.⁵⁸⁵⁾

즉, 미국 NGO는 주로 현장 실사, 현지 주민 및 관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전문가에 의해 분석을 거치게 한 다음 식량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했다.

나. 유럽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1) 활동 개요

현재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EUPS: 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의 이름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민간단체는 모두 6개이다. 식량 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 프랑스의 프리미어 위장스, 아일랜드의 컨선,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그리고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이다.

585) 『자유아시아방송(RFA)』, 2011년 5월 9일

유럽 NGO는 유럽연합의 원조협력사무소(AIDCO)의 후원 아래 활동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 단위들로 알려졌다. 추가로 스위스개발협력기구(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탈리아개발협력사무소(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스웨덴농업복구프로젝트, 국제적십자연맹 등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6-13> 유럽 주요 NGO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관심 분야
German Agro Action (저먼 애그로 액션) - 독일	1998	-태양열 온실 지원 -평양 보건성 결핵병원 내 양봉 및 양계장 건설 -두유 제조기 및 소형트랙터 지원 -요양소 소형 발전기 지원 등	-보건·의료 -농업
Save The Children (세이브 더 칠드런) - 영국	1998	-영유아 복지시설 설립 및 필요 물품 제공 -어린이들의 기초 건강관리 개선 -진료소 식수 공급 등	-어린이 복지 -향상
Concern Worldwide (컨선 월드 와이드) - 아일랜드	1997	-협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분무기, 채소 종자, 밀 종자, 콩 종자, 감자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종자증식사업 -지속 가능한 생태 및 환경보호 -양묘장에 종자 및 물자지원	-식량안보사업 -환경보호사업
Premiere Urgence (프리미어 어전스) - 프랑스	2002	-수액생산 담당자 대상 훈련 -지방병원 수액생산지원 등	-보건·의료사업 -역량 강화
Triangle GH (트라이앵글) - 프랑스	2000	-농작물 및 축산 관리체계 설계 -식수 및 위생시설 복구, 개선 -조립 및 양묘장 복구, 기술자 훈련	-식량안보사업 -조립사업
PMU Interlife (인터내셔널) - 스웨덴	1995	-병균이 없고 건강한 씨감자배양을 위한 기술을 지원 -비료, 감자 및 야채 종자지원 -농업장비 보수 등	-농업 -기술지원

* 공동활동 사항: 긴급 식량지원

유럽 NGO는 북한당국의 경계심이 덜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식량 등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 전역 방문기회를 갖고 있었다. 또한, 일반 주민과의 접촉이 훨씬 쉽다. 또한, 북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EU의 정부 혹은 비정부 원조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왔다. 유럽은 정부가 후원하고 민간이 집행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북한정보에 접근해왔다. 유럽위원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북한외무성과 공동으로 평양에서 시장지향경제(market-oriented economy) 이행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2004년에 이어 2005년, 2007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2005년 10월 1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 2차 경제개혁 워크숍에서 거시 경제 도구로서의 은행대출, 이자율과 더불어 예산배분(budget allocations)문제가 북한경제관리들에게 1시간 동안 강의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두 번째 워크숍에서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역할(세션 1),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조건과 전략(세션 2) 및 국영기업, 농업의 구조조정 전략(세션 3)등을 논의하였다. 이행경제(transition economy)에서 정부의 각종 제도의 역할을 검토했으며, 중앙계획경제와 완전한 자유방임체제 사이에서 정부들이 선택할 방안들과 함께,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 인센티브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각종 제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북한 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워크숍에는 공식용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100명 가까운 경제 관련 부처, 기관의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EU 대표단은 8개 EU 회원국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됨. 평양주재 EU 외교관들과 외국 기업 및 원조기구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EU는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 동안 북한의 시장경제 이행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워크숍을 평양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당시 워크숍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현대화 과정, 특히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워크숍에서 EU 측 전문가들은 동구와 중부 유럽의 시장경제이행 과정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유럽의 시각과 조언을 전달하였다.

또한, EU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제도적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NIP 기술지원프로젝트(2002~2004)를 계획을 입안한 바 있다. 주요 정부 관료의 훈련 및 EU로의 연수를 지원하여 특히 국제금융, 무역 및 시장경제 분야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 구축 지원과 인권문제를 포함한 법치주의에 근거한 북한 법제 현대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위스는 한때 북한관리들을 스위스에 초청해 다자외교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집단 연수를 추진하였다. 이는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지원 아래 비영리기구인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ASIN)’가 연수를 담당한 것이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민간기업인 ABB사와 협력해 <평양비즈니스스쿨>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유럽의 NGO나 개발기구들은 주로 북한외무성 및 경제관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런 교류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들을 적지 않게 수집해놓고 있다.

(2)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유럽 NGO는 대부분 대북사업 담당관 1인을 지정해놓고 전문적으로 북한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민간구호 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 병균이 없고 건강한 씨감자배양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스웨덴의 민간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 1만 4천여 명에게 낙농제품을 공급하는 젓소농장사업을 추진 중인 프랑스의 비정부 기구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가운데 일부 NGO는 평양사무소에 상주직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에서 식량 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 프랑스의 프리미어 위장스, 아일랜드의 컨선, 그리고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등과 함께 유럽연합 지원 계획(EUPS)의 이름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6개 민간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북한에 3명의 상주직원과 9명의 북한인 직원을 두고 있다.⁵⁸⁶⁾ 프랑스 비정부기구 프리미어 위장스도 대북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 직원 두 명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으며, 식량지원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부 기술자도 파견하고 있다.⁵⁸⁷⁾

유럽 NGO는 자국 정부 혹은 유럽위원회에 수시로 정보를 보고하는 등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 NGO는 대부분 정부 지원금(ODA)을 받고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유럽 NGO는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과 유럽연합 등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다른 유럽 나라 NGO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에이드(Europe Aid) 즉 유럽원조협력청도 주요한 대북 지원 관리기구이다.

유럽 NGO들은 특히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두는 정보수집영역은 대북지원사업의 영역과 일치한다. 북한식량실태를 비롯해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축산업, 보건, 취약계층 영양상태, 빈곤수준, 전염병 실태, 대체에너지, 장애인, 보육원, 병원 복지제도, 학생, 영어교육 당국과 주민 간 관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수집해놓고 있다. 나아가 북한 내 운송 시스템, 인프라 상황, 복지 시스템, 전력사정 등 종합적인 북한 정보도 파악해놓고 있다. 북한외교, 경제부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북한 내 관련 분야의 인적, 제도적 역량에 정보도 축적해놓은 상태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약 40만 유로, 약 50만 달러를 투자해 평양에 대체에너지 연수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86) 『자유아시아방송(RFA)』, 2011년 5월 10일

587) 『자유아시아방송(RFA)』, 2011년 1월 5일

벽의 단열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나 열 보존 효과가 좋은 건축 자재, 열효율이 높은 건축 설계 등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모아 북한 측과 협의한 바 있다.⁵⁸⁸⁾

또한, 독일에 기반을 둔 국제 비정부기구(NGO)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은 2009년부터 평양시와 평안남도 순천시 등 도시 지역에 모두 15개의 태양열 온실을 건설하였다고 2009년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저먼 애그로 액션’이 북한에서 식량 안보 사업을 시작한 10년 전부터 태양열 온실 사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600개의 태양열 온실을 북한 전역에 건설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주로 북한의 지방을 중심으로 보육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건설해오다 지난해부터 도시 농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평양을 포함한 도시로 지역을 옮겨서 온실 지원에 나섰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 도시 농업 개발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북한주민은 해마다 봄철이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도시 노동자들이 지방의 농민들보다 식량을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농민들은 집집이 폐기밭(텃밭)을 일구거나 작은 온실을 만들어 겨울철 곡식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식량을 대체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정부의 분배와 장마당에서 파는 농산물에 의존하는 도시 노동자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저먼 애그로 액션’은 도시 지역에 태양열 온실을 건설해 토마토와 오이, 가지, 그리고 딸기 등을 재배하면 이를 통해 도시 주민에게 식량이 부족한 겨울철에도 채소를 공급할 수 있고 동시에 이 같은 채소류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이윤을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태양열 온실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 실태, 도농 간 식량격차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까지 입수하고 분석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588)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5월 5일

유럽 NGO는 북한 내 어느 도, 군에 식량이 부족한지, 누구에게 지원될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보수집을 해왔다. 새로운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북한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습득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민간구호 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는 2011년 4~11월 평안남도과 황해남도 지역에 있는 장애아와 고아를 위한 7개 학교에 쌀과 옥수수, 콩, 그리고 식용유 등을 분배한 바 있는데, 이는 북한조선장애인보호연맹(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⁵⁸⁹⁾

유럽 NGO는 2005년 일시적인 중단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 이를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장기간 관찰을 통해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UN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UN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들을 비롯해 내부 경제, 사회상을 직접 현지에서 관찰하고 증언(bear witness)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 정보와 관련해서도 가장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UN은 국제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북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89) 『자유아시아방송(RFA)』, 2011년 5월 19일.

(1) 북한정보관리체계 실태

(가) 활동 개요

<표 6-14> 주요 UN기구의 대북지원활동 현황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관심 분야
UNDP (UN개발계획)	1998	-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AREP (농업 및 환경복구사업)을 수립, 추진 - 지속적 농촌에너지 개발사업 - 지속농업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 - 식량 및 농업 정보관리체계 강화사업 - 수확후 농작물 손실 감소사업 -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수	- 농업 및 환경 복구사업 능력 배양
WFP (세계식량계획)	1995	- 국수공장 및 제빵공장 운영 지원 - 취로사업을 위한 식량지원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식량지원	- 식량안보
FAO (UN식량농업 기구)	1995	- 이모작 확대사업 -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지원 - 토양검사를 통한 효율적 비료 사용	- 농업기술
WHO (세계보건기구)	1996	- 필수약품 생산시설 및 물자 지원 - 전염병 조기경보 시스템과 통제 강화 - 국가 소아마비 연구소 설립과 예방 활동 - 의료기술자 국외연수	- 보건위생
UNICEF (UN아동기금)	1995	- 어린이와 모성건강 지원 - 교육 기자재 제공 및 훈련 - 소규모 영농 및 가축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 건강 및 보건위생 - 아동 교육
UNEP (UN환경계획)		- 환경개발센터 및 환경부 능력 배양 - 대동강 유역 수자원종합관리 - 친환경 가옥 보급 및 환경교육	- 환경개선
IFAD (국제농업개발 기금)	1996	- 잠업개발사업(1996~2002) -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1997~2003) - 밭 식량안보사업(2000~)	- 농업복구 - 농촌주민 소득 증대사업

출처: The United Nation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DPRK, 2011.

UN기구의 북한지원활동은 주로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UN상주기구들은 FAO, UNDP, UNFPA, UNICEF, WFP, WHO 등 6개이다. 반면 상주하지 않는 기구들은 UNEP, UNESCO, UNIDO, UNESCAP, UNOPS 등이다. 이들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6개 유럽계 NGO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한 UN기구는 UNDP로서, 1980년 평양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당시 UNDP는 북한에 설립된 유일한 UN기구였다. 이 기구는 UN 시스템 전체를 대표하여 1980년대 다양한 범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였다. UNDP 평양 상주대표부는 UN상주조정관, 인도주의 조정관의 역할을 비롯해 WFP, UNFPA 상주 대표부의 기능까지 맡아왔다. UNDP는 특히 20여 명의 북한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UNDP의 현지 직원 채용은 북한주민이 처음으로 UNDP의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었다.⁵⁹⁰⁾ 1999~2000년 이후 UNDP의 대북사업은 인도주의적 활동과 함께 농업 회복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촌의 에너지 문제 등을 포함한 장기 개발사업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UNDP는 2006년에 작성한 보고서(Country Programme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에서 2007년부터 3년간 △경제관리능력 강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식량 보장,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 등의 5개 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등의 UNDP 대북지원활동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중단된 적도 있었다.⁵⁹¹⁾

590) UNDP, "UNDP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2004), pp. 1~4.

591) Nile Gardiner, "The UNDP North Korea Scandal: How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Respond," *Heritage Foundation WebMemo* (January 23, 2007) 참조.

UNFPA는 북한과 공동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한 적도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계국에서는 시험조사단계를 거친 뒤 2007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도에서 한 군을 선정해 그 군에 속한 읍(邑)과 한 개 리(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중앙통계국은 시험조사에 앞서 각급 통계기관과 해당 조사 지역의 통계관계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행하였다. 2008년 10월 1일 북한 전역에서 동시에 시작된 당시 조사에서 북한의 총인구수와 나이 및 성별, 지역별 인구분포 상태, 출생 및 사망률 변화 등 인구상태 분석과 인구예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⁵⁹²⁾

당시 북한의 인구조사를 위해 UNFPA 자문관 1명이 평양에 상주했으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북한조사요원들을 돕기 위해 10명의 국제기구 관계자가 파견되었다. 특히 UNFPA는 북한의 인구조사 관계자들을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에 파견해 조사기술 등을 전수했다. 특히 홍콩과학기술대학에는 5명이 파견되어 조사 및 통계분석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해 소속 인구지속가능발전중심에 배치돼 1개월간 연수를 받았다.⁵⁹³⁾ 북한당국은 이 같은 기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UNFPA와 협의해 국제기준에 맞는 자료를 작성한다는 데 동의하였다.⁵⁹⁴⁾

북한이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북한은 당시에 UNFPA의 도움을 받아 1994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 일제조사를 시행해 1993년 현재 인구를 2,121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UNFPA는 북한 주민의 가족계획과 AIDS 예방을 위해 매년 피임기구인 콘돔을 북한에 제공해왔다.⁵⁹⁵⁾

592) 『조선중앙통신』, 2008년 3월 14일

593) 홍콩 문화보(문화보) 인용 보도, 『연합뉴스』, 2007년 12월 18일

594) 『자유아시아방송(RFA)』, 2008년 3월 14일

595) 『자유아시아방송(RFA)』, 2008년 4월 1일

북한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와 UNFPA의 조사 및 통계분석 능력 배양 지원 사례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UN기구들은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지원이라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초통계 자료가 중요한 것은 초기 분석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중동부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체제전환 초기 단계에서 빈곤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개별국가와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여자는 정부가 빈곤 수준을 관리하고 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⁶⁾

가구별 생활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와 다른 도구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사회적 지원의 대상을 더 잘 설정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후자는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정책 분석 및 분석지도에 근거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초가 되었다.⁵⁹⁷⁾ 세계은행이 베트남과 러시아에 접근했던 사례는 북한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에 개입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가구조사(household survey)에서 통계수집 및 분석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은행의 생계수준측정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를 베트남 현지에 맞게 수정하여(customized) Vietnamese Living Standard Survey (VLSS)를 조사틀로 만들었다. 3단계로 나눠 접근하였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 예컨대 영양상태, 일일섭취량 등에 대한 조사와 다음 단계에서 깊이있는 가구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⁵⁹⁸⁾

596) The World Bank 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OED), *Economies in Transition: An OED Evaluation of World Bank Assist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p. 39.

597) Daniel Morrow, "Aid to Transition Economies: Lessons of Experience,"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pp. 18-19.

598)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KIUN 정책연구시리즈 2007-06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44-45.

북한당국은 또한 IFRC의 재해예방 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IFRC이 최신 대북 구호사업보고서를 통해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IFRC로부터 결핵 진단 장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⁵⁹⁹⁾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력을 강화해 건강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⁶⁰⁰⁾ 특히 WHO는 에이즈(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올해 AIDS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집중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WHO는 수년 전부터 북한에 AIDS 예방법과 바이러스 검사기술을 전수해왔으나, 북한국경 지역에서 AIDS 감시와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2007년 12월 북한에서 AIDS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WHO, UN에이즈 기구(UNAIDS), UNICEF, UNFPA 관계자와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평양에서 ‘세계 AIDS의 날’ 국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UNAIDS와 WHO 측에 AIDS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두 UN기구는 지원을 약속했다.⁶⁰¹⁾

국제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물 접근율은 1970년대에는 100%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부터 북한경제가 쇠퇴하면서 물 접근 비율이 59%로 떨어졌다. 특히 하루에 6시간만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전기 부족 때문이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6시간밖에 물이 나오지 않아 배설물이 제대로 흘러나갈 수 없다. 물이 부족해 집 밖에 구덩이를 파서 공동으로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어 곤충이나 파리가 들끓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UNICEF 북한 대표부는 북한주민이 깨끗한 화장실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려고 수동펌프를 설치하는 등의 ‘WASH 프로젝트’를 실시하

599)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에바 에릭슨 IFRC 동아시아지역 담당 국장과 테즈 윌리아 WHO 평양대표 등을 초청해 북한의 결핵 통제상황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와 예술 소품 공연 등을 벌였다. 『연합뉴스』, 2008년 3월 29일

600) 『로동신문』, 2007년 4월 7일

601) 『자유아시아방송(RFA)』, 2008년 3월 31일

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와 가정에서 기초적인 위생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인민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UNICEF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와 화장실을 설치하는 ‘WASH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3개 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바 있다.⁶⁰²⁾

UNICEF는 북한의 물 공급과 화장실 관련 정책을 개발, 설계, 지원하고 있다. 준도시 지역의 폐수와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연구기관과 북한정부의 협조를 얻어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 북한상황에 맞는 분산폐수 처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3개 도시를 선택해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황해북도 신계에 1960~70년대에 설치된 낙후된 펌프를 산으로부터 끌어오는 중력 시스템으로 전환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북한에 계곡이 많아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쉽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유니세프 측은 밝히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는 북한의 건강 관련 부처와 협의해 150~200가구마다 한 사람씩 가정의를 뒤편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OCHA는 2007년 11월 19일 발표한 ‘북한수해종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난 여름철 폭우 때문에 수해 지역에서 상수도용 양수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주민이 안전하지 않은 우물, 강, 샘의 물을 식수로 의존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UNICEF는 북한당국과 2007년 8월 폭우 피해가 가장 심한 26개 군의 상수도 시설을 현장 조사한 결과, 장비가 손상되고 전력이 부족해 양수시설이 제대로 기능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602) 무랏 사힌(Murat Sahin) UNICEP 북한대표부 물·위생 전문가의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워크숍 발표내용 『The Daily NK』, 2007년 11월 23일.

(나) 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북한 내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UN국가지원팀(UN Country Team : 이하 UNCT)에는 5개의 UN기구가 소속되어 있다. FAO, UNEPA, UNICEF, WFP 그리고 WHO이다. UNDP는 UN 상주조정관의 사무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⁶⁰³⁾

현재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자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UNCT는 최근의 북한주민이 매일 겪고 있는 최근의 어려움과 현지 사정들을 전달하기 위해 매달 OCHA의 긴급구호조정관(The Emergency Relief Coordinator)에게 월별 동향보고서(monthly report)를 작성해 지원하고 있다. UNCT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관련 이슈에 관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포괄적 문서(The Overview Funding Document)를 준비해왔다.

이 보고서의 실질적인 집필 과정에서 UNCT는 국제 NGO를 포함한 인도주의 지원 파트너들로 구성된 주제별 그룹들로부터 자료와 분석을 지원받았다. UN기구의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초점은 즉각적인 식량지원, 보건, 식수와 위생관리, 그리고 교육수요 충족에 맞추고 있다.

△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humanitarian situation) 즉, 북한 내 식량 소스와 식량공급 시스템(availability and coping mechanism), 주민의 영향상태

△ 농업과 가축 생산현황

- 농업: 옥수수, 감자, 양배추, 야채 및 과일 생산현황
- 농업생산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 경작 메커니즘, 수확과 수확 이후 문제들, 현재의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
- 가축생산 관련: 가축생산과 관련해 직면한 주요 이슈들

△ 보건과 영양

603) The United State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UNICEF, WHO, UNFPA 그리고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 △ 물, 위생관리, 위생: 물 공급 시스템, 위생 시스템, 위생교육 및 위생 관행 등
- △ 교육환경

UN은 포괄적인 경제·사회 관련 자료가 북한의 경제성과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그림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경제, 사회 상황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여러 한계에도,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상주하고 있는 유럽 NGO와 UN기구는 UN RC에 주도되는 조율을 위하여 참여적 접근을 고안하였다. UNRC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대응과 UN인도주의적 사업 조정사무소(OCHA)를 통한 자원 조달요청 문제를 조율한다.

그리고 전략적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협의는 매주 개최되는 Inter-Agency Forum(IAM)에서 이뤄진다. 이 포럼에는 모든 상주하는 인도주의 원조기구, 개발기구들, 그리고 평양주재 외국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참석하는 고정 회원들은 UN기구들, IFRC, ICRC, EUPS 단위들(상주 및 비상주 NGO), 공여국 대표들 등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외무성 직속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UN기구를 담당하는 상대조직은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NCC)이다. 그리고 유럽 NGO를 상대하는 기구는 북한-유럽 협력조정기구(Korean-European Cooperation Coordination Agency: KECCA)이다.

북한정부는 현지에서 UN기구와 유럽 NGO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Inter-Agency Forum(IAM)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한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접근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UNDP, UNFPA, UNICEF에 의해 중앙통계관리국(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많은 자료와 분석의 필요성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지에 상주하는 NGO 수의 증가가 특히 중요한데, 유럽 NGO들은 북한 내보다 넓은 지역들을 담당하고 있고, 밑바닥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그리고 개발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UN기구들과 유럽 NGO들은 프로그램 수요에 기반을 뒤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WFP는 최근 209백만 달러 규모의 긴급활동을 시작했고, 남포시를 포함한 107개 군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2008년 중반 500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식량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200개 군 중에서 131개 군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자원과 활동 규모의 축소 때문에 WFP의 활동은 축소되었고, 현재에는 긴급구호활동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강도와 평안북도 지방을 제외한 남쪽 지방과 북동쪽 지방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백신 예방접종운동을 펼쳤던 UNICEF와 2008년 인구센서스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활동을 했던 UNFPA는 북한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방접종과 자료수집활동은 UN직원들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UN기구의 정보수집의 핵심수단도 ‘감시-분석-평가’ 시스템이다.

현장 접근 상황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UN의 평가이다. 예를 들면 2002년 현장 방문 7일 이전에 통고해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WFP가 북한정부와 양해각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감시 목적의 현지 방문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하면 되도록 했다. UN기구들은 현재 원조 대상 지역에 미리 계획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더욱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기구들은 프로젝트 현지를 매우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일부

기구들은 같은 프로젝트 장소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시 현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따라서 UN 기구들은 북한정부와 프로젝트들에 대한 공동의 감시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른 기구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공유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기회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UN기구는 예비 이행평가, 과정 감시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정부는 UN, 양자 및 다자기구들의 공동 평가활동들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10년 8월 대규모 홍수 손해를 입었을 때 UN에 긴급 원조제공을 요청하면서 UN기구 간 긴급사태 대응그룹 Inter-Agency Contingency Group의 합동평가는 수용하고 지원했다.

북한정부는 UN기구에 지원의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숫자와 장소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평가, 감시 등을 목적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주민과 기관들에 대한 리스트 등 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흔히 뒤늦게 제공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북한정부에 의해 제공된 자료들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접근의 제한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UN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일반주민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북한정부관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기구들은 지원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실무자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현지 지방단위의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단위의 참여자 수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UN기구들을 포함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영역(sector)에서 기준점(baseline)을 제시하고, 활동 영향과 추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요구수준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UN기구들은 지난 2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2009~2010년에 이뤄진 북한정보 관련 주요 평가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UN Strategic Framework(2011년 15월)
 - :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태 분석
- △ FAO/WFP 곡물 및 식량안보평가임무 수행(2010년 10월)
- △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조사 수행
- △ UNFPA 최초로 2008년 이후 북한 전 주민 인구조사 national census 실시 및 2010 보고서 발간
- △ 2010년에 종료된 긴급구호활동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2010년 5~6월)
 - : WFP 지원의 영향, 적절성 및 효과성 등 평가, 당시 WFP는 이 평가를 위해 군(郡) 관료들, 병원, 어린이 보호기관, 그리고 일반 가구 등을 인터뷰

기초 정보수집 및 분배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 혹은 교섭력은 국제기구의 지원 실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WFP는 지난 200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하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WFP가 UNICEF와 시행해오던 영양개선조사사업은 대북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2005년부터 중단되어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 WFP가 UN식량농업기구(WFO)와 매년 실시해오던 북한 내 식량실태 조사도 여러 차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FAO는 매년 식량 작황 조사를 실시하고 WFP는 북한 일반가정에 대한 방문을 통해 식량소비수준을 측정해 왔다.

최근 북한당국은 주민이 식량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묻는 것을 허락해 사실상 북한에 이중적인 식량 분배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UN실사단은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UN아동기금(UNICEF)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함경도, 양강도, 황해도, 강원도 등의 식량 사정을 조사했다. 이들의 조사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지역의 북한주민가정을 직접 조사단이 방문한 점이다. 지난 2004년 북한당국이 지정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조시와 농촌 지역의 가구를 방문해 식량조사를 벌인 이후 처음이다. 또 관심을 끈 것은 북한당국이 이들 조사단이 북한주민의 사정을 방문해 묻게 되는 질문에 식량을 어디서 구하는지와 어떻게 식량을 구매하고 있는지(how they are able to purchase food), 그리고 얼마를 줘야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what the costs of food are) 등에 관해 묻도록 허락한 점이었다.

UN기구는 북한에 존재하는 이중적 배급구조, 즉 북한주민이 당국의 배급에만 매달리지 않고 식량이 사설시장인 장마당을 통해 시장가격에 의해 주민에게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당국은 평안도와 자강도에서 식량수요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조사단에 대해서도 UN실사단이 주민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UN실사단은 최소 열흘간에 걸쳐 북한의 식량사정평가작업을 벌였고, 미국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함께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식량계획의 국제요원 몇 명이 미국 조사단에 포함돼 조사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⁶⁰⁴⁾ UN기구는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해 국제사회로부터 모금액을 늘리고, 일부 정보는 중장기적인 북한 내 식량문제해결, 나아가 경제사회 개발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604) 『자유아시아방송(RFA)』, 2008년 6월 16일.

3. 북한정보교류 협력방안

가. 북한정보 협력현황과 문제점

최근 수년간 정부나 민간 차원 모두 대북지원을 하는 국제 NGO나 UN기구와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대북제재가 전방위로 부과되면서 국제사회와 개별적으로 제재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는 UN기구 및 국제 NGO 간에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식량난의 실태를 조사해 지난 2011년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북한식량난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도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WFP가 2010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86만 7천 톤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했다가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다.’라고 보고한 것은 북한 측 제공 자료에만 의존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한국정부의 의혹을 낳은 것이다.⁶⁰⁵⁾

이처럼 정세가 악화하면 국제 NGO, UN기구 등과의 정보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북지원을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 사이의 정보교류도 많이 제한되었고, 대북지원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기회들도 없었다.⁶⁰⁶⁾

과거 수년 동안 국제 NGO와의 북한정보교류는 주로 개별 면담,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서 이뤄져 왔다. 한국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605) 『연합뉴스』, 2011년 4월 11일.

606) 우리민족서로돕기·경기도·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아시아재단 공동주최,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 개발협력』, (자료집 인사말씀, 2010.11.15).

지원한 사업들은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⁶⁰⁷⁾ 또한, 통일부 직원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일부 UN기구 등에 파견 나가 현지에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종의 ‘1.5트랙’ 차원의 접근으로서 통일부 정책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유사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UN기구 및 국제 NGO를 초청해 공개 혹은 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북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이 같은 행사들은 대개보다 나은 지원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공유되는 북한정보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기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북한 실태 정보와 관련해 상호교차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루는 공개회의, 다른 하루는 비공개회의 회의로 진행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 NGO나 UN기구는 북한에 상주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왔고,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⁶⁰⁸⁾

국내외 대북지원 및 인권단체와 UN기구, 주한 외국공관의 북한 담당자들을 초청해 심층적인 북한정보교류를 도모한 공개·비공개 병행 국제회의는 미국 민주주의 재단(NED)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010년 2월 ‘북한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⁶⁰⁹⁾ 그리고 2010년 11월 우리민족서로

607)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WHO의 북한 리,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의 지원 사업, UNICEF의 영양개선, 식수환경개선, 백신지원 사업 등에 각각 100억 원, 30억 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608) KNC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4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Beijing China, May 28-31, 2005), p. 152.

60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미국 민주주의 재단,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 서울, 2010.2.4-5).

돕기·경기도·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아시아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 개발협력’ 등이 모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회의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북한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차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축적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는 공개·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영문 자료집으로 발간해 관련자들 사이에 회람하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정은 국내외 전문가들 간 교류한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대북 지원사업은 물론 개발, 인권 등과 관련해서도 국제협력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북한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를 함께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⁶¹⁰⁾에서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5> 정보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구분	현황	문제점
정부 차원	-비제도화된 형태의 정보교류협력 -세미나, 비공개워크숍, 정부 관료의 국제기구 파견 -남북협력기금 지원 국제기구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공	-남북관계,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 -정보교류협력의 지속성 결여 -피상적·기술적 논의에 한정 -교차검증기회 부재
정부+민간협력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 파트너십 결여	-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국내 NGO와 국제기구만의 불규칙한 정보교류협력
민간 차원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부재	-미흡한 정보교류협력 인적 네트워크 형성

610)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oul: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2011), p. 3.

나. 북한정보 협력 및 개선방안

(1) 목표

우선,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제 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은 우선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동시에 북한정부 및 관계자와의 협상에서 더 높은 개방성과 접근의 용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는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국내외에서 후원자들이 신뢰하고 기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제 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은 속성상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합의되고, 또한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교류는 어떤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공동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어야 국제 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이 실효적으로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자금 지원(bridge financing) 등의 측면에서 기여도가 클수록 정보교류 협력에 대한 조정권이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 NGO와 UN기구와의 제도화된 정보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 NGO가 국제 NGO 또는 UN기구와 같이 북한 내 상주하면서 통합된 접근과 감시 및 평가를 공동하는 실시하는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공동의 우선 사항 정의, 목표 분담, 공동 감시 등이 가능할 때 정보교류협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 개선방안

대북지원사업을 펼치는 국제 NGO, UN기구 등과의 북한정보교류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내 정부와 민간 사이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나 민간 개별적 차원에서 각기 국제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국제 NGO나 UN기구와의 정보교환 및 정책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민간 대북지원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를 앞세우고,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하면서 주요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협력 구조들 속에서 민·관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정보를 교류하는 틀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정보교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의 재개 및 정례화

각국의 개별 NGO는 저마다의 지원활동을 펴나가면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교환 및 정책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북경, 도쿄,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 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은 아직 북한 지역에서 활동의 제약을 가진 남한 NGO들에 특히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4차례 개최된 바 있는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국내외 NGO간의 한층 강화된 상호협력은 각기 소속된 단체의 역량을 보다 성숙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NGO, UN기구 사이에 서로의 사업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대북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다. 대북협력 NGO회의는 국내외 단체 및 기관들사이의 신뢰할만한 조정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아시아, 유럽, 북미의 많은 NGO와 UN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식량난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제한된 활동으로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북 지원 NGO는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기 위해 국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⁶¹¹⁾

1회 회의(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는 1999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터액션(InterAction)의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유럽, 북미의 NGO와 UN기구, 한국·미국·유럽의 정부 대표를 포함해서 약 11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기구별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그리고 옹호(advocacy), 네트워크(networking), 인도적 지원의 양상(modalitie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경제적 개입과 지속가능한 개발(economic eng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등 4개 분과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와 제언이 이뤄졌다. 두 번째 회의는 일본 NGO들이 주최하였다.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90여 명의 NGO와 UN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활동보고와 농업, 보건·의료, 기구 간 협력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이어 열린 3차 회의는 한국 NGO의 주최로 2001년 6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16개 나라에서 온 NGO와 UN기구 대표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농업 및 산업개발지원, 식량 및 의료보건 지원, NGO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에 대한 토의, 그리고 국제회의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 뒤 2002~2004년 사이에는 후속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각 지원기구의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지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NGO의 협의체인

61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와-지역평화와 개발협력.” (중국 북경, 2005.5.28-3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이하 KNCCCK)의 발의로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심층적이면서 광범위한 북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다.

(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북한 내 다양한 변화가 이전보다 폭넓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 및 NGO와 국제 NGO 및 UN기구 등과 안정적 정보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서로 조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 공동 자금지원(joint funding),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의 합의 필요성, 대북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 및 공동의 개발전략 수립 등의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1998년 UN합동호소절차(CAP) 마련을 위해 정부와 후원기관, NGO, UN기구 대표들이 모여 북한지원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9가지 원칙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대북지원 국제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는 공동사업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 UN인도지원조정국(OCHA)과의 긴밀한 연계

1997년 이후 2005년까지 UN인도지원조정국(OCHA) 사무실이 평양에 존재했다.⁶¹²⁾ UN기구와 NGO, 정부기구가 일주일에 한 번 기구 간 모임(Inter-Agency meeting)을 통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또한, 부문별

612) UN인도지원조정국(OCHA) 사무실은 2005년 폐쇄되었으나, 2011년 사무소 재개설을 복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 구호, 건강, 농업, 수자원 및 위생) 조정 모임이 격주로 열렸다. 지금도 OCHA는 기구 간, 부문 간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폭넓은 북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민간 NGO는 OCHA와의 긴밀한 연계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4회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에서도 북한 상주 OCHA와 남한 NGO간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제안한 바 있으나,⁶¹³⁾ 실제로 잘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 평양에 OCHA가 재개설되기 이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있는 OCHA 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UN인도지원조정국(OCHA)는 공동의 우선 사항 정의, 목표 분담, 공동 감시 등이 가능할 때 인도적 지원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¹⁴⁾ OCHA는 UN 안팎의 파트너와 CHAP(comman humanitarian action plan) 전략을 개발하고 인도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확립하였다.

OCHA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환경분석과 인도적 필요성의 주기적 평가는 위기 상황의 원인, 원동력,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보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 웹사이트 공유

국제 NGO는 인터넷과 전자우편(e-mail)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9년 제1회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에서 추천된 사이트는 릴리프웹(relief web: <www.reliefweb.int>)의 북한 부문이었는데, 당시 구호기관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항상

613) KNC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4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 152.

614)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 회의 -지역평화와 개발협력," (북경 청화지방호텔, 2005.5. 28-31), p. 205.

쉽지는 않았다. 특히 평양 상주사무실에서는 릴리프웹과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공유는 필요하고, 정부(가령 통일부의 인도지원과, 정보분석국 담당자) 및 민간 NGO 대표와 국제 NGO, UN기구 핵심 관계자 사이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마) 국제기구·민간단체 합동워크숍 개최

평양 상주 NGO, UN기구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 기구에서 일하는 상근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해 합동 워크숍을 여는 노력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간·분기별 행사로 정착시켜야 한다.

(바) 기타 과제

북한당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해 NGO, UN기구 사이의 정보교환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국제 NGO, UN기구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들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대북지원사업의 조율과 공동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 NGO 및 UN기구 담당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정보교류 협력방안 외 개별적 미팅을 통해 더욱 유용한 북한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국제 NGO, UN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을 통해 분야별 지표(예: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식량 공급체계 등)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축적을 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표 6-16> 정보교류협력 목표와 개선방안

구분	목표	개선방안
정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화된 정보교류협력의 체계 구축 -정세 변화와 무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국제기구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NGO간 교류협력 적극 지원, 공동사업 형태의 참여 -국제 NGO 및 UN기구 전담 공무원 파견 및 전문성 양성
정부·민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NGO, UN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인도지원조정국(OCHA)과 긴밀한 연계 -국제기구·민간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민간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협력 국제NGO회의의 재개 및 정례화 -웹 사이트 공유

VII. 소 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신뢰할만한 북한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대북 정보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및 중국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북한정보교류협력은 초보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술정보 획득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탈북자문제 등 인간정보수집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에게 적지 않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및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한·미 간 북한정보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협조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제한적이지만 군사,

정치, 외교 영역에서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영역에서의 북한정보협력은 사회와 인권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정보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한·미 양국이 북한정보의 보안성 유지문제와 정치적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과의 북한정보협력은 특히 미흡하며, 한·중 간 북한문제와 북한정보협력이 제한적인 가장 큰 원인은 한·중 간 정치·외교적 신뢰관계가 아직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한·중관계가 우호적일수록 북한문제와 북한정보협력문제에서 한·중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데 반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중 간 북한정보교류·협력이 극도로 부진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중 사이에는 현재 정부 차원의 북한문제와 북한정보교류협력 채널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사이에 1.5트랙 차원의 다양한 회의와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도 기술정보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되어 있지만 제일 조총련이 있어 인간정보수집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을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체계 강화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한·일은 북한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한·일 정보당국 간 북한정보협력이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정보를 다루는 실무자 간 교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양국 국민감정과 영토문제 등 일부 현안 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북한정보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러 간에도 북한정보협력에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정보를 다루면서 한·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연이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국대사관 근무 정보요원이 추방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한·러 간 정보협력에 불협화음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 간 북한정보교류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의 제도화가 미비했기 때문에 평가된다. 또한, 재러 탈북자의 한국행과 관련된 사안은 외교부 채널을 동원하여 해결하기가 곤란하며 정보기관 채널을 활용해야만 하는데,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접촉과 교류가 극히 부족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관심사에 대한 평소의 배려와 협조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덜 느껴왔다. 러시아 정보기관 이외에 러시아 학계 및 비정부단체와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정보를 공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러시아와의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 내 친한적 인사 이외에도 친북성향의 인사와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균형감 있는 시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러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부처와 언론기관 북한 관련 전문가의 러시아 파견·주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북한정보교류협력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모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으로 대북제재가 전방위로 부과되면서 국제사회와 개별적으로 제재 레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는 UN기구 및 국제 NGO 간에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제 NGO

와의 북한정보교류는 주로 개별면담,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서 이뤄져 왔다. 한국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한, 통일부 직원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일부 UN기구 등에 파견나가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종의 ‘1.5트랙’ 차원의 접근으로서 통일부 정책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유사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UN기구 및 국제 NGO를 초청해 공개 혹은 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북한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들은 대개 보다 나은 지원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공유되는 북한정보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기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상기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보다 원활하게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은 독자적 기술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북기술정보 수집은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북한기술정보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감시, 감청정보수집기술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급변사태 시 한·미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간정보 수집·분석 작업 수행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각기 기술정보와 인간정보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양국이 북한정보관리체제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북한정보분석 과정에서 접촉과 업무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는 또한 북한정보분석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정보관리요원의 상호 교환방문 등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정원 북한정보부서 요원과 미국 정보부 북한정보요원 사이의 긴밀한 교류와

접촉이 유지되어야만 제한적인 북한정보를 통해서도 북한정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정치 영역의 북한정보수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간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한·중이 북한문제해결과 북한정보관리 과정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정치·외교적 신뢰관계를 먼저 돈독히 해야만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경우, 중국은 북한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반면, 한·중관계가 우호적이고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국면으로 전개될 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공조가 어느 정도 가능했고 북한정보공유도 일정부분 가능했다. 한·중 간 북한정보협력체제가 긴밀하게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8년 5월과 8월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했던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 차원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관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문제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중이 북한정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국가비밀보호법 9조 3항에서 외교활동 중 획득한 비밀사항과 외국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를 약속한 사항도 국가비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지도자의 중국방문과 같은 북한과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보원으로부터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향후 한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정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정보정책을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북한정보협력을 추구하면서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동에 기지를 두고 북한여행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중국내 탈북자, 중국과 북한 국경을

오가면서 무역거래를 하는 중국의 민간무역업자, 북한에 친지를 두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조선족들을 북한정보를 수집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을 관할하는 선양 총영사관의 대북 정보수집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양 총영사관에 북한문제와 북한정보를 다루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주재관으로 파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북한정보협력체계 개선방안으로서 정보담당 부문 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일 간 대북정보 협력의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안은 성격이 유사한 정보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국정원과 일본 내조실이 중심이 되어 북한정보 담당부서 간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 정보기구, 외통부, 경찰 등과 일본의 정보본부, 외무성, 경찰 간의 대북 업무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 즉 한국의 인간 및 신호정보와 일본의 영상정보가 효과적으로 결합될 경우 더욱 체계적인 북한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일이 북한정보협력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한·일정부 간에도 북한정보협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1.5트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한·일 국책연구소 간의 연구교류 및 협력 활성화가 요구된다. 군사안보와 외교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북한문제, 북한정보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1.5트랙을 가동하여 일본이 가동하고 있는 북한정보관리체계와의 교류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양국의 북한정보를 다루는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 내 저명한 북한연구자의 인적사항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러시아와의 북한정보협력을 강화하는데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사업 및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로서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베

리아 개발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진출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 프로젝트에 적극 호응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문제와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띠 가능성은 제고될 것이다.

러시아 내 북한전문가들과의 교류·접촉 확대가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북한정보를 관리하는 요원들의 상당수는 과거 북한에서 유학하거나 북한에서 체류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한국과 북한정보협력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향후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진 인력 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 언론인, 외교관, 학자들에게 한국에서 언어연수나 학위 과정 유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북한정보협력 노력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 권력특성 상 한·러 간 긴밀한 북한정보협력은 러시아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정보를 의사가 러시아가 북한에 구축한 인적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생할 다양한 북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도 북한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외 관련 기구들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입증 가능한(evidence-based) 정보에 근거한 우선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경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문제는 식량, 교육, 의료,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각론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 각 분야 혹은 영역은 여러 분야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국제 NGO 그리고 UN기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 개최 및 정례화, 국제기구와의 북한정보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UN인도지원조정국(OCHA)과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 웹사이트 공유, 국제기구·민간단체 합동워크숍 개최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 주변 4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협력방안 이외에 내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 외교·안보부처에 미·중·일·러와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사회와 북한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부부처 내에 보강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정보 수집·분석 기관과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은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있는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업, 종교단체 및 학계전문가들이 국제사회를 통해 수집하는 북한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부처가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정보를 취득·활용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경쟁적으로 정보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소속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를 통해 취득한 북한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러 정보소스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가 권위적인 분석기관에 취합되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축적·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결론



제7장 결론

I. 북한정보관리체계의 비교분석

1. 분야별 비교분석

가. 사회·문화 정보

정부 주체는 타 분야의 정보에 비해 사회·문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 따라서 정보수집에 덜 적극적이고 질도 낮은 수준이다. 정보분석단계에서 정치화의 문제가 제기되곤 하고 민간 차원의 증가한 정보수집의 오류와 왜곡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능통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단계에서는 분석된 정보가 정보기관과 정부 내 타 부처 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되지 못하므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주체에서 생산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가 대개 기본정보에 머무르고 있고 정부 부문에서 생산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 이상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정부의 사회·문화 정보의 생산 주체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하고 있으므로 정보생산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분석 과정에서 정부 주체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민간 부문에 전수 내지 공유하고 있지 못해 민간 부문 정보분석을 지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수집이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수집되는 정보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활동 분야나 목적에 제한된 단편적이거나 주변적인 정보가 수집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북한공간물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탈북자 증인과 북한 현지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의존도가 높고 기술정보수집활동에 제약이 크다. 이에 획득한 정보의 신뢰성 및 대표성에서 논란이 되곤 한다. 다음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부족하고 현재 민간 부문 내에 협력적 분석 네트워크는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DB가 부재하고 정보해석에서의 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고급정보 또는 희소정보일수록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고 타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접근의 획일적인 제도적 제약성이 여전하고 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정보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사회·문화 정보의 차별적 개선방안⁶¹⁵⁾으로는 민간 부문의 인간정보와 정부 주체 기술정보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현재 민간 주체에서 생산하는 정보량이 급증하면서 정보수집수단의 편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의 한계가 정부보다 큰 상황에서 영상·신호정보 등 기술정보수집보다 인간정보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분석과 활용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체의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수집 역할 확대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기술정보수집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인텔리피디아(Infopedia)를 벤치마킹하여, 정보 축적·공유가 쉽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정부 주체별로 산재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취합하는 유인방안을 접목하여 정보 축적·공유

615) 개선방안은 대체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제안된다. 여기서는 본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로 타 분야와 차별되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공통적으로 제안되는 개선방안은 뒤에서 정리한다.

커뮤니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대상에는 우선 정부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 축적·공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서 대민정보공개 및 서비스 제공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이후에는 민간 부문별로 참여 희망 여부와 전문성 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성과보수를 제공하므로써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인권정보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보수집 관련 활동은 소극적이며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통일연구원이 최근 체계적인 북한인권침해 DB 사업을 하여 북한인권정보수집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은 있으나 정보 분석·활용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 정보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를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른 외교정책목표와 절충하는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민간 주체들의 북한인권정보수집활동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성과 신뢰성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문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분석능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NGO와 언론, 학계 등 각 주체가 북한인권정보를 더욱 적극적이고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또한, 국제 주체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보편적 분석 틀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 주체들과 국내 주체들 사이에는 북한인권정보공동체가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 주체들의 정보수집활동은 국제 주체들의 수요와 정보활용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또한, 국제 주체들의 정보수집과 인권정보 접근 비용이 매우 높다.

개선방안으로 정부 주체는 인권정보를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공개·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의 인권정보는 물론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운동 동향, 국제기구의 각종 관련 자료들을 입수한 정부 주체들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 주체와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 주체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교차검증과 신빙성 있는 정부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인권정보를 북한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의를 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 NGO 활동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

다. 정치정보

북한정치정보는 다른 분야의 북한정보보다 우리의 대북정책결정이나 안보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정치 분야 정보는 다양한 첩보 및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대부분이 비공개 자료들인데, 이러한 수집활동은 남북관계나 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할 경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정치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정보 주체의 정치적 선입견과 편견이 정보의 수집과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편향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슈머이면서 민간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정보공급에서 공개수준이 낮은 편이다.

민간 차원의 수집단계에서도 과도한 경쟁에 따른 확인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 차원에서 정보수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더욱 자극적인 정치정보에 집착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념적 논쟁이나 편향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 관련 사설단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념적인 내용을 수집하여 전파하고 언론이 이를 여과 없이 기사화한다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그르치고 우리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정보관리체계 제도상의 문제점은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종합적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발생하는 여타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수집 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특정한 영역에서 정보를 분리·수집하고 수집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보의 공유 차원을 넘어 분석 업무에서도 민·관의 협조체제가 부재한 점 역시 당면한 문제점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언론의 책임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과잉 경쟁에 따른 오보와 북한정보의 상업화, 정보의 정치화의 동조는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언론 스스로 자각하여 자제하고 네트워크화된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견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익과 국민 알권리의 조화 속에서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고, 이를 어길 때 언론사 간 견제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향후 동향을 예측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북한 관련 정보, 특히 정치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세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의 지표화 또는 지수화를 통해 북한정치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라. 외교정보

북한외교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활용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중심의 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정보는 많은 부분이 민간 부문에 유입되었으나 북한외교정보는 분단 대치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정보는 기밀 보호 아래 비공개 원칙이 우선시되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이로 인한 오류와 불확실한 예측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북한외교정보수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로 수집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관해 정부기관이 중복하여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기관 간의 분석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이 존재하고 이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있다. 또한, 북한외교정보에 대해 정치 및 안보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북한외교의 입체적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외교정보활용에서도 부처 간 정보활용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때로는 부처 간 경쟁으로 기관 이익과 관련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간 자체에서 북한외교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 자체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민간 분야의 정보수집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 정보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의 북한외교정보가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분석의 편향성에 있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 자체가 가진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북한외교정보의 유통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의 편향된 관심에 의해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 그 중에서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집중은 검증되지 못한 주관적 정보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제 정보공동체(inter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내의 다른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북한외교정보를 직접적으로 한국으로 전달하는 정보제공루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일본에서 축적된 북한외교정보가 미국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한국으로 전해지는 간접적인 교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내각위성정보센터와 관련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분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전문가뿐만 아니라 제3국 지역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 분석을 통해 북한외교정보분석의 정확성을 높여 정보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분석단계에서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의 실무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전직 외교관들은 각 국가에 대한 높은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외교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 군사정보

정부 주체 수집단계의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는 모두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의 사전 수집정보의 의도나 선호, 목적 그리고 정책적 편향성 등에 따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보가 취사선택되고 가공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정보분석의 협력 및 공조체계가 부재하다. 또한, 북한군사정보 중에는 공개되면 정보원의 노출은 물론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공유문제와 함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잘못된 정보수집과 분석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환류 과정이 부재하다.

민간 차원의 북한군사정보체계상 정보수집단계의 문제점으로 정보제공자와 제공정보 확인능력의 부재로 정보의 신뢰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보분석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정보 주체들의 분석능력 부족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분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정보분석 역할이 ‘분석의 검증’이 아니라 단지 ‘분석의 전달이나 이동’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활용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자체적인 북한군사정보의 신뢰성 검증이 불가능하여서 정보공유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정보공유는 이미 1차로 가공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정보는 국가기밀에 따른 등급분류에 따라 공개 및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군사 분야 개선방안으로는 국제정보협력체계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군사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현재의 여건상 국외정보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은 물론 주변국과 EU의 정보선진국들과도 협력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한·미 간 정보공조를 위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를 통합해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 구축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수집단계 개선방안으로 수집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보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정보에 의해 취득된 군사정보 증언 등의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도 ‘정보이력제’ 등을 도입하여 국가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활용단계 개선방안으로 환류 과정 부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각 주요 언론사와 대북단체의 정보 컨설턴트를 국가정보기관에 등록·관리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 언론사의 대북정보 컨설턴트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방한 초청 등 정보관계자와 개별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② 북한군사정보의 오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정보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감시 및 평가그룹을 형성하여 사회적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권고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바. 대남정책정보

북한이 공식 외교·안보라인을 거치지 않고 ‘비선(秘線)’을 가동할 때 이는 이 대통령에게 직보(直報)되어 개별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 사이에 정보의 독점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민간 소식통들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정보 또는 첩보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장되거나 핵심 정책결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정황이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 입안 및 실행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대남 대화 제의를 분석함으로써 뒤이은 천안함사건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났다. 당국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북한대남정책 분석 시스템하에서는 인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정책담당자 사이에서만 정보검증이 이뤄지면서 정보가 일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차원의 북한대남정보수집활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 전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정보수집으로서 ‘인간정보수집의 편중성’의 문제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정보분석 오류는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프레임에 맞춘 정보분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활용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언론매체가 시의성과 이목을 끌기 위한 정보의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 대남 메시지를 독점적으로 보도하는 연합뉴스가 전문(全文) 서비스를 하지 않아 일반 언론사와 인터넷 독자들은 기자와 연합뉴스의 판단에 따라 가공된 내용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북한정보의 다른 영역과 달리 대남정보 분야는 북한 내 정책결정 과정에 관계되는 고위급 인사와 지인의 접촉을 통한 대인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남정책 정보수집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 없이 의도적으로라도 북한당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다른 북한의 정보 영역보다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공개한 정보를 활용해 현재의 정책과 미래 정책을 예측하는 민간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북한이 내놓은 말과 행동을 자료화해 패턴을 찾아내고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 분석기법이 있다.

사. 경제정보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는 수집·공급하는 정보의 포괄 범위, 양 및 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보의 성격상 내부자가 공표하지 않은 정보를 외부 관찰자가 수집·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의미 있는 경제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자가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것조차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식경제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비공식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타 정부부처나 민간 부문으로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부족의 원인은 정보의 신뢰성 등 정보 자체의 문제, 정부부처의 정보 독점욕, 북한경제정보의 보안성 문제 등 다양하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이러한 정보의 소통부족은 큰 비용을 들여서 수집한 비공식 경제정보의 활용 가치를 크게 저하하는 작용을 한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비공식 경제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해당 수집부처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공식 정보의 소통부족, 특히 민간 부문과의 소통부족은 민간 부문의 북한경제 분석기능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경제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공식 정보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부문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비공식 정보가 적절하게 민간 부문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북한경제분석기능이 제한되고, 이는 다시 정부 부문의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능력의 저하로 연결된다. 북한경제정보의 적절하지 않은 발표양식 역시 정보의 활용 가치를 저하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북한의 시장화 경향이나 대북경제정책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가용한 통계 자료 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현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

북한의 체제전환이나 대북경제정책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정치적 고려가 북한경제정보의 정확한 분석이나 적절한 활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보분석의 질 제고를 위해 정보분석의 기준 또는 북한경제정보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분석기준은 모든 유관부처 정보분석관들의 정보분석과 평가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다. 그리고 일부 북한경제정보의 공표양식이 보편적인 경제통계양식과 달라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경제적 거래를 나타내는 분류양식을 적용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상황에서 북한경제분석이나 대북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정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북한경제전문가와 산업 부문 전문가 등 경제전문가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그 자체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비공식 경제정보를 일정한 체계하에 민간 부문 전문가의 분석을 위해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북한전문가와 경제전문가가 협력하여 이들 비공식 경제정보를 새롭게 해석하여 새로운 공식적인 경제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고안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 분야별 실태 비교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관리체계의 개선방향으로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내세웠다.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① 정보기관과 민간 부문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첩보출처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 ③ 정보분석 역량 강화, ④ 수집관, 분석관, 정보소비자 간의 연계 강화,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① 정보활동의 공개성 및 책임성 제고, ② 정보활동의 비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의회와 여론의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③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들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북한 정보관리체계의 실태를 평가한다.

<표 7-1> 분야별 북한정보관리체계 비교

		사회 문화	인권	정치	외교	군사	대남 정책	경제
효 율 성	정부와 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	×	×	×	×	△	△
	수집기관의 신뢰도	△	△	△	△	△	△	△
	정보분석 역량	△	△	△	△	△	△	△
	각 행위자 간 연계	×	×	△	△	△	△	△
민 주 성	정보활동의 공개성 및 책임성	△	×	×	△	×	×	△
	의회와 여론의 정보감독	△	△	△	△	×	△	△
	대국민 정보 서비스	○	△	△	△	×	△	△

주: ○ 우수, △ 중간, × 저조⁶¹⁶⁾

분야별 북한정보관리체계 영역별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정도이다. 대체로 전 분야가 낮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대남정책정보와 경제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집관, 분석관, 정보소비자 간 연계의 정도도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사회·문화 정보와 인권정보는 민간 차원에서 적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 및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정보관리 연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616) 이 분류는 정량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활동의 공개성 및 책임성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보의 정치화나 환류의 배제로 인해 인권정보, 정치정보, 군사정보, 대남정책정보 등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나 무책임한 정보남발이 자행되고 있다.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 정보분석 역량과 수집기관의 신뢰도이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을 수도 있으나 비교의 준거가 마련되지 않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사회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의회와 여론의 정보감독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는 과거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문화 정보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군사정보는 기밀주의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그 수준이 미비하다고 하겠다.

분야별로 효율성이 낮은 정보는 사회·문화정보와 인권정보이다. 정부 주체와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가 아직 미진하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정보공유와 행위자 간 정보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대남정책정보와 경제정보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다른 분야에 비해 뛰어나 정보공유 및 행위자 간 연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사회·문화 정보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민주성이 높은 편이다. 민간 부문의 정보활동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경제정보와 외교정보도 민주성에서 상위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성보다 효율성을 고집하고 있는 군사정보는 당연히 민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야별 차별적인 개선방안도 실태비교와 연동한다.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계가 미비한 사회·문화 정보의 경우 민간 부문의 인간정보와 정부 주체 기술정보의 결합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민간의 활발한 수집 활동에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인권정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개방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남남갈등의 중요한 축인 정치정보의 경우 혹 잘못 수집되거나 분석될 때 우리 사회를 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자기 책임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외교정보와 군사정보는 우리의 독자적 정보 역량을 배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에서는 이것과 함께 국제적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강점과 보완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대남정책정보는 다른 분야와 달리 대인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대화라인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한다. 경제정보는 무분별하게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분석의 질 제고를 위해 북한경제정보 표준운용절차를 수립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국제협력 비교분석

가. 국제적 정보협력 실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술정보 획득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탈북자문제 등 인간정보수집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적지 않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및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한·미 간 북한정보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협조체제가 가동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제한적이지만 군사, 정치, 외교 영역에서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영역에서의 북한정보협력은 사회와 인권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정보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한·미 양국이 북한정보의 보안성 유지문제와 정치적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과의 북한정보협력은 특히 미흡하며, 가장 큰 원인은 한·중 간 정치, 외교적 신뢰관계가 아직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한·중관계가 우호적일수록 북한문제와 북한정보협력문제에서 한·중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

를 수립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중 사이에는 현재 정부 차원의 북한문제와 북한정보교류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한·중 사이에 1.5트랙 차원의 다양한 회의와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도 기술정보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되어 있지만, 재일 조총련이 있어 인간정보수집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을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체제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일은 북한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한·일 정보당국 간 북한정보협력이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무자 간 교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양국 국민 감정과 영토문제 등 일부 현안 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북한정보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러 간에도 북한정보협력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정보를 다루면서 한·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연이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대사관 근무 정보요원이 추방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한·러 간 정보협력에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러시아와 한국 간 북한정보교류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이외에 러시아 학계 및 비정부단체와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정보를 공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 내 친한적 인사 이외에도 친북성향의 인사와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균형감 있는 시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모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북제재가 전방위로 부과되면서 국제사회와 개별적으로 제재 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는 UN기구 및 국제 NGO 간에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제 NGO와의 북한정보교류는 주로 개별 면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뤄져 왔다. 한국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사업들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한, 통일부 직원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일부 UN기구 등에 파견 나가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종의 ‘1.5트랙’ 차원의 접근으로서 통일부 정책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유사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UN기구 및 국제 NGO를 초청해 공개·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북한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대개 더욱 나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공유되는 북한정보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나. 국제적 정보협력 및 개선방안

(1) 한·미 간 북한정보 개선방안

한·미 간 TECHINT 공조에는 먼저 한국에 제공되는 TECHINT의 양과 질의 제고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더불어 양국 정보교류담당자들 간의 효율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TECHINT의 수집·분석 기법 등에 대한 다각적 교육지원도 미국 측에 요청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미 간 대북 TECHINT의 분담체계를 향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원의 보호나 사후 정치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 간 HUMINT 공조체제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탈북자의 공동 정보 관리, 북한 내 고위급 정보공급원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중국 내 북한정보 수집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 등 양국의 정보기구가 HUMINT 수집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미는 북한정보분석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정보관리 요원의 상호교환 방문 등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정원 북한정보부서 요원과 미국정보부 북한정보 요원 사이의 긴밀한 교류와 접촉이 유지되어야만 제한적 북한정보를 통해서도 북한정세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중 간 북한정보 개선방안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신뢰관계를 축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중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면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하려 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책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북한정보를 민감한 이슈로 다루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고급정보는 당 중앙이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고급정보교류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의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인력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보체제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부부처 내에 보강되어야 한다. 중국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정보

전문기들을 가동하고 있고, 북한정보수집을 위해서도 당·정·군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과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북한과 중국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을 배치·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한·일 간 북한정보 개선방안

우선,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내조실이 중심이 되어 각 기관 간의 관계를 제고시키며 나아가 부문 기관 간의 관계 강화를 유도·선도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 간의 대북업무협력은 유사기관 간의 정보 대화의 정례화와 교육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 강구가 현실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 즉 한국의 인간 및 신호정보와 일본의 영상정보가 효과적으로 결합할 경우 더욱 정확한 북한정보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일이 북한정보협력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한·일정부 간에도 북한정보협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하는 방안은 1.5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일 국책연구소 간의 연구교류 및 협력 활성화가 요구된다. 군사안보와 외교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북한문제, 북한정보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1.5트랙을 가동하여 일본이 가동하고 있는 북한정보관리체계와의 교류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양국의 북한정보를 다루는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 내 저명한 북한연구자의 인적사항을 자료화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4) 한·러 간 북한정보 개선방안

한·러 북한정보협력을 위해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 및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로서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극동개발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진출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문제와 북한정보협력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띠 가능성은 제고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북한정보를 관리하는 요원들의 상당수는 과거 북한에서 유학하거나 북한에서 체류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한국과 북한정보협력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향후 러시아의 북한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진 인력 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 언론인, 외교관, 학자들에게 한국에서 언어연수나 학위 과정 유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북한정보협력 노력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5) 한·국제기구 간 북한정보 개선방안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보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 NGO가 국제 NGO 또는 UN기구와 같이 북한 내 상주하면서 통합된 접근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공동하는 실시하는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공동의 우선사항 정의, 목표 분담, 공동 모니터링 등이 가능할 때 정보교류협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 내 정부와 민간 사이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 NGO나 UN기구와의 정보교환 및 정책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 대북지원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를 앞세우고,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하면서 주요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 재개 및 정례화,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UN인도지원조정국과의 긴밀한 연계, 웹사이트 공유, 국제기구·민간단체 합동워크숍 개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정부 부문

가. 청와대에 ‘정보관리비서관’ 재설치

현재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는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로 이원화되어 있다. 외교안보수석은 산하에 대외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을 두고 있고, 국가위기관리실장(수석급)은 상황팀과 정보분석비서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 보좌기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보관리측면에서 국한해서 볼 때 국가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기능이 없다는 점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정보분석 기능이 대북군사정보분석에 치중된 면을 들 수 있다.⁶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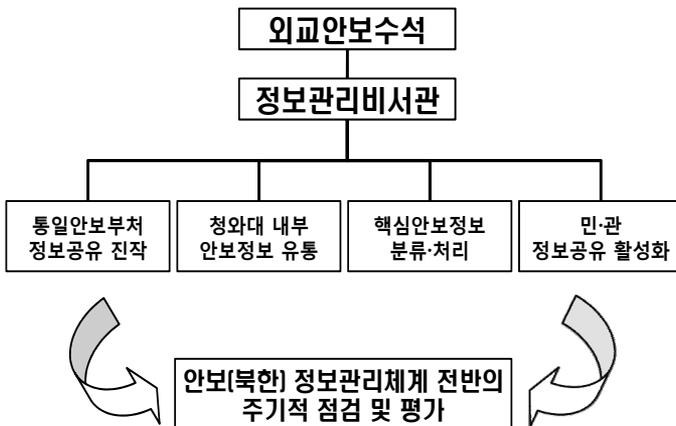
과거 노무현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기능 중의 하나인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 관리’⁶¹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관리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기능은 노무현정부 후기 들어 대통령 자문기구가 역할을 초과하여 개선기관 업무를 잠식한다는 비판으로 청와대 비서실로 흡수되면서 정보관리실도 외교안보수석 산하의 정보관리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정보관리실은 설치 초기에는 외교안보부처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점차 안보 관련 정보의 종합 판단 기능에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617) 이명박정부 출범과 더불어 폐지되어 있던 비서관급의 위기정보상황팀(노무현정부 당시의 위기관리센터)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개칭되었고, 천안함사건 이후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안보특보를 설치하였다.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수석급의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되고 산하에 정보분석비서관, 국가위기관리비서관과 상황팀을 두는 형태로 조정되었다.

61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과거 정보관리실 운영 경험과 현행 외교안보수석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정보관리비서관을 둘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실장 산하의 정보분석비서관을 정보관리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외교안보수석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다. 주요 기능은 대통령과 청와대 내에 북한·국제 및 안보 관련 정보의 공급, 통일·외교·안보부처 간 정보공유 및 국가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활성화, 민·관대북정보공유 활성화로 한다. 청와대로 공급되는 각종 정보를 다시 ‘분석’하여 정보를 선별·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정보보고는 국정원과 안보부처에서 제공해온 정보분류 및 우선순위 부여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국가기구와 민·관에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에 비중을 둔다.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고 정보관리비서관을 간사로 한 북한 및 국제 정세평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안보부처 간에 정세인식을 같이하도록 한다. 정보관리비서관은 북한정보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에 대한 국가기구의 정보공유 노력을 점검·평가한다. 중요 정보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관과 관련 부처들의 공동 분석·평가를 유도하고, 때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1> 정보관리비서관의 기능



나. 정부부처에 ‘정보관(CIO)’ 배치

국정원은 물론이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경찰 등에는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다. 이들 부서의 책임자들을 ‘정보관(CIO)’에 겸직시켜 부처 간 정보협력과 대민정보지원 업무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CIO의 역할로 각 부처 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부처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정원 혹은 청와대 정보관리 비서관과 연계해 국가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나아가 대민정보협력의 연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부기구로 ‘공개정보센터(OSC)’ 설치

미국은 2005년 11월 국가정보장(DNI) 산하에 공개정보센터를 설치해 160개국 80개 언어의 공개정보를 수집·분석해 정부기관과 민간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⁶¹⁹⁾ 우리도 국가기구로 공개정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민·관에 정보 서비스를 한다면 정보공동체 전체로 볼 때 비용과 노력 절감이 예상된다.

공개정보센터를 둔다면 인터넷 정보를 전문가로서 검색,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특수언어 전공자를 채용하여 언어의 장벽으로 여타 부처나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OSC에서 자원 확보, 투자 및 판로 개척 등 경제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나 효용면에서 볼 때 이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보 등 정보수요는 있으나 가치있는 정보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OSINT는 1차로 정부기관부터 공급하여 효용성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619) 미국에서는 탈냉전과 함께 OSINT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990년대 초부터 미 의회 등에서 정보공동체 내에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는 제한이 있었으나, 1992년 DCI 산하에 정보공동체 ‘공개출처정보담당처(Community Open Source Program Office)’를 설립하였으나 활동이 미미하였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다시 OSINT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WMD 진상조사위원회가 2005년 3월 CIA에 OSC 설치를 제안하여 2005년 11월에 DNI 산하에 OSC가 설립되었다. 전용, “정보화시대의 국가정보: 공개출처정보(OSINT) 활용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여름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년 창간호), pp. 161~162.

라. ‘북한자료센터’를 ‘북한·통일자료센터’로 확충

통일부는 북한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북한자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 자료센터는 북한·통일 관련 자료 수집·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탈북자 등을 활용한 북한실상설명회, 주기적인 북한영화상영,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주요 임무로 한다. 소장 도서로서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북한 교과서 등 북한 간행 도서와 북한 영화, 조선가요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했다. 로동신문, 경제연구 등 북한이 발간하는 특수 정기간행물, 인민일보 등 일반 정기간행물, 남북교역 사례집 등 통일부 발간물, 통일문제 및 대북 관련 세미나 자료, 독일통일 관련 자료 등 비교적 방대한 자료를 비치하였고, 북한 관련 e-book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웹 접근성도 구현했다.⁶²⁰⁾

그러나 북한의 출판물로 수집을 제한하지 않고 국내에 알려진 북한 내부 자료에 대한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국내언론이 입수 사실을 보도한 북한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내부 자료 ‘법투쟁 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의 경우,⁶²¹⁾ 일반인이 언론사에 복사본 제공을 요청하기란 어렵다. 북한자료센터에서 언론 등에 북한 자료가 거론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수, 몇 건의 복사본을 비치해 놓으면 일반인들의 북한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 기초 자료, 통일연구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료 못지않게 남북한 비교 통계 자료, 각종 남북 통합프로그램 연구 자료, 통일교육 자료, 통일·외교 관련 자료 등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통일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명칭도 상응하게 북한자료센터보다는 북한·통일자료센터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센터설치도 국립도서관

620)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15> (검색일 2011.6.29).

621) 『국민일보』, 2011년 6월 22일.

내 서울센터에서 나아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 도시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앞으로의 통일연구의 외연 확대에 대비하고 통일교육을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통일자료센터에 가면 공개된 북한 자료와 통일 관련 자료는 전부 구비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더하여 명실공이 최고·최대의 자료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전문도서관’ 설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자료센터를 북한전문도서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용정보로서는 가치가 작으나 사료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은 당장 관심 부족으로 유실되기가 싫다. 우선 각급 기관에 흩어진 남북관계 및 북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류하여 보관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우상화물, 무장공비 침투 도발 장비 등 문서가 아닌 연관된 물품들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비치해 놓는다면 통일교육은 물론 장차 한국 현대사의 ‘북한 편’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내부분진, 법령, 지도부 지시록 등 일정 기간이 지나 보안에 큰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비치해 놓고 사전에 허가를 얻은 연구자들에게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도 있다. 남북통일 후에는 북한전문도서관을 북한사료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 국가정보기관에 ‘북한정보종합센터’ 설치

정보공동체는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정보기관들의 유사기능에 대한 횡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정보력의 통합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사건 이후 정보공동체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보다 ‘통합과 공조(Integration and Collaboration)’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보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성공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논의는 정권 안보적 일탈

행위와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한국에서의 정보공동체 구현 문제는 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많은 장애가 예상되며, 정치·사회적 논란의 소지를 내포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보문화의 변화, 법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정보예산의 뒷받침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일시에 정보공동체를 구성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갖는 부문 정보기관의 기능과 예산에 관한 조정·통제권한을 활용하여 공통점이 많고 연계가 쉬운 기능부터 정보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⁶²²⁾ 우선 사이버 보안, 대테러, 산업기밀보호, 대북정보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가 가능하다. 국정원은 이미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의 효율적 수집·전파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북한정보는 제3자가 작성한 정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형태지만, 국가정보기구 내의 ‘북한정보종합센터’가 공급하는 북한정보는 정보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분석한 정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에서 학계의 북한전문가를 통해 연구활동에 필요하나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각 분야의 북한 기초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정리, 공급한다면 북한연구 및 통일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분야별 북한 기본정보 외에, 보안성이 크지 않은 현안정보, 북한 내부 문건 자료, 주기적인 정세평가 자료의 지원이 이어지면 정보혼선 및 정세외곽을 방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심층 연구가 가능해진다. 보안상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북한 정보종합센터로의 접근 권한을 정부부처에 우선 부여했다가 점차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민간 연구기관은 개별적으로 신원 조회 등 보안성을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2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 등이며, 조정 업무의 범위는 주로 정보수집, 정보조사·분석, 통신보안, 신원조사업무,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들이다.

사. 정부 정보취급부서에 ‘One-Call 서비스 제도’ 도입

정보공급자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정보수요자의 개별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급해주는 One-Call 서비스 제도 도입⁶²³⁾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거론한 각 부처의 정보관, 공개정보센터, 북한정보종합센터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One-Call 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정보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도 지원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정보수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목표를 추가할 수 있고, 정세 변화에 따라 정보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집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민간 부문의 정보소비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정보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배포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순환 과정에서 상호소통의 증대는 정보의 경쟁력과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첫째, 생산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에 충실하고 기본 방향을 유지하지만, 시기별 사안에 따라 신속적으로 정보 우선순위를 조정해 대응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분석에 투입될 수 있는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기별 사안 발생에 따라 세분된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선정해 나가는 것은 최근 정보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정보 역량이라 할 수 있다.

623) 국정원은 2006년 6월 기업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양방향으로 수렴해 작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 One Call 서비스 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국정원에서 지원중인 ‘일간 해외경제정보’를 열람하는 300여 개의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원사 이용 사이트에 ‘알려주세요’ 코너를 신설하고, 이 코너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생산 지원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일경제, 2006년 6월 7일』

둘째,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향후 동향을 예측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북한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세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의 지표화 또는 지수화를 통해 북한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정보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증합심조’의 운용이 필요하다. 정보분석에 따른 신뢰성,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통합정보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정보보고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보기관 분석관들로 구성된 ‘검증합심조’ 등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탈북자 관련 조사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과 관계부서에서 그 정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심문조’를 구성하여 수집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따라서 ‘합동심문조’의 기능을 정보분석단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정보 정치화 방지 및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정치화 방지를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소위 국회 정보위 산하에 ‘민간정보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정보윤리위원회’에서는 정보 정치화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 외국의 상업위성을 통해 북한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성공과 실패평가에 대한 ‘배심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비록 국회 정보위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실패뿐 아니라 정보성공 사례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비민주적 측면의 개선 등 ‘배심원제도’를 원용한 정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민간 부문

가. 민간 부문의 ‘정보공유 네트워크NKpedia(가칭)’ 구축

북한정보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거나 상호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정보공동체는 공동연구의 활성화, 연구교류의 확대 등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전개했으나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보공유제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NKpedia’를 민간 부문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Web 2.0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다수 연구자들 혹은 북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정보의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더 개선된 내용을 첨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정보의 오류가 수정되고, 더 많은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나. 국내 입국 ‘탈북자 구술정보 통합아카이브’ 설치

여러 민간 부문에 산재한 북한 1차 첩보를 통합 관리하는 북한정보 통합아카이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먼저 여러 연구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탈북자에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 구술정보 통합아카이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며,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매년 생산하기 위해 수시로 탈북자 진술내용을 정리하는데, 북한인권정보에 그치지 않고 북한정보 전반에 대한 구술내용을 정리하여 여러 민간 연구기관에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인력·재정지원 확대와 탈북자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기구에 통합아카이브가 설치되면 정부도 탈북자에 대한 초기 합심정보를 연동해 주는데 소극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 정례적으로 ‘북한정보관리체계평가’ 보고서 생산

민간의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행위 주체들의 북한정보 관련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소위 ‘평가’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혹은 연구자)이 선정되고,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거나 무책임하게 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들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민간 연구기관이나 언론, 기업 등에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어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북한정보관리체계 관련 편람’ 등을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행위 주체들의 북한정보 생산·소비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에 정보관리비서관이 신설된다면 정보비서관이 정례적인 북한정보관리체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연결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다양한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

북한정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북한전문가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의 북한전문가 양성은 주로 학위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부에서 북한 관련 학과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주로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나치게 단기적 비전에 매몰된 결과이며 통일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면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충분한 북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에서 북한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이외에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기업, 북한문제 관련 언론, 정보가 필요한 연구기관 등 다양하

다. 따라서 틀에 짜인 학위 과정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필요를 반영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방법을 비교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등과 같이 기초적인 교과목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부문, 남북경협 의 실제와 직결된 과목, 북한 농업의 현실, 북한의 교통, 건축, 도시설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각론적 접근과 정보공유의 장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마. 지나친 단편정보 의존형 북한연구 탈피

북한정보 분석·연구에서 지나치게 단편정보에 의존할 때 정보수집 경쟁의 발생은 물론 상황을 편향되게 해석할 우려가 있다. 정보기관은 물론 대북정책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학계에서 정보만능주의적 연구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정 정보의 우선적 확보에 공을 들이고, 독점적으로 확보한 특종에 편향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한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정보를 공급하는 측은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상황을 일반적인 현상인 양 확대하여 해석해서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은 역으로 북한상황판단에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다.

북한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북한정보를 활용하되, 통상적인 지혜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⁶²⁴⁾ 통상적 지혜는 핵심적 현상에 대한 정보, 현실에 대한 적실성과 통찰력을 주는 정보, 오랜 경험을 거쳐 검증된 정보에서 나온다. 통상적 지혜를 가지려면 북한의 과거 행태의 패턴, 정책결정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통상적 지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에서도 나온다. 북한을 잘 아는 것

624) 유세희, “통상적 지혜(conventional wisdom)와 대북정책” 『Korea Policy』, Vol. 3 (2010.11.12), pp. 4~8.

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중국이나 여타 개인 독재국가와 비교한 연구, 사회과학의 이론이나 개념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는 통상적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바. 민간 부문 정보협력 제도화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현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별 연구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연구비를 제공하고, 민간에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위탁하며, 각종 세미나도 후원하고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해 각종 협동연구를 진작시키고 있고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연구자가 강연 등으로 북한·통일 정보를 활용할 때 매칭 펀드 방식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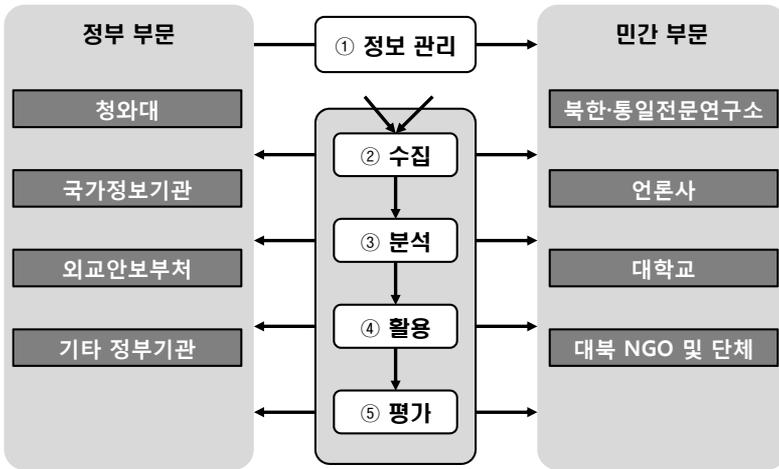
정부가 연구·강의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민간 부문의 정보공유 확대·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이 요망된다. 앞에서 거론한 민간 부문의 정보공유 네트워크NKpedia(가칭) 구축, 국내 입국 탈북자 구술정보 통합아카이브 설치, 정기적인 북한정보관리체계 편람 생산과 다양한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에 우선순위를 부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북한정보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3.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북한정보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와 통상적 지혜·학문을 연계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북한정보공동체는 <그림 7-2>에서처럼 북한정보수요자와 공급자를 정보수집, 분석, 활용, 피드백의 정보순환과정별로 다층적으로 연계(net-working)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국가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 정보기관과 정책부

처, 다시 정책부처와 민간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생산적인 북한 정보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와 민간, 정보와 정책, 정보와 지혜를 통합하는 방법은 제도화에 있다. 상호 선의를 기대한 정보공동체 문화의 정착은 요원하다. 북한정보관여자들 간에 점진적인 통합과 공조로 양질의 핵심정보를 생산해내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보왜곡과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을 차단해내야 한다. <그림 7-2>에서처럼 북한정보공동체를 연계하는데, 전체적인 정보체계관리는 정부 부문이 주도하고, 정보 수집, 분석, 활용은 정부와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하며, 북한정보관리체계와 정보순환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시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2> 북한정보공동체의 다층 Net-working



첫째, 효율적인 북한정보관리체계 구축, 북한정보관리를 위한 청와대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은 정보보안을 생명처럼 간주하는 속성이 있어 정보를 지원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를 나누어 주면서 다시 배

가시키는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국력은 신장될 수 없다. 청와대에 정보관리비서관을 두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필요를 제기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정보비서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면 외교안보수석실의 임무중의 하나로 국가정보관리체계의 활성화를 명문화하여 주기적으로 북한 정보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정보기관과 정부부처의 책임자들도 정보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 나가야 하고, 민간 부문도 국익을 고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둘째,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단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분석·활용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CIO와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실을 창구로 하는 연계점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정보분석 과정에는 국정원과 통일연구원(혹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군사정보는 국방부 정보관리본부와 국방연구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활용단계에는 통일부 정세분석국 혹은 국방부정책실을 각각 통일연구원과 국방연구원과 연계하는 것이다. 민간합동 정세평가회의 확대, 민간 주최 세미나에 대한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정부 부문의 정보판단 혹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아웃소싱의 확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정보 수집단계에는 특성상 수집과정 전반을 협력하는 연계점 구축이 어려울 것이나, 민간 부문에서 수집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국가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정보기관은 민간(언론사 포함)에 수집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평가하여 정보 혼선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분석 과정에서 분석관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의 자질 향상과 비전문가 및 전문가 활용,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 간 접촉 확대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북한 분야 외 타 영역 민·관·학 전문가를 모아 통합 분석프로젝트팀(IPT)을 조직하는 것이다. IPT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실패 요인인 분석 과정에서의 집단적

사고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며, 팀원들이 다양한 증거 틀을 모아 다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에서 팀을 크게 사회과학적 가설 팀 내지 실제 팀과 기술지원 팀으로 분류하고 양 팀이 협동하는 분석체계도 될 수 있다.

셋째,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나 정보공유 활성화 실태에 대한 민간의 평가·감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청와대 정보관리비서관이 민간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부문의 개선을 독려해 나간다면 정보공동체 문화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4. 정보공개제도와 비밀보호제도의 조화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이 1996년 12월 1일 제정되었고, 이후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2004.1.29, 2008.7.3, 2010.2.4)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적용범위) ③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공개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①의 2호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여 통일, 외교·안보부처가 보유한 정보일지라도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이익과 연관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비밀보호제도는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비밀’로 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방위에 중대한 사안들을 비밀로 분류하여 국가군사전략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는 형법, 군형법,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이 있고, 행정부 내부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련 등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안전보장’은 다 같이 헌법상 중요한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서로 상충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비밀보호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상충한 취지로 인해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한 공개·비공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실무자들은 기밀누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비공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다.⁶²⁵⁾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유익한 경우가 많다. 설사 대북정보가 그 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국익보다

625) 홍성표, “국방안보분야 정보공개의 한계와 발전 방향,” 『국가정보연구』, 제8권 2호 겨울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0), pp. 176~177.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초래되는 손실이 더 클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와 비밀보안제도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면서 적정수준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공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공무원들에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정보를 독점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에 미국처럼 CIO제도를 두고 이들이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와 대민정보 서비스 확대를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⁶²⁶⁾ 동시에 정보공개 성과와 성과보수를 연계하여 정보공개 실적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하고 정보공개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보수를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국가비밀은 본질상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유동적이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이익’의 의미가 판례를 통해 개념이 규정되어 가고는 있으나 정부기관에서도 정보공개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모호성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때로는 이미 공지된 사항이거나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보안성을 상실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 분류하여 정작 보호되어야 할 기밀사항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밀의 완화 및 정기적인 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비밀을 설정한 기관이 3년 주기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비밀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비밀등급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1872년 6월 1일

626) 홍성표, “국방안보분야 정보공개의 한계와 발전 방향,” 『국가정보연구』, p. 180.

대통령령으로 국가비밀등급의 자동격하조치를 결정하였다. Top Secret 은 2년 후에 Secret으로, 4년 후에는 Confidential로, 또한 Secret은 2년 후에 Confidential로, 8년 후에는 비밀이 해제되고, Confidential은 6년 후에는 비밀분류가 해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⁶²⁷⁾

다섯째, 북한·통일전문기자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북한전문기자들이 대북전략가, 북한전문분석관을 능가하는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협력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북정보를 올바르게 이끌고, 때로는 국익 관점을 갖고 보도를 자제하며, 정부기관은 이들을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공개와 통제를 위한 ‘민·관합동정보공개자문기구’의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간과 정보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보기관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공생관계로 바꾸기 위해 소위 정보공개와 통제의 범위를 심의·자문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정보공개자문기구’를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이다. 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 기구는 비공개대상 정보보다는 정보공개의 제도와 운영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대상의 범위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자문기구가 새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관합동의 ‘정보공개자문기구’의 중요한 기능은 정보공개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동시에 정보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쌍방향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627) 홍성표, “국방안보분야 정보공개에 한계와 발전 방향,” 『국가정보연구』, p. 183.

5. 국제적 대북정보협력 강화

북한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문제를 원만하게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북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정보를 한국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 실태를 분석·평가할 때 오독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보관리체계에서 국제적 정보협력은 당연하다 하겠다.

국제적 대북정보협력 과제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 기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용대비 효율면에서는 대북기술정보수집은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북한기술정보 획득 열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감시, 감청정보수집기술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 즉 한국의 인간 및 신호정보와 일본의 영상정보가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더욱 정확한 북한정보분석이 가능해진다.

주변 4국과의 북한정보협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하는 방안은 15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간의 연구교류 및 협력 활성화가 요구된다. 군사·안보와 외교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북한문제, 북한정보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트랙을 가동하여 주변 4국이 가동하고 있는 북한정보관리체계와의 교류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주변 4국의 북한정보를 다루는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내 저명한 북한연구자의 인적사항을 자료화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와 더불어 내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 외교·안보부처에 주변 4국과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

력을 보강할 필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와 북한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부부처 내에 보강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정보 수집·분석기관들과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은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북한문제와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능력 있는 인력 풀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업, 종교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국제사회를 통해 수집하는 북한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부처들이 국제사회와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정보를 취득·활용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경쟁적으로 정보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소속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를 통해 취득한 북한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정보 소스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가 권위적인 분석기관에 취합되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축적·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공산권문제연구소 편. 『북한총람 45-68』.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 국가정보포럼 편.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서울: 국방부, 2001.
-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전서 하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2.
- 김명철 저. 윤영무 역. 『김정일의 통일전략』. 서울: 살림터, 2000.
- 김병연·김병로·박명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6.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 1996.
-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서울: 법문사, 1998.
- 돈 오버도퍼.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02.
- Lindsay, James M. and Michael E. O'Hanlon. 김영호 역. 『미국방어론: 제한적 미사일 방어 연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로저 조지·제임스 브루스 역음. 박동철 옮김. 『정보분석의 혁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10.
- _____.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9.
- 민진규. 『국가정보학』. 서울: 배움, 2010.
-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편. 『북한 주요 인물록』.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안보지수(KPSI) 분기별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신성택.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김재두·김상범 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우 정. 『정보경영론』. 서울: 자료원, 2008.

-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패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일본 경제산업성정책평가연구회. 『정책 평가의 현상과 과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목표로』. 동경: 일본경제산업성, 2000.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개정판』. 도쿄: 국제협력출판회, 2004.
-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KIUN 정책연구시리즈 2007-06.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Weiner, Tim. *Legacy of Ashes*. 이정식 역. 『젯더미의 유산』. 서울: Random House, 2007.
- 장익관.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I: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안보정보 관리전략』.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_____.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안보정보 관리전략』.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파주: 서문당, 1999.
- 전현준·허문영·김병로·배진수.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06, 2006.
- 정보사령부 편. 『북한편람』. 정보사령부, 2000.
- 중앙일보사 편. 『월간중앙』. 7월호 서울: 중앙일보사, 2007.
- Zelikow, Philip and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김태현 외 역.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제술연구』. 서울: 모음북스, 2006.
- 최용환. 『북한사회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폴리콥스키. 성종환 역. 『동방특급열차-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중심, 2003.
- 통일부 편. 『북한기관단체별인명집』. 각 년호.
- 한국개발연구원. 『1990~2008년 북한 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한국국가정보학회 편.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서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
-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북한의 산업 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 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서울: 법률출판사, 2011.
- _____. 『국가정보: 법의 지배와 국가 정보』. 서울: 법률출판사, 2010.

- _____.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서울: 법률출판사, 2009.
- 황병덕 외.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Albats, Yevgenia. *KGB, State within a State*. London: I.B. Tauris publishers, 1995.
- Amis, Martin. *Koba the Dread: Laughter and the Twenty Million*. New York: Talk Miramax Books, 2002.
- Andrew, Christopher M. and Vasili Mitrokhin. *The Mitrokhin archive: the KGB in Europe and the West*. New York: Penguin, 2000.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 *The Emergence of Noopolitik: Toward An American Information Strategy*. Pennsylvania: RAND, 1999.
- Berkowitz, Bruce D and Allan E. Goodman.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Blaser, Arther W. *Human Rights in the Third World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George W. Shepherd. Jr. and Ved P. Nanda (eds.). *Human Rights ans Third World Development*. London: Greenwood Press, 1985.
- Boysen, Jacqueline. *Das "Weiße Haus" in Ost-Berlin. Die Ständige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bei der DDR*. Berlin: Ch. Links Verlag, 2010.
- Carpenter, Ted Galen and Douglas Bandow.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Chandler, Andrea. *Institutions of Isolation: Border Controls in the Soviet Union and Its Successor States 1917~1993*.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8.
- Kühn, Detlef. *Das Gesamtdeutsche Institut im Visier der Staatssicherheit.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13*. Berlin, 2011.
- Dzhirkvelov, Ilya. *Secret servant: my life with the KGB and the Soviet élite*. New York: Simon & Schuster, 1989.

- Gerdes, Louise I. (eds.). *Espionage and Intelligence Gathering*. Farmington Hills: Greenhaven Press, 2003.
- Godson, Roy (eds.). *Intelligence Requirements for the 1990s: collection, analysis, counterintelligence and covert ac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9.
- Gordievsky, Oleg. *Next Stop Execution*. London: Macmillan, 1995.
- Hayford, Scott E. *Human Intelligence: America's Achilles*. Maxwell: Air University, 2005.
- Henderson, Robert D'A. and Brassey's (Firm). *Brassey's International Intelligence Yearbook. 2002 Edition*. 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2.
- Herman, Michael T.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Theory and Practice*. London: Frank Cass, 2001.
- Hood, William. *Mole/The True Story of the First Russian Spy to Become an American Counterspy*. Washington, D.C.: Brassey's Inc., 1993.
- Isenberg, David and Ian Davis. *Unraveling the Known Unknowns: Why N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ve Been Found in Iraq. BASIC Special Report 2004. Basic Report*. Washington, D.C.: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2004.
- Jeffery, Inez Cope. *Inside Russia: The Life and Times of Zoya Zarubina*. Austin: Eakin Press, 1999.
- Johnson, Loch K. *Secrete Agencies: U.S. Intelligence in a Hostil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Jones, Ishmael. *The Human Factor: Inside the CIA's Dysfunctional Intelligence Culture*. New York: Encounter Books, 2008.
- Kalugin, Oleg. *Spy Master: my thirty-two years in intelligence and espionage against the west*. New York: Basic Books, 2009.
- Kaufman, Daniel J., Jeffery S. McKittrick and Thomas J. Leney (eds.). *U.S. National Security : A Framework for Analysi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Kent, Sherman.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 _____.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 Kouzmanov, Alexander. *Biological Espionage: Special Operations of the Soviet and Russ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West*. Yorkshire: Greenhill Books, 2006.
- Laqueur, Walter. *A world of secrets: the uses and limits of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1985.
- Li, Vladimir F. *North Korea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 James C.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 Littell, Jonathan. *The Security Orga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 Brief History 1991~2004*. Paris: PSAN Publishing House, 2006.
- Lowenthal, Mark M.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2001.
- _____. *Intelligence: From Secret to Poli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2002.
- _____.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2003.
- _____. 김계동 역.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_____. *The Burdensome Concept of Failure* in A. C. Maurer, M. D. Tunstall and J. M. Keagle (eds.). *Intelligence: Policy and Process*. London: Westview Press, 1985.
-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Second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 Mazarr, Michael J.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5.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3.
- Mitrokhin, Vasil. *KGB Lexicon: The Soviet Intelligence Officer's Handbook*. Oxon: Frank Class, 2002.
- Niksi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February 27, 2001.

-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oul: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2011.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7.
- O'Hanlon, Michael. *Unfinished Business: U.S. Overseas Military Presence in the 21st Century*.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http://www.brookings.edu>>.
- Powell, Bill. *Treason: How a Russian Spy Led an American Journalist to a U.S. Double Agent*. New York: Simon & Schuster, 2002.
- Priest, Dana and William M. Arkin. *Top Secret America: The Rise of the New American Security State*.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2011.
- Roukis, George S., Hugh Conwan and Bruce H. Charnov (eds.). *Global Corporate Intelligence: Opportunities, Technologies, and Threats in the 1990s*. Westport, Conn: Quorum Books, 1990.
- Schechter, Leona and Jerrold Schechter. *Sacred Secrets: How Soviet Intelligence Operations Changed American History*.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002.
- Serio, Joseph D.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 Shepherd Jr, George W. and Ved P. Nanda (eds.). *Human Rights and Third World Development*.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5.
- Shulsky, Abram N.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ed.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002.
- Shulsky, Abram N.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f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Steele, Robert D. *On Intelligence: Spices and Secrecy in an Open World*. Virginia: OSS International Press, 2001.
- Sudoplatov, Pavel., Anatoli Sudoplatov, Leona P. Schechter and Jerrold L. Schechter. *Special Tasks*. New York: Back Bay Books, 1995.
- Suib, Stella. *Inside Russia's SVR: The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New York: Rosen Pub Group, 2002.
- Treverton, Gregory F. *Reshaping National Intelligence for an Age of Information*.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Reshaping National Intelligence for an Age of In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Webster, Frank (eds.).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Weidenfeld, Werner and Karl-Rudolf Korte (eds.).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Campus Verlag, 1996.
- Панин, А., и В. Альт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Эпоха Ким Чен Ира на закате*. Москва: Олма Пресс, 2004.
- Сопряков, *Вадим. Восток-Дело Тонкое*. Москва: Современник, 1999.
-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 北京: 法律出版社, 2010.
- 岡崎久彦. 『戰略的思考とは何か』. 東京: 中公新書, 1987.
- 姜尙中 外 編. 『日朝交渉』. 東京: 岩波書店, 2003.
- 橋本光平.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 東京: PHP, 1999.
- 金森久雄 荒憲治郎 森口親司編. 『경제사전』. 제3판. 유비각, 1998.
- 唐文彰. 姜紅明. 『當代中國國家安全問題』.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大島眞生. 『公安はだれをマークしているか』. 東京: 新潮新書, 2011.
- 大森義夫. 『日本のインテリジェンス機關』. 東京: 文藝春秋, 2005.
- 北岡 元. 『インテリジェンスの歴史』. 東京: 慶應大學出版會, 2006.
- 孫崎 亨. 『情報と外交』. 東京: PHP, 2009.
- 日本 防衛省. 『日本防衛白書』.
-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2006)』. 東京, 2006.
- 田中 均. 『國家と外交』. 講談社, 2005.
- 佐藤 優. 『國家情報戰略』. 東京: 講談社, 2007.
- 佐藤優外. 『インテリジェンス武器なき戦争』. 東京: 幻冬舎, 2007.
- 朱聽昌.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北京: 時事出版社, 2002.
- 中西輝政. 『インテリジェンスの20世紀』. 東京: 千倉書房, 2007.
- 志方俊之. 『最新極東有事』. 東京: PHP, 1999.
- 太田 文雄. 『情報と國家戰略』. 東京: 芙蓉書房, 2005.
- 惠谷治. 『世界テロ戦争』. 東京: 小學館, 2002.
- 黒井文太郎. 『日本の情報機關』. 東京: 講談社, 2007.

2. 논문

- 강승규.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1988~2007 event data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고재홍. “김정일의 북한군 주요 승진인사분석.” 『정책연구』. 통권 154호 가을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김건동. “북한의 핵실험과 정보실패: 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광린. “러시아의 정보기국의 현황과 활동: FSB와 SVR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4권 1호(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0.
- 김상욱.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우리나라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이슈와 논점』. 제14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9.9.
- 김수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 평통자문회의 제9차 국제위원회 발제논문, 2007.
- 김영환. “북한, 북한민주화, 통일에 관한 몇가지 쟁점.” 『시대정신』. 통권 12호.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0.
- 김종대. “천안함사태는 총체적 ‘정보의 실패’:정보부서 이원화로 수집판단기능 심각하게 약화.” 『weekly경향』. 통권 878호. 서울: 경향신문사, 2010.
- 김창석. “9·11이후 미국의 정보실패 사례 비교 분석.”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태호.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행정법연구』. 제8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0.
- _____. “중국의 정보·보안체계.”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 김흥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과제 2009-08(외교안보연구원), 2010.6.
- 민경식.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와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5권 1호(국제지역학회), 2011.
- Mikheev, Vasily V.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지역사회』. 겨울호(한국지역사회학회), 2004.
- 박수성. “주요일간지 북한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운용체계 비교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정란. “백두산화산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 영향. 대처방안.”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11.6.23.

-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제36집 1호(북한연구소), 2011.
- 박정민.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북한연구학회), 2010.
- 서동주.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 『중소연구』. 제31권 2호 여름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 서동주·고재남·엄구호 역음.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의 역할.”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손기웅 외.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K-Freikauf: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상세내용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해결 시사점.” 통일부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8.
- 손태규. “군사정보의 공개 및 보도제한의 적법성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2호(한국언론학회), 2007.
- 신범식. “유라시아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4월호(한국언론학회), 2003.
- 신상진.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통일연구원), 2008.6.
- _____.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제1호(한국개발연구원), 2011.1.
- 신의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간첩죄 규정정비방안.” 『국제문제연구』. 제10권 4월호 통권 40호 겨울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 염돈재. “한국에서의 국가정보연구: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 _____.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과 국가정보의 과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 2011 창설 50주년 기념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11.5.26.
- 오양열. “북한의 한류 현상과 향후 전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0.
- 오인제. “소련 붕괴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 내용 고찰.” 『국방연구』. 제48권 1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6.
- 유세희. “통상적 지혜(conventional wisdom)와 대북정책.” 『Korea Policy』. Vol. 3, 2010.11.12.

- 이교덕. “북한군 군사규율 문란실태 분석.” 『정책연구』. 통권 145호 여름호(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5.
- 이주철. “북한의 국가의 역사적 변천: 정체제도적 측면에서 본 시기구분.”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이지수. “냉전 후 러시아 정치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 _____. “아국민의 현지 활동을 제약하는 러시아 관계법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09.
- 이철성. “군사전문정보센타의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이호령. “미국 비확산 정책: 잃어버린 기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전영선. “한반도 평화지수 (KOPT): 평가와 개선.” 제186차 아태정기학술포럼 발표자료, 2006.10.20.
- 전 응. “9·11테러. 이라크 전쟁과 정보실패.” 『국가전략』. 제11권 4호 겨울호(세종연구소), 2005.
- _____. “정보화시대의 국가정보: 공개출처정보(OSINT) 활용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여름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 정준표. “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Judt, Tony. “Post 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조행복 역. 『포스트 워 1945~2005』. 서울: 플레닛, 2005.
- 최대석 외. “북한정치체제 변화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정보연구』. 제3권 1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10.
- 한기범. “북한의 미래와 국가정보원의 역할.” 『정보환경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2011.5.26.
- 현대경제연구원. “HRI 한반도평화지수: 남북 관계 기대지수 상승.” 『HRI연구보고서』. 통권 368호 09-39(현대경제연구원), 2009.
- 홍성표. “국방안보분야 정보공개와 발전방향.” 『국가정보연구』. 제3권 2호 겨울호(한국국가정보학회), 2010.
- 홍완석.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5.

- _____. “푸틴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분석과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한국정치학회), 2002.
- 황일도. “서해 NLL 인근 북한군 기지 위성사진.” 『신동아』. 통권 605호 2월호(동아일보), 2010.
- 황장엽. “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한 기본 논점.” 황장엽 발표문, 2001.7.
- AFT. “Thailand detains plane with weapons cache from N.Korea.”
<<http://www.google.com>>.
- Albright, David and Khidhir Hamza. “Iraq’s Reconstitution of Its Unclear Weapons Program.” *Arms Control Today*. Vol. 28, October 1998.
- Albright, David and Mark Hibbs. “Iraq and the Bomb: Were They Even Clos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991.
- Albright, David and Robert Kelly. “Has Iraq Come Clean At Last?” in “Massive Program. Meager Resul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ovember 1995.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October 2002. <<https://www.cia.gov>>.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valuation and Aid Effectiveness No. 6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OECD, August 29, 2002.
-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omestic Stresses on the Soviet System.”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ovember 1985.
- Franchetti, Mark and Sarah Baxter. “Putin spy war on the west.” *The Sunday Times*, May 20, 2007.
- Gardiner, Nile. “The UNDP North Korea Scandal: How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Respond.” *Heritage Foundation WebMemo*, January 23, 2007.
- Gregg, Donald P. “A Long Road to Pyongyang.” *The Korean Society Quarterly*, Vol. 3, No. 1, 2002. <<http://www.koreasociety.org>>.
- Ikenberry, John G. and Jitsuo Tsuchiyama. “Between Balance of Power and Community: The Futur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2, Issue. 1, 2002.
- Iraq Survey Group Final Report “About Saddam Hussein’s Weapons of Mass

- Destruction(WMD) Program.” September 2004. <<http://www.globalsecurity.org>>.
- Joffe, Alexander H. “Dismantling Intelligence Agencies.” *Crime, Law & Social Change*, 1999.
- Johnson, Lock K.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U.S. Intelligenc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Spring 2006.
- Kang, David C. “The Cause of Strife in the U.S.-ROK Alliance.”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 No. 2, Summer 2006.
- Kerr, Richard. *et al.* “Issues for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Collection and Analysis on Iraq.” *The Center of Intelligence*. Vol. 49, No. 3, April 15, 2007. <<http://www.cia.gov>>.
- Kim, Roy. “US Intelligence Flaws on North Korea.” 2010. <<http://www.duke.edu>>.
- Kirk, Donald. “Rift Seen in S. Korean and US’s Intelligence Sharing.” *Christian Science Monitor Online*, March 11, 2004. <<http://www.gol.com>>.
- Kirk, Jeremy. “Intel Experts: N. Korea’s Hard Target.” *Global Security Online Service*, March 21, 2004. <<http://www.globalsecurity.org>>.
- KNC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4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Beijing China, May 28~31, 2005.
- Kotch, John Barry.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2, Summer 2006.
- Lahneman, William J. “Is a Revolution in Intelligence Affairs Occur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pring 2007.
- Littell, Jonathan. “The Security Orga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 Brief History 1991~2004.” *Psan Publishing House*, 2006.
- Manyin, Mark E. “Japan-North Korea Relations : Selecte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6, 2003.
- Maxon, Philip. “Official Estimates of the Taepodong-2.” 2011. <<http://38north.org>>.
- Mercado, Stephen C. “Sailing the Sea of OSINT in the Information Age.” *Studies in Intelligence*. Vol. 48, No. 3, 2004. <<http://www.cia.gov>>.
- Morrow, Daniel. “Aid to Transition Economies: Lessons of Experience.”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 Nash, Arnold W. and Naval Postgraduate School (U.S.). "Intelligence Reform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2005. <<http://www.dtic.mil>>.
- Neugebauer, Gero. "Die DDR-Forschung vor und nach der Wende 1989/90." in Der Deutsche Bundestag (eds.).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13.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Bd. IV/2 Baden-Baden: Nomos Verlag & Suhrkamp Verlag, 1999.
- Nix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February 27, 2001.
- Nuclear Threat Initiative. "North Korea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Program Overview: History and Status." Nuclear Threat Initiative Online, 2011. <<http://www.nti.org>>.
-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Organization Chart." 2011. <<http://www.dni.gov>>.
- OECD Evaluation and Aid Effectiveness.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No. 6, 2002.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ews Release" No. 21~10, October 28, 2010. <<http://www.dni.gov>>.
- Oros, Andrew L. "Japan's Growing Intelligence Cap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pring 2002.
- Ransom, Harry Howe. "The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in Loch K. Johnson and James J. Wirtz (eds.). *Strategic Intelligence: Windows Into a Secret World: An Anthology*. Roxbury Publishing, 2004.
- Romberg, Alan 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Quixotic Quest or Source of Stabi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0, No. 3, Fall 2006.
- Shulsky, Abram N. and Jennifer Sims. "What Is Intelligence?" *Working Group on Intelligence Reform*. Consortium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1994.
- Steele, Robert D. "The Importance of Open Source Intelligence to the Military." in Loch K. Johnson and James J. Wirtz (eds.). *Strategic Intelligence: Windows Into a Secret World: An Anthology*. Roxbury Publishing, 2004.

- Talor, Mi Ae and Mark E. Many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s Activities in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2011.
- Taylor, Stan A. and David Goldman. "Intelligence Reform: Will More Agencies. Money and Personnel Help?"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September 2004.
- The Assessment the British Government.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ptember 24, 2002.
- The United State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http://www.undp.org>>.
- The White House. "A Decade of Deception and Defiance: Saddam Hussein's Defiance of the United Nations." September 2002.
- The World Bank 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OED). "Economies in Transition: An OED Evaluation of World Bank Assist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http://www.oecd.org>>.
- Thomson, Keith. "Intelligence Test." DemocracyJournal.Org, Winter 2009. <<http://www.democracyjournal.org>>.
- _____. "U.S. Intelligence -- or the Lack Thereof -- on North Korea." *Huff Post World*, May 29, 2009.
- _____. "U.S. Intelligence -- or the Lack Thereof -- on North Korea." *Huff Post World*, August 10, 2011. <<http://www.huffingtonpost.com>>.
- Twomey, Christopher P. "Missing Strategic Opportunity in U.S. China Policy Since 9/11: Grasping Tactical Success." *Asian Survey*. Vol. 47, No. 4, July/August 2007.
- U.S. Congress. "House Reporot 108-796-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December 2004. <<http://www.gpoaccess.gov>>.
-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Postwar Findings about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Terrorism and How They Compare with Prewar Assessments.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September 8, 2006. <<http://www.fas.org>>.
- UNDP. "UNDP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2004.
- UNDP. "Chapter 2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http://hdr.undp.org>>.

United State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Wentker, Hermann. “Die DDR in den Augen des BND (1985~1990). Ein Interview mit Dr. Hans-Georg Wiec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Vol. 56, No. 2. Oldenburg, 2008.

Wikipedia.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2011. <<http://en.wikipedia.org>>.

Woods, Kenin, James Lacey and Williamson Murray. “Saddam’s Delusions: The View From the Inside.” *Foreign Affairs*. Vol. 85, No. 3, May/June 2006.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伙伴關係戰略論析.” 『國際問題研究』. 2011年 第1期. 2011.1.

藤井 久. “日本の對北朝鮮情報収集能力を暴く.” 『軍事研究』. 2005년 1월.

毛峰. “邊城生死劫愛恨情仇.” 『亞洲週刊』. 2003.1.27.~2003.2.2.

小谷 賢. “日本の情報體制はいま英國型にむけて舵をきった.” 『諸君』. 2008년 5월.

小牧輝夫. “日朝交渉に賭ける北朝鮮の意圖.” 姜尙中 外 編. 『日朝交渉』. 東京: 岩波書店, 2003.

小此木 政夫. “北朝鮮問題の新段階と日本外交.” 『國際問題』. 2003.5.

楊潔篪. “當前國際格局的演變和我國外交工作.” 『國際問題研究』. 2011年 第1期.

王帆. “美國的東亞戰略與對華戰略.” 『外交評論』. 2011年 第6期. 2011.6.

中華人民共和國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 『新華社』. 2011.3.31.

胡明遠. “朝鮮處理國際問題行爲方式及中國的對策.” 『理論觀察』. 2010年 第4期. 2010.12.

黃鳳志 呂平. “中國東北亞地緣政治安全探析.” 『現代國際關係』. 2011年 第6期. 2011.6.

3. 기타자료

인터넷

-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blog.daum.net>>.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http://www.jcs.mil.kr>>.
몬트레이국제전략연구소 <<http://www.cns.mii.edu>>.
미국과학자연맹 <<http://www.fas.org>>.
북조선(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http://www.rachi.go.jp/kr>>.
북한경제포털 <<http://kosis.kr/bukhan>>.
북한인권위원회 <<http://www.hrnk.org>>.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북한한류열풍실태 <<http://www.youtube.com>>.
열린북한방송 <<http://www.nkradio.org>>.
유엔난민기구 <<http://www.unhcr.or.kr>>.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www.bemail.chosun.com>>.
좋은벗들 <<http://www.goodfriends.or.kr>>.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http://www.cnkr.org>>.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합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피랍·탈북 인권연대 <<http://www.chnk21.o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리교류협회 <<http://www.koruss.org>>.
행정안전부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 Agentura <<http://www.agentura.ru>>.
BEKKOAME//INTERNET <<http://www.bekkoame.ne.jp>>.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http://www.csw.org.uk>>.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scrf.gov.ru>>.
Freedom for North Korea <<http://northkoreafreedom.wetpaint.com>>.

- Human Right Watch <<http://www.hrw.org>>.
- Iraq's Nuclear Weapon Program <<http://www.iraqwatch.org>>.
- Intelligence and Analysis Service <<http://www.mofa.go.jp>>.
- Intelligence Governance <<http://intelligence.gov>>.
- Jubilee Campaign <<http://www.jubileecampaign.org>>.
- LINK PRESENTS THE RELIANCE <<http://www.linkglobal.org>>.
- Militaryphotos <<http://www.militaryphotos.net>>.
- NK DB Center <<http://www.nkdb.org>>.
- The Intelligence Summit <<http://www.intelligencesummit.org>>.
-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ttp://www.uscirf.gov>>.
- Voice of America <<http://www.voanews.com>>.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 <<http://www.fsb.ru/fsb>>.
- <<http://svr.gov.ru>>.
- <<http://www.nids.go.jp>>.
- <<http://www.opengirok.or.kr>>.
- <<http://www.washprofile.org>>.
- 北國刑警. 中國國家安全部揭密 <<http://bbs.tiexue.net>>.
- 中國神秘的情報部門--解放軍總參2部.3部和國安部 <<http://www.douban.note>>.
- 李開盛. 一分爲二看朝鮮 <<http://www.chinaelections.org>>.
- 爲什麼中國不能放棄對朝鮮的支持 <<http://www.zaobao.com>>.
-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military.people.com.cn>>.
- 胡锦涛同金正日举行会谈 <<http://www.idcpc.org.cn>>.
- 內閣情報調査室 <<http://www.cas.go.jp>>.
- 單仁平. 讓間諜罪去神秘化 <<http://www.huanqiu.com>>.
- 國際情報統括官組織 <<http://www.mofa.go.jp>>.
- Морск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http://www.scrf.gov.ru>>.
-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http://www.scrf.gov.ru>>.

Доктри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scrf.gov.ru>>.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scrf.gov.ru>>.

신문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
『매일경제』 <<http://news.mk.co.kr>>.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월간중앙』 <<http://magazine.joins.com>>.
『요미우리신문』 <<http://www.yomiuri.co.jp>>.
『자유아시아방송(RFA)』 <<http://www.rfa.org>>.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news.hankcoki.com>>.
『한겨레21』 <<http://h21.hani.co.kr>>.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m.com>>.
『KBS news』 <<http://weather.kbs.co.kr>>.
『NK조선』 <<http://www.nkchosun.com>>.
『The Sunday Times』 <<http://www.thesundaytimes.co.uk>>.
『YTN』 <<http://www.ytn.co.kr>>.
『人民日報』 <<http://www.people.com.cn>>.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讀賣新聞』.

인터뷰

국방연구원 송화섭 자문.

런던 인터뷰, 2011.10.20.

박정진. ‘일본의 북한관련 정보관리 및 현황’ 관련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1.9.

베이징 인터뷰.

연구자 A와의 인터뷰, 2011.8.

연합뉴스 기자 ○○과의 인터뷰, 2011.8.3.

전직 중국외교관과의 대화.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문에 대한 답변, 2010.10.12.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자와의 인터뷰, 2011.7.22.

한국정부 관리와의 인터뷰.

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1.8.

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1.9.

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1.8.

신○○.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조사’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0.5.27.

양○○.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0.7.20.

이○○.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1.6.14.

정○○.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1.6.20.

홍○○.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1.6.15.

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미국 민주주의 재단.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 서울, 2010.2.4.~5.

김화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주최 제4회 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9.29.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지역평화와 개발협력』. 중국 북경, 2005.5.28.~31.

박경수. “북한의 인구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42회 정책포럼*, 2010.3.15.

박정란. “남북한 통일담론에 대한 진단과 통일논의의 수렴방안: 한국의 통일담론 정권별 특징을 중심으로.” *제29회 한반도평화연구원(KPI) 평화포럼 발표문*, 2011.9.28.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북한관 한류열풍: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였는가.” *학술세미나 발표집*, 2010.12.10.

우리민족서로돕기·경기도·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아시아재단 공동주최.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 개발협력』. *자료집 인사말씀*, 2010.11.15.

정베드로.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탈북자 강제송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발제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1.10.12.

최경희. “새터민 의식조사로 본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세미나(비공개)*, 2011.7.27.

Aid, Matthew and Jeffrey T. Richelson. “U.S. Intelligence and China: Collection, Analysis and Covert Action.” 2005. Available <<http://nsarchive.chadwyck.com>>.

Alam, Junaid. “No Intelligence Failure in Iraq. But Political Failure in America.” *ZNET/Terror War*, April 2005. <<http://www.zcommunications.org>>.

Bernard, Jerome. “Bush Tells CIA to Get More Spies.” *AFP Online News Service*. November 27, 2004. <<http://www.yahoo.com>>.

Broad, William J. *et al.* “North Korea Intelligence Split U.S. Agencies.” *New York Times*, 2005. <<http://www.nytimes.com>>.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Lies. <<http://www.globalresearch.ca>>, February 18, 2004.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raq’s Mas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October 2002. <<https://www.cia.gov>>.

Clapper, James R. “Statement for the Record on the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11. <<http://www.dni.gov>>.

국정감사 통일부 시정자료, 2010.
 기상청 국정감사 시정자료, 2010.

일본 방위백서, 2006년판.

2010년 북한기상특성 보고서, 2011.2.

毛峰. “邊城生死劫愛恨情仇.” 『亞洲週刊』. 2003.1.27.~2003.2.2.

KCNA(Korean Central News Agency), 1998.11.9.

SAPIO, 1993.10.14.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항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0,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 (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와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임,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a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